

경쟁의 힘

Part 2

원자의 돌(임수민)의 개정 교육과정으로 재해석한
2016 대수능 '생활과 윤리' 분석서

기출문제로 알아보는 올바른 수능 생원 학습법

18 문명의 충돌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읊은 것은?

문명 간의 갈등은 상이한 문명에 속한 인종·국종이나 집단들 사이의 문화적 충돌에서 발생됩니다. 각 문화적 핵심국이 보편 진리성을 지니는 과정에서 문명 간의 문화적인 문명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명 간의 갈등은 소통 단절에서 기인합니다. 세계의 각 동성문 보신 정국의 대립을 다문화간의 가치 부합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정지의 부각에 대하여는 사회적, 경제적 힘들로 인하여 문명 간 가치들의 교차점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갑 : 핵심국들이 단종선 분쟁 역제를 위해 타협해서는 안 된다.
 갑 : 문명과 문화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동일성을 모색해야 한다.
 을 : 국제 교류의 확대를 통해 문명 간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
 을 : 소 : 세계는 개별 자연을 넘어 단일 자연의 세계로 추구해야 한다.

제시문 분석의 사실적 이해 / 공정한 해설

(갑)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같은 문명의 충돌을 주장하는 현상이다. 제시문은 (1) 문명 간의 갈등이 상이한 문명 간의 단종선 분쟁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2) 분쟁국을 차원하는 것은 문명 간의 분쟁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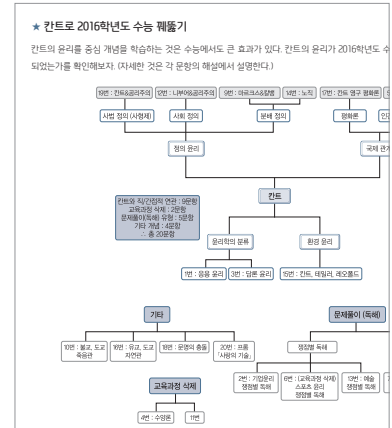
(갑) 제시문의 공정한 해설
 현상적인 (1) 문명들이 서로 갈등하는 현상을 서로 다른 문명국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보인다. (2) 핵심국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비핵심국을 지원해줄 경우에 문명 간의 충돌이 악화될 것이라고 본다.

(을)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문은 문명의 공존을 주장하는 틀러이다. 제시문은 (1) 문명 갈등의 원인이 문명 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일어난다고 본다. (2) 세계의 역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 (3)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힘에 의해서 문명 간의 가치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을) 제시문의 공정한 해설
 틀러는 (1) 문명의 갈등은 단순히 문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고 보인다. 오히려 문명 간의 소통 부족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문명 간의 낯선 차이점들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서는 서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으므로 문명이 서로 소통하고 동질감을 인식하여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답 해설

㉠ 제시문에서 틀러는 사회,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국제 교류가 각 문명이 공유하는 가치를 늘려 상호 이해(교집합 확대)를 이룰 수



04 수능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의 올바른 학습법

06 기출문제로 알아보는 올바른 수능 생원 학습법

- 10번 : 삶과 죽음의 윤리
- 18번 : 문명의 충돌
- 20번 : 성과 사랑의 윤리 (에리히 프롬)
- 16번 : 유불도 자연관

28 칼럼 1 임마누엘 칸트

34 고난도 주제, 제대로 접근하기

사형제 문항에 대한 올바른 접근
 인간성 정식 중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우에 대한 올바른 설명
 칸트로 생활과 윤리 꿰뚫기

42 칸트로 재해석한 2016학년도 수능

19번 : 사형제 칸트 vs 공리주의
 쉬어가기 : 사형제 쟁점, in the philosopher's cafe

52 칼럼 2 분배 정의 : 정의란 무엇인가?

동간지의동 Part 2

4월 22일 사형제 폐지 in the philosopher's cafe
[동상인물]



칸트 : 예의 따위는 없는
원칙주의자, 의무론자
루소 : 바람둥이, 자신들을
굴러 죽인 무책임한 남자
베카리아 : 베카리아는 사형,
살아 싫어~
벤담 : 쾌다 쾌다, 아이 좋아~
살아 싫어~

오늘도 평한 친구 칸트와 루소 그리고 베카리아는 현자의 돌 키레에 앉아서 철학 토론을 하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의 생명권"

확실하게 보여준다. 다음의 9월 모의평가 18번을 살펴보자.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8번

18. 다음 사항 사상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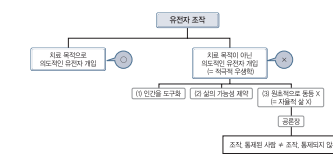
세계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란 모든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그 앞
것은 용어의 중복일 따름이다.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할 이상이 명명하는 보편적
의무에 시료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공화국으로 전
결성하고, 호세적인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를 완성해야 한다.

- ① 자유 국가들 간의 안방 단계에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②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후보 조건을 규정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 ③ 도덕적 입법의 한계를 세계 정부의 강제로 보완해야 한다.
- ④ 세계 평화의 정착을 위해 개별 국가의 주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 ⑤ 세계 평화는 실재로는 불가능하나 정치적 의무로 설정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 당시 이 문항은 정답률 32%로, 오답률 TOP3의 문항이었다. 그 이유는 제시문과 선지가 대응
평가원에서 잘 존재되지 않는 개념으로서 학생들이 이 개념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능
정답의 근거가 충분히 있었고, 9월 평가원 이후 학생들 이 칸트의 영구 평화론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 제시문 핵심 : 현자의 돌 평
제시문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다루고 있다. 칸트는 국제 관계 단편의 이상주의의 토대가 된 학자로, 인
합용하여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영구 평화론을 알고 있지 않다면, 해당 제시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조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시문 구조화



정답 핵심

② 제시문에서는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선지는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를 "위험" 것을 주장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오답 핵심

①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적극적 우생학이 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합니다."라고 말
있으므로 적절함 선지이다.
③ 제시문에 따르면 의도적인 유전자 개입은 인간을 도구화하여 삶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그 결과 공론장에 참여하는 잠재적 담론자로
"유전자 조작 인간"의 행동은 제한된 것이다.
④ 적극적 우생학은 치료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을 말한다. 이는 인간을 특정 목적(지능 강화 등)을 수행하도록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는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이다. 인간을 도구화한다는 것으로부터 인간관계로 기계적 인간관계로 왜곡시킨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
이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이다. 인간을 도구화한다는 것으로부터 인간관계로 기계적 인간관계로 왜곡시킨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

58

칸트로 재해석한 2016학년도 수능

- 12번 : 사회 정의의 벤담(공리주의) vs 니치어
- 9번 : 마르크스 vs 칼뱅 : 마르크스 : 칸트의 인간성 정식적 해석 수단 & 목적 칼럼, 칼뱅 칼럼

66

칼럼 3 칼뱅 Master

68

칸트로 재해석한 2016학년도 수능

- 17번 : 칸트 영구 평화론 해설과 심화 개념 칼럼
- 5번 : 해외 원조 : 싱어 vs 롤스
- 14번 : 분배 정의 : 노직

90

고난도 주제, 제대로 접근하기

- 분배 정의의 윤리 정리
- 분배 : 분배의 전체 과정, '분배의 정의'에서의 분배

92

개정 교육과정으로 재해석한 2016학년도 수능

- 15번 : 환경 윤리
- 1번 : 윤리학의 분류
- 3번 :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114

칼럼 4 칸트 의무론



수능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의 올바른 학습법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생활과 윤리 선택자분들께
현자의 돌 이수민 올림

개념학습, 문제풀이, 기출학습에 대하여...

기존에 생활과 윤리 개념 공부는 기출 선지들을 키워드로 만들어 암기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방식은 개념을 단편적으로 공부하게 만들어 각 단원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를 풀 때에도 제시문의 키워드에만 집중해서 '아 이 제시문은 칸트다.' '벤담이다.'라며 사상가를 찾는데 급급했죠.

하지만 수능은 단순 암기가 아닌 사고력과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암기하는 방식의 공부를 한 사람들은 수능에서 새로운 표현이나 심화된 개념이 나올 때 그것을 해결하기 어려워해요. 개념을 단편적으로만 암기하고, 응용하는 연습에 소홀했기 때문이죠.

우린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개념들을 서로 연결하고 비교하면서 유기적으로 익혀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학습한 개념을 문제에 응용하는 연습을 해야 하죠. 그렇게 공부하면 올해 수능에 새로 나올 표현들, 심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응용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혼자 각 개념들을 비교, 분석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어려워요. 인터넷 강의나 시중 교재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어떤 개념이나 해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료를 뒤져봐야만 하죠. QnA 답변을 며칠 동안 기다리기도 하구요.

Part2에서는 수능 문제를 같이 풀고, 관련된 개념을 기본부터 심화까지 유기적으로 정리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더 나아가 개정된 교육과정을 어떻게 공부할지,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같이 나눠볼 거예요.

이 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 ① 생활과 윤리의 교과서 개념을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
- ② 생활과 윤리 전반적인 개념을 하나의 연결고리¹⁾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설명하는 것.
- ③ 기출문제를 그 문제의 완결성을 살려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해설하는 것.²⁾
- ④ 새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기출문제 해설과 개념을 정리하는 것.
- ⑤ 학생들이 일 년 내내 고민하는 칸트, 벤담, 롤스, 노직과 같은 중요한 사상가들의 개념을 기본개념부터 심화개념까지 잘 정리해서 일 년 내내 사전처럼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이 책을 통해 수능에 맞는 바른 공부의 무엇이인지, 생활과 윤리를 어떻게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이용해서 생활과 윤리의 전반적인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임.

2) 이 책에서 단순한 키워드식 접근은 배제하고, 제시문과 선지를 한 구절 한 구절 철저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해설함.

기출문제로 알아보는 올바른 수능 생운 학습법

우리는 먼저 올바른 개념 학습, 올바른 문제풀이, 올바른 기출문제 학습이 어떤 것인지 4개의 문항 (10번, 18번, 20번, 16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사형제, 분배 윤리 등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를 학습해볼 것이다.

10 삶과 죽음의 윤리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무명(無明)에 가려진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서로 오가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	삶과 죽음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삶을 좋아함은 미혹(迷惑)이고, 죽음을 싫어함은 타향에 안주하여 고향에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과 같다.

- ① (가)는 죽음을 다른 존재로 윤회하는 고리가 단절된 상태라고 본다.
- ② (나)는 사후의 평온보다 현세에서 인(仁)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죽음을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라고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죽음을 흠어져 있던 기가 모인 상태라고 본다.
- ⑤ (가), (나)는 생사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순환의 과정이라고 본다.

● 현자의 돌 평

오답률 TOP3에 들어갔던 문항이다. 한편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동양 전통 윤리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양의 죽음관으로 ‘야스퍼스’의 죽음관(한계 상황)이 추가되었다.³⁾ 따라서 동서양의 죽음관을 비교 하는 문항이 평가원이나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제시문 분석: 사실적 이해 > 꼼꼼한 해설

(가)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제시문 (가)는 불교의 입장이다. 제시문에서는 ‘(1) 무명에 가려진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서로 오간다. (2) 그런 중생들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모른다.’라고 말한다.

(가)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불교는 (1) 삶과 죽음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서로 오가는’ 윤회의 과정의 일부로 보았다. (2) 그렇게 윤회를 하는 이유는 중생이 무명에 가려져 있기 때문인데, 무명에 가려져 있다는 말은 진리를 깨달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그 진리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사성제 = 고집멸도). 이 진리는 ‘집착에서 고통이 나오고, 그 집착을 바른 길(道)을 따라 수련함으로써 집착을 없애고(멸) 결국 깨달음을 얻어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말한다.

(나)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제시문 (나)는 도가의 입장이다. 제시문은 (1) 삶과 죽음이 사계절의 변화와 같고, (2)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나)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1) 도가는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도가의 입장에서 사계절의 변화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제시문은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고 말한다. (2) 따라서 제시문은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좋아하거나 싫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정답 해설

⑥번 선지는 네 가지 명제로 나눌 수 있다. (가)는 ㉠ 생사를 차별해서 안 된다고 본다. ㉡ 생사를 순환의 과정으로 본다. (나)는 ㉢ 생사를 차별해서 안 된다고 본다. ㉣ 생사를 순환의 과정으로 본다.

(가)는 ‘죽음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오고 가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곧 ㉡ 생사를 순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제시문은 삶과 죽음을 모두 무명에 가려진 것 즉,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겪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않는 순환의 과정으로 보는 것과 같다.

(나)는 삶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는 ㉠ 생사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삶과 죽음을 마치 사계절의 변화와 같이 보았다. 사계절은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다시 봄’ 이렇게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이다. 따라서 ㉡ 생사도 순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죽음을 윤회 과정의 일부로 보았다. 이는 곧 ‘다른 존재로 윤회하는 고리’가 연결된 상태로 볼 수 있다.

② (나)는 생사를 차별하지 않는다. 반면 ② 선지는 삶을 죽음보다 중요시한다. 이는 생사를 차별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나)는 도가의 입장으로 자연스러운 도(道)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② 선지는 도(道)가 아닌 인(仁)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유교의 입장에 가깝다.

③ (가)는 죽음을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로 보았는가, (나)는 죽음을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로 보지 않았는가, 두 명제가 모두 참이어야 올바른 선지가 된다. 먼저 (가) 죽음을 겪는 존재는 진리(사성제)를 모르는 중생이다. 진리(사성제)를 모르면 삶의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첫 번째 명제부터 거짓이므로 이 선지는 틀린 선지다. 한편 (가)가 생각하는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는 진리(사성제)를 깨달아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⁴⁾

3) 새로 추가된 아스퍼스의 죽음관은 더 알아보기 칼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해탈, 열반적정의 경지에 오른 존재는 생사를 초월한 존재로서 죽지 않는다. 죽은 스님에 대하여 ‘열반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 정토종의 잘못된 영향이거나 그냥 존경받는 스님이 돌아가셔서 예의상 비유적으로 열반했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스님이 열반적정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이는 생활과 윤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질문이 많아서 덧붙임).

참고로 (나)는 죽음을 모였던 기가 흩어진 상태로 볼 뿐 삶의 번뇌가 소멸한 상태로 보지 않았다.

④ (나)는 죽음을 흩어져 있던 기가 모인 상태라고 보는가? (가)는 죽음을 흩어져 있던 기가 모인 상태라고 보지 않는가? 두 명제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생(삶)을 흩어져 있던 기가 모인 상태로 보았고, 죽음을 모였던 기가 흩어지는 상태로 보았다. 역시 첫 명제부터 거짓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이다. 참고로 (가)의 경우에는 죽음을 윤회의 과정으로 볼 뿐 기(氣)의 작용으로 보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교과서 Base 개념 기본 & 심화 칼럼)

1) 장자의 순환적 생사관 : 삶과 죽음관

장자는 기가 모여 신체를 이루고, 모인 기가 보존된 상태를 생으로 보았고, 모였던 기가 흩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장자는 삶과 죽음은 차이가 없으므로 죽음 앞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고,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자 부인의 죽음

장자의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장자의 친구 혜시는 조문을 갔다. 그런데 통곡을 하고 있어야 마땅할 장자가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고 있었다. “아... 이 친구가 슬퍼서 미친 게로구나” 혜시는 장자에게 즐거워하는 이유를 묻는다. 장자는 대답했다. “부인이 죽었을 때 나라고 슬프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녀가 태어나기 이전을 생각해보니, 본래 삶이란 없었던 것이고,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형체도 없었던 것이고, 기(氣) 조차도 없었던 것이었네. 그저 흐릿하고 아득함 속에 섞여 있었으나, 그것이 변화하여 기운이 있게 되었고, 형체가 있게 되었고, 삶이 있게 되었던 것이네. 지금은 부인이 또 변화하여 죽어간 것이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운행하는 것과 같은 변화이니,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이란 거대한 방 속에 편안히 잠들고 있는 것일세, 그런데도 내가 큰 소리를 내어 운다면 스스로 천명(天命)에 통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울음을 그친 것이네. - 장자

올바른 기출문제 학습법 in 장자의 죽음관

2016학년도 수능 10번 : ㉟ 장자는 생사를 차별하면 안 되는 순환의 과정이라고 본다.

위 선지는 지금까지 수능과 평가원에서 출제된 적 없던 선지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선지를 오답 선지로 착각하여 10번 문항을 틀렸다. 그런데, 이 선지는 작년 현자의 둘 모의고사 3회 5번의 ㉠ 선지와 일치했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순환적 과정인 동시에 자연적 필연성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현돌모)

이 선지는 그 당시 학생들로부터 오류라고 많은 항의를 받을 정도로 생소한 선지였다. 이 선지를 어떤 원리로 출제하였으며, 수능 적중을 할 수 있었을까? 위의 선지가 출제된 것은 다음과 같은 맥락과 연관이 있다. 작년 9월 모의평가 16번 문항에서 다음과 같은 선지가 출제되었다.

㉠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이 기(氣)가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이다.

이 선지는 죽음을 ‘(기의) 순환’이라고 말할 뿐 ‘생사의 순환’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죽음의 순환’을 ‘삶과 죽음(생사)의 순환’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 연결고리는 올해 수능 제시문에 있다.

“삶과 죽음은 춘하추동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2016학년도 수능 제시문)

두 명제를 연결하면 수능 정답 선지가 도출된다.

16.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자신의 몸을 닦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正心].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誠意].
(나)	사람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에 대해 알려하는가?

- ① 마땅히 애도해야 하는 일인 동시에 자연에 순응하는 과정이다.
- ② 자신의 업(業)에 의해 또 다른 삶을 결정짓는 윤회의 과정이다.
- ③ 사계절의 운행과 같이 기(氣)가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이다.
- ④ 고통 없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 ⑤ 불멸의 영혼이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과정이다.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무명(無明)에 가려진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서로 오가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	삶과 죽음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삶을 좋아함은 미혹(迷惑)이고, 죽음을 싫어함은 타향에 안주하여 고향에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과 같다.

- ① (가)는 죽음을 다른 존재로 윤회하는 고리가 단절된 상태라고 본다.
- ② (나)는 사후의 평온보다 현세에서 인(仁)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죽음을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라고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죽음을 흠어져 있던 기가 모인 상태라고 본다.
- ⑤ (가), (나)는 생사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순환의 과정이라고 본다.

논리

- ① 대전제 : 춘하추동 사계절의 변화는 기가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이다.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6번 문항 선지 ③)
- ② 소전제 : 삶과 죽음은 춘하추동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2016학년도 수능 10번)
- ③ 결론 : 따라서 삶과 죽음은 (기가)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이다. (수능 정답 선지 & 현돌모 3회 5번 선지)

기존의 공부법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이 문항을 풀 때, 확실히 틀린 ①, ②, ④를 소거하고 ③번과 ⑤번을 고민하였을 것이다. 반면 논리적이고 유기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9월 모평에서 선지를 통해 대전제를 주었고, 소전제는 제시문 및 기존의 EBS, 교과서 등에 흔하게 나와 있는 것이므로 ⑤번 선지가 올바른 선지임을 추론했을 것이다. 이처럼 수능에서 출제되는 생소한 선지는 기출 문제를 바르게 공부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다.

다음은 개정 교육과정에 새로 추가된 장자의 생사관이다.

“장자는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을 서로 연결된 순환 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죽음에 임하여 너무 슬퍼하지 말며, 삶에 대하여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고 하였다.”⁵⁾

2)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죽음관 (새 교육과정 추가)

하이데거와 야스퍼스는 20C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다. 인간의 이성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던 과거와는 달리 20C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인간 존재의 참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단지 이성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허무함을 몸소 체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죽음 앞에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삶 속에서 수많은 실존적 선택을 하는 인간이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삶의 덧없음을 깨달은 시점에서 실존 철학은 시작된다.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 앞에서 그때까지 자신을 옹호하던 사회적 가치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실존을 직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실존은 사회적 가치를 초월하는 깊이와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상황인 ‘죽음’ 앞에서 인간은 기존의 허물을 벗고 실존적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닥쳐올 죽음(한계상황)을 지각하므로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불안은 인간을 실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한다. (만약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하이데거 : “먼저 죽음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하이데거는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은 자기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죽음의 지각을 강조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성찰하게 하여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한다.”⁶⁾

하이데거 :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을 존재로 규정하면서도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죽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이 동물과 다르고, 이 때문에 인간은 의미를 추구한다고 하였다.”⁷⁾

하이데거 :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음.”⁸⁾

야스퍼스 : “인간은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주체적으로 생각한다. 야스퍼스는 죽음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상황이라고 보았다.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이 죽음을 통해 삶이 유일하고 소중하며 가치 있음을 깨닫는다고 본다.”⁹⁾

야스퍼스 :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상황임.”¹⁰⁾

수능자의 꿈

-
- 5) 미래엔 P.49
 - 6) 미래엔 P.49
 - 7) 천재교육 P.45
 - 8) 수능특강 P.34
 - 9) 교학사 P.53
 - 10) 수능특강 P.34

기출문제로 알아보는 올바른 수능 생운 학습법

18 문명의 충돌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문명 간의 갈등은 상이한 문명에 속한 인접국들이나 집단들 사이의 단층선 분쟁에서 발생합니다. 각 문명의 핵심국들이 분쟁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명 간의 전면적인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



문명 간의 갈등은 소통 단절에서 기인합니다. 세계의 역동성은 낯선 것과의 대결을 다문화하여 거부 본능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정치와 무관하게 대화를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적 힘들로 인하여 문명 간 가치들의 교집합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을



- ① 갑 : 핵심국들이 단층선 분쟁 억제를 위해 타협해서는 안 된다.
- ② 갑 : 문명과 문화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동질성을 모색해야 한다.
- ③ 을 : 국제 교류의 확대를 통해 문명 간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
- ④ 을 : 세계는 개별 문명을 넘어 단일 문명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 ⑤ 갑, 을 : 국제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정치 이념의 차이에서 찾아야 한다.

● 현자의 돌 평

수능을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해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제시문과 선지가 수능에 반영될 것임을 예측하며 공부하는 것이다. 위의 수능 18번 문항은 작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옳은 선지(20번 문제, 3번 선지)가 그대로 정답으로 출제된 문항이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명의 충돌과 문명의 공존은 계속 다뤄진다. 기출문제를 통해 개념을 학습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 관계에서 새롭게 들어온 학생들이 많아서 이 내용이 다시 출제될 확률은 낮다.

제시문 분석: 사실적 이해 > 꼼꼼한 해설

(갑)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갑은 문명의 충돌을 주장하는 헌팅턴이다. 제시문은 (1) 문명 간의 갈등이 상이한 문명국 간의 단층선 분쟁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2) 핵심국이 분쟁국을 지원하는 것은 문명 간의 분쟁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갑)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헌팅턴은 (1) 문명들이 서로 갈등하는 양상을 서로 다른 문명국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점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보았다. (2) 만약 문명의 핵심국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비핵심국을 지원해줄 경우에 문명 간의 충돌이 악화될 것이라고 본다.

(을)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을은 문명의 공존을 주장하는 뮐러이다. 제시문은 (1) 문명 갈등의 원인이 문명 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일어난다고 본다. (2) 세계의 역동성이 낮선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 (3)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힘에 의해서 문명 간의 가치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을)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뮐러는 (1) 문명의 갈등은 단순히 문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문명 간의 소통 부족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2) 물론 문명 간의 낮선 차이점들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서는 서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각 문명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문명이 서로 소통하고 동질감을 인식하여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답 해설

③ 제시문에서 뮐러는 사회,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국제 교류가 각 문명이 공유하는 가치를 늘려 상호 이해(교집합 확대)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 교류의 확대는 문명 간의 갈등 완화로 이어질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헌팅턴은 ‘중재의 원칙’을 통해서 문명의 핵심국이 비핵심국 간의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제시문을 통해서도 일부 추론할 수 있다. 제시문은 핵심국이 비핵심국 간의 분쟁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곧 핵심국들이 분쟁의 원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타협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헌팅턴은 각 문명의 상이함이 문명 간의 충돌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문명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히려 헌팅턴은 서구 중심주의와 같이 타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④ 제시문에 따르면, 문명 간의 갈등은 각 문명이 중시하는 가치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한 갈등은 상호 대화를 통해 가치를 공유한다면 줄어들 것이다. 즉, 을은 문명 간 가치들의 교집합을 확대하자는 것이지 합집합(단일 문명)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⑤ 제시문에 따르면 헌팅턴은 상이한 문명 간의 갈등을 뮐러는 문명 간의 상이함뿐만 아니라 소통의 부족을 국제 분쟁의 원인으로 보았다.

더 알아보기 (교과서 Base 개념 기본 & 심화 칼럼)

1) ‘문명의 충돌과 문명의 공존’ 심층 해설 및 개념 칼럼

• 문명의 충돌 (The Clash of Civilizations)

미소 냉전이 끝난 후, 미국의 정치학자인 헌팅턴은 이제는 정치 이념이 아니라 ‘종교’가 세계 분쟁의 최대 원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팅턴

에 따르면 세계는 종교에 따라 6개의 문명으로 나뉘고 기독교 문명(서구)과 이슬람 문명(중동), 유교 문명(동아시아) 간의 갈등이 세계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는 공통의 문화를 가진 민족, 국가들은 핵심국으로 통합되는 반면, 서로 다른 문명권에 속하는 나라와는 분열하고 반목할 것이라고 본다. 거대 종교들로 나뉜 세계는 서로 다른 종교/문화적 이질감에 의하여 타 문명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는 문명들이 나뉘어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며, 그에 따른 국제 질서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각 종교 문화권의 핵심국(강대국)의 역할을 강조했다.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 따른 분쟁의 해결책으로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1. 자제의 원칙 : 핵심국은 다른 문명의 내부 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2. 중재의 원칙 : 한 문명 안의 비핵심국이 다른 문명과 분쟁을 일으킬 경우 해당 문명의 핵심국이 자문명의 비핵심국을 억제해야 한다. (타 문명의 비핵심국에는 간섭하면 안 된다.)
3. 동질성의 원칙 : 문명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 문명의 다양성을 수용하며, 다른 문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문명의 공존 (The Coexistence of Civilizations)

독일의 정치학자인 월러는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비판한다. 월러에 따르면 ‘종교, 문명’을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한 헌팅턴의 주장은 너무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것이며 현실과 다르다. 월러에 따르면, 실제로 역사는 이웃 문명의 문화를 새롭게 접하고, 서로의 낯선 문화를 공유하면서 발전해온 것이다. 오히려 문화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것은 각 문명 간의 차이점만을 부각하여 분쟁을 유발할 뿐이다.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지 않아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제 분쟁의 발생에는 단순히 종교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역사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월러는 국제 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과 포용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가, 시민 사회, 개인들이 타국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관용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한다면 분쟁을 극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류의 문화가 진보하고 높은 수준의 인간성을 달성할 수 있다.

★ 주의할 점 : 헌팅턴과 월러 모두 각 개별 문명들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며 병존해야 한다고 보았다. 모든 문명을 하나로 합치는 문명 통합은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다. (오답 선지!)

단, 헌팅턴의 경우 각 문명이 중심국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았다.

다음 제시문과 모든 문명을 하나의 문명으로 통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주의하자.

“동일한 문명 혹은 공통의 문화를 가진 민족과 국가들은 핵심국을 중심으로 뭉칠 것”¹¹⁾

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문명의 충돌 & 문명의 공존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냉전 시대가 끝남에 따라 이제는 세계 문화와 문명의 흐름에 따라 재편될 것이며 문명 간의 갈등과 분쟁이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문명 간의 차이는 근본적이고 문명 간의 상호작용은 서로의 차이를 부각시켜 결국 문명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략) 이러한 문명 충돌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문명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가치가 있는 문명 사이에 갈등이 있을 뿐이고 갈등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문명 간의 갈등이나 충돌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명의 갈등과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명의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상호 간의 대화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문화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유, 평등, 인권, 관용, 공동체에 대한 헌신 등의 정신적 가치 체계에 대한 합의와 공유를 모색해야 한다.¹²⁾

11) 2016학년도 수능특강

12) 교학사 P.271

기출문제로 알아보는 올바른 수능 생운 학습법

20 성과 사랑의 윤리 : 에리히 프롬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교환의 의미로만 주어야 한다고 본다. 비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람은 환희의 경험보다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모두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이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 표현이며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이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다.

- ①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 ② 사랑은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돌보는 것이다.
- ④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 ⑤ 사랑은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는 것이다.

● 현자의 돌 평

사랑의 기술은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처음으로 출제된 개념이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랑의 기술' 같은 것은 9월 모의평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수능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개념이라고 말하곤 했다. 교과서와 EBS에서 나오고 평가원에서 출제된 문항이라면 그 내용을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옳바르다.

이 문항은 제시문을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항을 틀린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 제시문을 바르게 읽는 연습과 선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자. 또한 9월 모의평가 기출과의 연계성도 생각해보고 관련 개념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제시문 분석: 사실적 이해 > 꼼꼼한 해설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제시문은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다. 제시문은 (1) 사랑을 시장 교환으로 보는 관점과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이라고 보는 관점은 틀렸다고 비판한다. (2) 반대로 사랑은 사랑을 주는 사람의 잠재 능력을 최고로 표현하는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보았다. (3) 또한 사랑은 받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다.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에리히 프롬이 보았을 때, (1) 사랑에 대한 현대인의 관점은 잘못되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마치 서로 물건과 돈을 교환하는 것과 같은 시장 거래로 보거나, 한 사람이 일방적인 희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2) 하지만 에리히 프롬이 보았을 때, 사랑이란 나를 상대방에게 줌으로서 나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생산적인 활동이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가 그(녀)를 위해 사랑을 줌으로서 나는 내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3) 단지 내가 행복한 것 뿐만이 아니다. 사랑을 한다면 사랑을 받는 상대방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상대방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이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희생으로서 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책임지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을 착취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것이다.

정답 해설

① 제시문에 쓰여 있듯, 사랑을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잘못되었다.

오답 해설

② 제시문의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는 것은 성실하게 응답하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③ 제시문의 ‘상대방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곧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④ 제시문 마지막 줄의 ‘착취’하지 않는 것은 선지의 ‘상대방을 지배’하지 않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존경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때, 존경은 ‘Respect’의 번역이며, 존중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한다.¹³⁾

특히 2016학년도 9월 3번 ㄴ 선지에서 ‘사랑은 상대방이 지닌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에서 볼 수 있듯 프롬에게 사랑이란 상대방의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⑤ 제시문의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선지의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제시문의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 표현이며 생산적인 활동’은 선지의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알아보기 (교과서 Base 개념 기본 & 심화 칼럼)

1)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심층 해설 및 개념 칼럼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의 에리히 프롬 문항을 보면, ㄱ, ㄴ, ㄷ 선지가 수능의 제시문으로 그대로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에리히 프롬에게 존중의 의미를 ‘더 알아보기’에서 더 알아보자.

3.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삶의 일종의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인간 존재를 타인과 결합시키는 능동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고립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사랑에 있어서 두 존재는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 있다.

<보 기>

- ㄱ.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 ㄴ. 사랑은 상대방이 지닌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 ㄷ.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ㄹ. 사랑은 상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제시문에서 프롬은 (1) 사랑은 기술이다. (2)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하는 것이며, 사랑은 자신과 상대방을 결합하려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3) 그 결합을 통해 인간은 고립감을 극복하면서도 각자의 통합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사랑을 하는 두 사람은 하나이면서도 둘이다.’라고 설명한다.

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해보자.

(1) 에리히 프롬은 현대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대인들이 사랑을 너무 서툴게 자기 멋대로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에 맞게 자신의 사랑의 기술을 계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 사랑은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 애정의 감정이다.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3) 사랑하는 두 사람은 서로의 부름에 응답하고, 교감하면서 서로 하나가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외로움(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개성과 존재(자기정체성, 통합성)를 인정해준다. 따라서 사랑하는 두 사람은 서로 하나이며 동시에 둘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다.

※ 위 수능 제시문에서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아래 개념 정리 특강에서도 설명하기 때문에 선지 해설은 생략한다.

2) 개념 정리 특강

• 에리히 프롬의 사상

에리히 프롬은 20세기(1900년대 초/중반) 미국 신프로이트학파의 정신분석학자이며, 사회심리학자이다. 프롬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마르크스 이론(마르크시즘)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이론을 토대로 근대사회를 분석하였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소유냐 존재냐>, <사랑의 기술> 등의 책을 썼다.

그는 세계 2차 대전을 몸소 체험하였고, 권위주의, 파시즘 등의 비인간적인 사상을 배격하려 하였으며, 그러한 사상의 극복을 위해 ‘인간을 위한’, ‘인도주의적’ 윤리와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과 생활과 윤리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현대인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사랑을 단지 즐거운 감정이라고 간주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그러한 현대인은 사랑은 받는 것이며, 사랑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사랑해 줄 올바른 ‘대상’을 찾는가, 못 찾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에리히 프롬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며, 사랑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말한다.

『사랑의 기술』 40~41p를 읽어보자.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랑의 능동적인 특징을 나타낸다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주는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모호하고 복잡한 것이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은 주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시장형의 성격은 오직 받는 것에 대한 교환으로서만 주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 받지 않고 주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비생산적인 성향의 성격을 지닌 사람은 준다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주기를 거부한다. 어떤 사람들은 주는 것을 희생이라는 의미의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덕을 희생을 감수하는 행위 속에서 찾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규범은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보다 박탈당하는 것을 참아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생산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의 경우에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준다는 것은 잠재성의 최고의 표현이다. 준다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는 것은 나를 희열로 가득 채워준다. 나 자신은 충만되어 있고, 따라서 즐거워하는 자로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박탈이 아니라 주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생동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 - 『사랑의 기술』 40~41p

위의 『사랑의 기술』 원문에서 프롬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관점을 비판한다. 그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주는 행위는 일방적인 양보나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고양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즐거운 행위가 되며 자신을 보다 충만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사랑은 보호, 책임, 존경, 이해하는 것 - 에리히 프롬

보호 : 보호란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뜻한다.

책임 : 책임이란 사랑하는 사람의 부름에 대해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경 : 존경이란(바라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봄(상대의 모습 그대로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이해 : 이해란 사랑하는 사람의 (남들은 알지 못하는) 독특한 개성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3)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에리히 프롬

“사랑은 성적 매력에 이끌리는 열정적인 감정일까?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적극적인 과정이자 끊임없이 학습하고 노력하여 개발되는 기술(Art)’이라고 하였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관심과 이해’, ‘존경’, ‘신뢰와 책임’, ‘배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¹⁴⁾

“프롬은 사랑이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욕구를 배려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경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¹⁵⁾

승안지의품

14) 비상예뉜, P.77
15) 미래엔, P.69

기출문제로 알아보는 올바른 수능 생운 학습법

16 유불도 자연관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본래의 마음[心]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면 그 본성[性]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하늘이 무엇인지[天命]도 알 수 있다.
(나)	사람은 땅을 법칙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칙으로 삼는다. 하늘은 도(道)를 법칙으로 삼고 도는 자연(自然)을 법칙으로 삼는다.

- ① (가)는 하늘이 인간 이외의 만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고 본다.
- ② (나)는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가치가 만물 속에 내재한다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하늘이 만물에 법칙을 주는 최고 존재라고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하늘이 만물 위에 존재하는 절대 원리라고 본다.
- ⑤ (가), (나)는 하늘이 만물의 운명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라고 본다.

● 현자의 돌 평

유불도 동양 자연관은 새 교육과정에서는 그 비중이 줄었다. 이전과는 달리 개정 교육과정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적 자세로 약간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만약 수능에 출제될 경우 기출 문제를 공부했다는 가정 하에 출제될 것이므로 기출문제에 대한 올바른 학습이 필요하다.

(가)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제시문 (가)는 유교의 입장이다. 제시문에서는 (1) 본래의 마음[心]을 발휘한다면 그 본성[性]을 알 수 있고, (2) 본성을 알 수 있다면 하늘의 명령 [天命]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가)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기출을 학습할 때, 제시문을 문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유불도 문제는 제시문만을 보고 어떤 사상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 EBS, 이전 기출문제에 나온 유불도 지문들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 제시문은 유교의 입장이다. (가)가 유교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불도 개념과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2015학년도 수능 20번 제시문을 보자.

(나)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고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 하늘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만물을 생겨나게 하니 (化生), 천지 만물은 본래 나와 일체이다.

이 제시문과 2016학년도 수능 16번 (가) 제시문을 비교해보자.

(가) (1) 본래의 마음[心]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면 그 본성[性]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2)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하늘이 무엇인지 [天命]도 알 수 있다.

(2)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고 하고 (2015학년도 수능)

= 본성[性]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하늘이 무엇인지[天命]도 알 수 있다. (2016학년도 수능)

2015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유교가 ‘하늘이 명한 것 즉, 천명(天命)이 곧 본성(性)’으로 본다는 것을 공부했다면 2016학년도 수능에서 ‘본성(性)을 안다면天命(하늘의 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2015학년도에는 천명이 본성의 근원임을 말한 것이고,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본성을 보고 근원인 천명을 알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즉, 2016학년도 수능 (가) 제시문은 제작년 수능의 유교의 제시문을 뒤집어 말한 것뿐이다. 바르게 공부한 학생은 이 과정을 통해 (가)가 유교의 제시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1) 2016학년도 수능 제시문에서 뒷부분은 2015학년도 수능의 20번 제시문과 유사한 맥락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제 제시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가) (1) 본래의 마음[心]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면 그 본성[性]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2)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하늘이 무엇인지[天命]도 알 수 있다.

제시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래의 마음을 통해 그 근원인 본성을 알 수 있고, 본성을 통해 그 근원인 천명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2015학년도 : 하늘(원리, 연역) : [하늘의 명령 →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래 마음)]¹⁶⁾
- 2016학년도 : 인간(발견, 귀납) : [본래 마음을 발휘함. →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됨. →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됨.]

이처럼 수능에서 제시문이 생소하게 출제된다고 해도 이전에 출제된 기출문제의 제시문과 선지를 새로운 표현으로 바꾸거나 유사한 맥락으로 바꾸는 식으로 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 EBS, 기출문제를 올바르게 학습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제시문 (나)는 도가의 입장이다. 제시문은 (1) 사람은 땅을, 땅은 하늘을 법칙으로 삼는다. (2) 하늘은 도를 법칙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칙으로 삼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

(나)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보통 수능에서 두 입장을 비교하라고 할 때, 제시문 한 개는 어렵게, 한 개는 쉽게 출제하곤 한다. (나)는 쉬운 제시문이다. 또한 이미 (가)가 유교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불교이거나 도가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1), (2)에서 제시문은 인간이 땅을, 땅이 하늘을, 하늘이 도를, 도가 자연을 법칙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인간이 땅을, 하늘을, 도를, 자연을 법칙으로 삼는 다는 말과 같다(연쇄 관계). 인간이 자연과 도를 법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도가의 핵심 사상이다. 도가가 자연스러움과 도를 강조한다는 것은 교과서 등을 통해 배운 것이다. 아마 이 제시문이 도가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정답 해설

㉓ 우선 (가)는 천명으로부터 모든 존재에 본성이 부여된다는 입장이다. 그 본성은 본래의 마음을 이룬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나온 것처럼 본래의 마음에서 본성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본성에서 천명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하늘은 만물에게 법칙을 주는 존재이다. 또한 2015학년도 수능 기출에서도 유교는 하늘을 천명을 통해서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최고의 존재(근원적 존재)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㉑ 제시문과 2015학년도 수능 제시문에도 나와있듯, 유교는 하늘이 인간에게 본성을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늘은 인간 본성의 근원이다. 유교의 입장에서 하늘은 인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이는 2015학년도 제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하늘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만물을 생겨나게 하니(化生)’

유교는 하늘을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기르는(化育) 존재로 보았다. 한편, (나)는 제시문에 쓰여있듯 하늘은 ‘도’를 법칙으로 삼는 존재로서, 만물에 법칙을 주는 ‘최고’ 존재는 아니다. 도교는 모든 존재가 ‘하늘’이 아닌 ‘자연’을 따른다고 보았다. ㉒ (나)는 도가로서 하늘은 도를 법칙으로 따르는 자연의 일부라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하늘이 만물에 어떤 가치를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도가는 ‘도덕적 가치’를 인위적인 것으로 싫어한다. 이는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의 제시문에서도 볼 수 있다.

친애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다.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자는 현자(賢者)가 아니다. 이(利)와 해(害)를 구별하는 자는 군자(君子)가 아니다. 명성을 좇아 참된 자기를 잃은 자는 선비(士)가 아니다.

이 제시문에서 말하는 친애(=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 이와 해를 ‘구별’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관점

에서 인위적으로 구별, 구분을 하는 것이다. 유교는 이러한 인위적인 구분을 통해서 ‘도덕’을 만든다.

도가는 유교의 인위적 구분을 비판한다. 도가는 도덕과 비도덕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연’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추구했다.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가치가 만물 속에 내재한다고 보는 입장은 (가) 유교의 입장이다. 이는 주어를 바꿔서 오답 선지를 만든 것이다.

④ (나)는 제시문에도 쓰여있듯 하늘은 도를 법칙으로 따르고, 도는 자연을 법칙으로 따른다. 따라서 하늘은 만물 위에 존재하는 절대 원리가 아니다. 만물 위에 존재하는 절대 원리는 자연이다. 반면 (가)는 하늘을 만물 위에 존재하는 절대 원리이자 그 근원이라고 보았다.

⇒ 오답 원리 : 이 선지는 (가)와 (나)의 자리를 바꾸었다.

⑤ (가)는 유교의 입장에서 하늘이 인격적 존재로서 천명(명령)을 내리고, 만물에 본성을 주어 운명을 주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나)는 하늘을 만물의 운명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 작년 수능특강에서는 도가가 하늘을 자연의 일부로 보았다고 적어놓았었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도가는 자연을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바라본다.”¹⁷⁾라고 쓰여 있다. 이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도가는 자연의 일부인 하늘도 아무런 목적 없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도가는 하늘을 만물의 운명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 알아보기 (교과서 Base 개념 기본 & 심화 칼럼)

1) 기본 개념 정리 → 심화 심화 칼럼 + 정리

•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유불도 전통적 자연관에 나타난 생태 중심주의 관점

유교 : 유학에서 자연의 생명력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만물의 근원이자 원리인 도(道)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인간에게 사랑(仁)을 베푸는 것을 올바른 삶으로 보았다.

불교 :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연기설(緣起說)을 주장한다. “저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저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 또한 없다.”라는 말은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표현한다.

도가 : 도가에서는 자연을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의 체계로 바라본다. 자연이 무위의 원리로 운행하듯 인간 또한 자연에 조작과 통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물처럼 사는 것이 으뜸 되는 선이다[上善若水].”라는 말에서 자연의 질서를 엿볼 수 있다.¹⁸⁾

• 어려운 유불도 예시 지문 해설

예를 들어 2016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TOP3에 들었던 20번을 살펴보자.

친애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다.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자는 현자(賢者)가 아니다. 이(利)와 해(害)를 구별하는 자는 군자(君子)가 아니다. 명성을 좇아 참된 자기를 잃은 자는 선비(士)가 아니다.

16) 2015학년도에는 인간의 마음은 나오지 않았다. 2016학년도에서 새롭게 추가된 논리이다. 작년 수능과 100% 일치하는 문제를 내지 않고 개념을 약간 심화시킨 것이다.

17) 천재교육 생활과 윤리 P.111

18) 천재교육 생활과 윤리 P.111

이 제시문에서 인자, 현자, 군자, 선비라는 단어가 나온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한 학생들은 이 키워드만 보고 이 제시문을 유교의 입장이라고 오해하여 문제를 틀렸다. 이 제시문은 도가의 입장으로, 도가가 유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올바른 제시문 독해란, 제시문에서 주어진 개념어를 파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개념어를 앞뒤로 수식하고 있는 표현들을 정확하게 읽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앞의 제시문에서는 ‘친애하는 자’는 인자가 아니라며, 친애 즉, 친하고 가까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유교적 사랑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은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자가 현자가 아니라는 말을 통해 하늘이라는 자연을 시간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부정한다. 유교는 하늘(天)에서 이치(天理)를 찾고, 천도(天道)를 찾고, 하늘의 시간(天時) 구분해 그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하고, 예법을 지켜야한다고 보는데, 제시문은 이를 비판하는 것이다.¹⁹⁾ 그리고 이와 해를 구별하는 자를 비판하는데 이 또한 유교적 관점에서 이해를 구분하는 것(건리사의 의주리종(맹자))을 비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문은 명분과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를 비판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개념의 비중이 작은 문항들 위주로 알아보았다. 앞으로는 개념학습의 비중과 기출문제 간의 연관성이 큰 문항들을 같이 공부할 것이다.

승안자의 꿈

19) 天時非賢也(천시비현야)를 '그리고 변하는 현상에 따르고자 하는 이는 현자가 아니며' 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하고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과 큰 연관이 없으며, 심지어 새 교육 과정에서는 중요도가 감소한 내용이므로 별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다만, 다들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굳이 적는다.

칼럼1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서양 철학은 칸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칸트의 철학은 매우 뛰어난 것이어서 현재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리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의 정초』, 『실천이성비판』, 『도덕 형이상학』이라는 위대한 윤리학 책들을 통해 근대 윤리학의 토대를 닦았다.

수능에 출제되는 다른 사상가들(니추어, 노직, 롤스 등)도 칸트의 영향을 직, 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칸트의 윤리학을 올바르게 학습할 경우 전반적인 개념과 기출이 연결되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많이도 필요 없다. 칸트의 핵심을 담고 있는 한 문장만 이해하면 된다.



● 칸트의 인간성 정식에 대한 오해

인간성 정식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수능특강 20p)

EBS 강의 필기: 칸트: 인격 수단화 × → 목적 ○ (수단화 = 도구적 가치, 유용성, 이용가치)

당신은 칸트의 문장을 인간은 오로지 목적으로 ‘만’ 대해야 하며, 절대로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해는 논리적으로 어색하며 실제 문항에 적용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2015학년도 수능 6번 문항을 살펴보자.

을(칸트):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하락)
선지 나. B: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

위 문항은 ‘사형 제도가 정언명령인 동시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칸트는 수단 ×’라는 기존의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 덕분에 65%의 학생들이 이 문항을 틀렸다. 이후, 기존의 관점에서는 사형제를 예외로서 암기하라고 한다. 이처럼 기존의 칸트의 정언명령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해석하면 ‘윤리적 행위’가 좁게 정의되어 예외가 많아진다. 따라서 설명에도 논리적 오류가 생기기 쉽고, 기출문제에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²⁰⁾

● 인간의 보편적 상식과 구문의 문자적 의미로 따져보자.

칸트는 “윤리학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만한 평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도 충분히 위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성 정식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²¹⁾

우선, 칸트는 위 문장을 절대적 도덕 법칙(정언명령)의 모범적인 형식으로 여겼다. 정언명령이란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선(善)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무조건적인 명령을 말한다. 따라서 칸트의 관점에서 저 정식(공식)에 맞지 않는 명령은 모두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다.²²⁾ 만약, 인간성 정식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만 대해야 한다.’로 해석할 경우 우리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는 모두 악행의 덩어리인 것이 된다. 물론 칸트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서로 상호 수단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우리가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을 받을 때, 우리는 급식실 아주머니를 우리의 배를 채울 음식을 주는 수단²³⁾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반대로 급식실 아주머니는 우리를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도, 상호 수단적인 관계는 언제나 성립된다.

칸트의 경우도 그렇다. 귀족을 상대하는 지식인, 교수로서 칸트 또한 ‘하인’을 두었다. 매일 아침 자신을 깨워주는 하인, 산책 중에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씌워주는 하인 등 칸트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호 수단적 관계를 맺곤 했다. 칸트가 배가 고파 음식점에 갔을 때, 요리사를 음식을 만들어 주는 수단으로 사용한 자신의 행위를 악행으로 저주했을까? 아니면 맛있게 밥을 먹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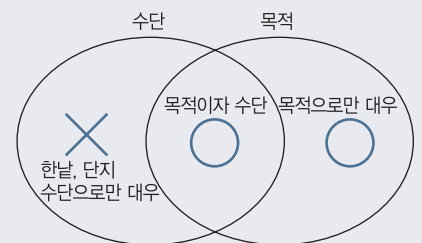
두 번째로,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읽어봐도 알 수 있다.

인간성 정식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수능특강 20p)

이 문장을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자, 이 문장을 ‘수단 ×, 목적 ○’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어 원어민으로서 ‘단지 A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B로 대우하라.’라는 말의 뜻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너는 식사를 함에 있어서 단지 밥(A)만 먹지 말고, 항상 반찬(B)을 먹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밥(A)은 먹자 말고, 반찬(B)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 ‘밥(A)을 먹든 안 먹든, 반찬(B)을 꼭 먹으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처럼 칸트가 쓴 문장의 의미는 너와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동시에,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말이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혹은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벤 다이어그램을 참고하라.)



20) 인간성 정식은 ‘수단 사용 여부’보다는 ‘항상 목적으로 대우’에 강조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단’보다는 ‘목적으로 대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또한 ‘인간(성)을 항상 목적으로 대우한다면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관점이 수능에 있어서 더 유용하다.

21) 『수능특강』, EBS, 2016. P.20

22) 박찬구, 『우리들의 윤리학』, 서광사, 개정판 1쇄 2014, P.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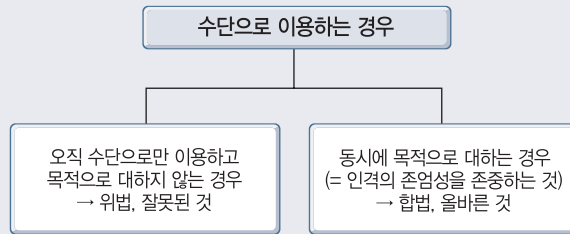
23) 수단이란 가치 중립적이며,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것’의 의미이다.

● 세계의 석학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이전까지 상식적 접근과 문자적 접근을 통해서 칸트의 명제를 올바르게 해석해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정말 올바른 접근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간성 정식에 대한 세계의 석학들의 견해를 살펴보자. 먼저,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하버드 철학과의 샌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이클 샌델 : “학생, 그건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해도 정언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나 목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다룰 때, 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다룬다면 말입니다. 그들을 존중한다는 말의 의미는 정언명령에 비추어보면 됩니다.”²⁴⁾



다음 글로부터 샌델 교수가 말하는 정언명령이 비추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을 목적 자체로 대우하라는 정언명령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결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정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도구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하고 있으며 만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익에 도움을 주지 않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계속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정식에서 논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노예와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일을 해달라고 정당하게 부탁할 수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그들 또한 우리와 동일한 이성적 행위자들이며 그들 자신의 의지와 인격과 더불어 그들이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점²⁵⁾이다. 즉, 그들 모두가 자신 안에 도덕 법칙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며 바로 이 도덕 법칙이 그들에게 ‘동물적’ 지위를 넘어서는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을 기억하여야만 한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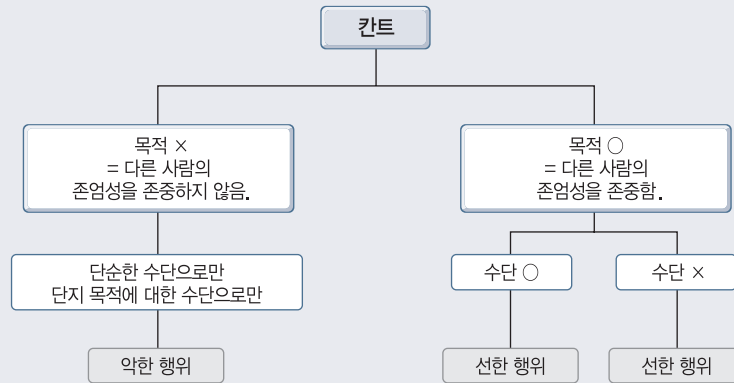
매링턴 교수의 『서양 윤리학사』는 교과서, 우공비, 완자 등에서 칸트 설명을 위해 인용한 대표적인 책이다.²⁷⁾ 교과서 등은 414 페이지의 일부를 인용하였지만 434 페이지 없이는 충분한 이해가 어렵기에 한 번 더 강조한다. 칸트의 인간성 정식은 ‘수단 대우 금지’를 내포하지 않는다. 인간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수단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는 개체론적 환경 윤리(생명 중심주의)로 유명한 폴 테일러 교수도 자신의 저서에서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의 인간성을 단지 사물이라 생각할 수는 없다. (중략) 한 사람이 타인의 목적에 봉사하면서도 타인에 의해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받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의사에게 가는 것은 의사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를 우리들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칸트가 인간을 사물처럼 대한다든가 또는 단지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대한다는 말을 할 때의 의미와는 다르다.”²⁸⁾

또한 일본의 철학자 가라타니 고진도 다음과 같이 썼다.

“칸트적 윤리학이 경멸당하는 경향은 ‘분만 아니라’를 ‘가 아니라’라고 읽어왔기 때문이다.”²⁹⁾



외국 학자뿐만 아니다. 서울대학교 철학 사상연구소에서 발간한 「칸트 『윤리형이상학의 정초』(2006)를 보면

‘목적의 나라’의 의미 : 칸트가 여기서 ‘나라’라는 말로 이해하는 바는 “서로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이 공동의 법칙³⁰⁾에 의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략) 그리고 목적이자 수단인 이 존재자들 상호간의 관계를 이 법칙들은 의도하고 있기에, 비록 하나의 이상일 수는 있지만 목적들의 나라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의 나라가 생겨나는 것이다.”³¹⁾라고 쓰고 있다.

이는 칸트의 정언명법, 인간성 정식에 관한 논문들을 보아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다.

“칸트는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칸트가 인간성을 ‘전적으로 목적으로만 대하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상호 수단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중략) 교수-학생의 관계는 어떨까? 이 관계에도 상호 수단적인 측면이 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수는 지식을 전수받아 학점을 따고 졸업하여 취직자리를 구하는데 필요한 수단이고, 교수들에게 학생은 급료를 받기 위한 수단이다. 부모-자식 관계건, 성직자-신자의 관계건. 모든 인간관계에는 상호 수단적인 측면이 있다. (중략) 칸트는 모든 인간관계가 오로지 상호 수단적으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수단으로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칸트가 인간성의 정식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³²⁾

위 인용들은 모두 그 학자의 의견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칸트가 인간성의 정식(B67) 뒷부분(B75)에 서술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겠다.

24) 마이클 샌델,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명강의 Justice』, 김영사, 2011 1판, P.209

25) ‘인간이 이성적 행위자임을 기억하는 것’ = ‘그들을 존중하는 것’ = 정언명령에 비추어 보는 것 = 타인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정언명령 중 인간성 정식). 이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볼 수 있다.

26) 로버트.L. 애링턴, 『서양 윤리학사』, 서광사, 2015, 1판 11쇄, P.434

27) 다음과 같은 교과서, 개념서, 교재에 ‘로버트.L. 애링턴, 『서양 윤리학사』 P.414’의 동일한 문단이 인용되어 있다. : 정청우 외 12인 『생활과 윤리 교과서』, 미래엔, 2015 1판 2쇄, 31 전광철 외 2인 『본 사람 생활과 윤리』, 이투스북, 2015, P.31, 권장희 외 6인, 지학사 『핵심 생활과 윤리』, P.26, 문일호 외 5인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EBS, 2014, P.29, 한보라 외 3인 『셀파 생활과 윤리』, 천재 교육 P.25, 권장희 외 5인 『우공비 생활과 윤리』, 신사고, 2014, P.21 『완전자율학습 생활과 윤리』, 2013 비상교육, P.31, 한혜정 외 3인, 『텍스트』, 디딤돌, 2014 P.20, 강승희 『윤만이 노트』, EBS, 2015 PP.18~19

28)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서광사, 2014, 1판 24쇄, P.164

29) 가라타니 고진, 『윤리 2』, 사회평론, 2001, P.216

30) 보편타당할 도덕 법칙(정언명령)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인용구들이 너무 어렵다면 모두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1) 김재호, 백종현 외 6인, 『도덕법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칸트 『윤리 형이상학의 정초』,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P.105

32) 문성학 『인간 존엄성 테제에 대한 칸트의 증명과 문제점』, 대한철학회, 2005, 3면

“무릇, 이성적 존재자들은 모두, 그들 각자가 자기 자신 및 다른 모든 이들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서 취급(대)해야만 한다는 법칙 아래 종속해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공동의 객관적인 법칙들에 의한 이성적 존재자들의 체계적 결합이 생긴다. 다시 말해, 이 법칙들은 바로 목적이자 수단인 이 존재자들 상호간의 관계를 의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들의 나라-물론 하나의 이상일 뿐이지만-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하나의 나라가 생긴다.”³³⁾

“네 인격 안의 인간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격 안의 인간성까지 결코 단지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중략) 왜냐하면 이성적인 존재는 모두 자기 자신 각자와 모든 다른 이성적인 존재를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다루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수단과]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법칙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공동의 객관적인 법칙에 의한 이성적인 존재들의 체계적인 결합, 즉 하나의 나라가 생긴다. 이 나라는 이성적인 존재들이 서로 목적과 수단이 되는 관계를 의도하고 있으므로, 목적의 나라(물론 하나의 이상일 따름이지만)라 불릴 수 있다.”³⁴⁾

또한 이 내용을 한국칸트학회, 범한철학회, 새한철학회 등 철학 학회와 한국 윤리학회 등 윤리학 학회에 문의하였다. 그 결과 답변을 해주신 모든 학회에서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가정 하에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다.

그 중에서 한국윤리학회에서 답변해주신 내용을 소개하겠다.³⁵⁾

“임수민 학생이 우리 한국윤리학회에 관심을 갖고 연락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전제 하에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은 칸트에게서 허용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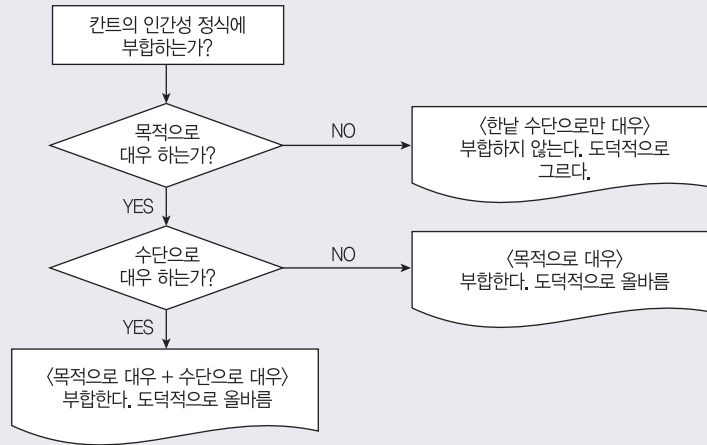
만약 인간을 그 어떤 경우에도 수단으로 대우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임금 노동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업의 사장은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고, 노동자는 임을 받기 위해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사장이나 노동자는 각자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 상대방을 수단으로 대우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대방을 목적으로(인격적으로) 대우한다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임수민 학생이 인용한 것처럼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GMS, B66 이하 = IV429)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서울대 백종현 교수님 번역),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한낱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후자의 번역이 아마도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다.”라는 칸트의 입장을 잘 보여 주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네요.

우리 한국윤리학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임수민 학생의 앞날에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한국윤리학회³⁶⁾



[칸트의 인간성 정식_순서도]

33)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옮김, 아카넷, P.183(B75)

34) 임마누엘 『칸트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논기』, 이원봉 옮김, 책세상, P.84, P.91

35) 지면상의 이유로 다른 학회들의 답변은 생략한다.

36) 2016.02.13 토요일에 저자가 한국윤리학회로 부터 직접 수신한 서신이며 이 책은 많은 학생들에게 수능 생활과 윤리 공부를 돕기 위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직접 인용합니다. 학생의 질문에 흔쾌히 답해주신 한국 윤리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난도 주제, 제대로 접근하기

● 사형제 문항에 대한 올바른 접근

2015학년도 수능 6번

을(칸트) :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선지 ㄴ, B :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이 문항은 오답률 TOP3에 들었던 고난도 문항이었으며, 이의 제기가 두 번째로 많았던 문항이다.³⁷⁾ 왜냐하면 학생들은 칸트의 인간성 정식이나 칸트의 사형제에 대해서 ‘수단 ×’라고 공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선지 ㄴ이 옳은 선지로 밝혀진 이후 학생들은 ‘사형제는 수단도 될 수 있다.’라며 예외로 암기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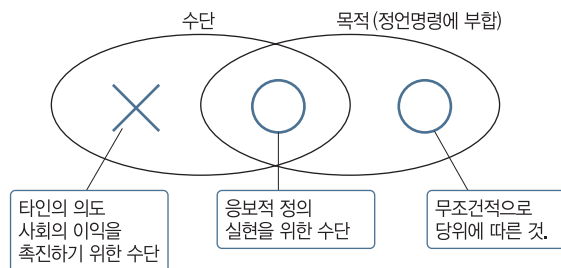
그렇다면 잘못된 개념으로 인한 참사를 피하려면, 칸트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을 :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만 그에게 가해져야 한다. 그 누구도 결코 타인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³⁸⁾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는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벌에 있어서 공적인 정의가 의존하는 원리는 동등성의 원리이다.”³⁹⁾

‘칸트는 수단 ×!’라는 색안경을 끼다면, 위 제시문에서 칸트의 입장을 ‘인간과 사형제를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을 올바르게 읽어보면 칸트가 부정한 것은 모든 종류의 ‘수단’ 대우가 아니라 ‘타인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한 한낱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을 부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지 ㄴ에서 말하는 ‘보복의 수단’이란 사형제를 정언명령으로서, 도덕법칙, 목적으로 여기는 동시에⁴⁰⁾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위 두 제시문에서 칸트는 인간(성)을 ‘결코 타인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사법적 형벌(사형제)도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즉, 인간성 정식과 사형제는 모두 정언명령⁴¹⁾, 도덕법칙이기 때문에 일관된 논리로 이해해야 한다. 인간성 정식(정언명령)에서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형제도(정언명령)에서도 사형제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한 사형제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목적으로 대우함을 전제한다면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 인간성 정식 중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

수능특강 20p

인간성 정식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칸트의 인간성 정식은 인간이 지닌 윤리 의식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생활과 윤리의 대부분의 내용도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 문장은 지금까지 ‘수단’에 대해서만 해석되어왔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를 해석하는 것이다.

생활과 윤리는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며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성 정식을 ‘인간을 수단, 목적으로만 대우해야 한다.’고 한정하여 현실의 문제 상황에 적용할 경우 오류 발생은 불가피하다.⁴²⁾ 왜냐하면 사회 안의 인간은 상호 수단적인 관계를 맺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성 정식을 문제 상황에 적용한 사례들을 검토해보자.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 : 우리가 선물을 사서 친구에게 준다면 그것은 남친을 소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 (1) 친구 그 자체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아껴주려고 선물하는 것 (×)
- (2) 선물을 받고 좋아할 친구를 위해 선물하는 것 (×)

이 두 예시는 잘못된 예시로 칸트 개념학습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먼저, (1)에서 ‘친구 그 자체를 사랑해서 선물을 주는 것’은 감정에 따른 행동이다. 그런데 칸트는 감정에 따른 행동이 아닌 이성에 따른 행동만을 도덕적으로 보았다. 칸트는 타인을 사랑해서 행동할 때가 아니라,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이성적 인간의 의무’로 여겨 행동할 때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위 예시는 오히려 감정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동의할 주장이다.⁴³⁾

(2)에서 ‘친구가 좋아할 것이기에 선물을 주는 것’은 결과를 고려한 행동이다. 그런데 칸트는 결과를 고려한 행동이 아닌, 의무에 따른 행동만⁴⁴⁾을 도덕적으로 보았다. 칸트는 친구의 쾌락 증진을 위한 때가 아니라,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이성적 인간의 의무’로 여겨 행동할 때만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위 예시는 오히려 결과를 강조하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동의할 주장이다.

37) 생활과 윤리 문항 20개 중

38) 2014학년도 수능 6번 문항

39) 2017학년도(올해) EBS 수능 특강 124P, 번역문이라서 글이 어려울 수 있다. 뒤에서, 19번 사형제 문항을 공부한 후에 보면 이해될 것이다.

40)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지만, ‘음보적 정의를 실현’ 하는 것이 곧 사형제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이는 뒤 2016학년도 수능 19번 사형제 문항 해설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자.

41) 이때, 정언명령이란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선(善)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도덕적 명령”을 말한다. 즉 정언명령은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이다.

42) 전문적으로 현실계가 아닌 예지계에서만 ‘수단 ×, 목적 ○’라는 해석이 성립될 수 있다.

43) 윤리와 사상의 ‘흠’ 같은 부정주의 철학자들이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흠은 생활과 윤리 범위가 아니다.

44) 의무에 따른 행동이 곧 이성에 따른 행동이다. 의무란 도덕적 이성이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위 예시들을 검토하여 ‘목적’은 ‘감정이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인간성 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성)’과 ‘목적’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동물이나 물건과 구분되는 존재이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규칙, 준칙)을 보편적 도덕 법칙에 일치시켜, 그 법칙에 따라 의무로써 행동할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도덕 법칙을 만들고 그에 따를 수 있는 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이므로 존엄한 존재이다.”⁴⁵⁾

‘목적’은 ‘적극적 목적’과 ‘소극적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 목적’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내가 친구에게 선물을 사줘서 친구를 기쁘게 만드는 것,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행동들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 가언명령에 따른 행동)이다. 반면, 칸트의 인간성 정식은 정언명령이기 때문에 ‘적극적 목적’은 인간성 정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칸트는 정언명령인 인간성 정식에서 ‘목적’을 ‘소극적 의미에서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⁴⁶⁾ ‘소극적 목적’은 그것에 반(反)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예. 자기보존, 해악 금지)을 말한다. 여기서 반하는 행위란 남을 간섭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성)’, ‘목적’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인간을 소극적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판단 능력)을 지닌 자율적 존재임을 존중, 인정’하라는 것이다. (=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실천이성의 자율성을 존중하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도덕적 능력을 존중하라.)”⁴⁷⁾

이는 곧 침해 금지적인 소극적인 방식이므로(否定), 그 어떤 상황, 사람,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언적이다.

“제한적인 조건 없이 단적으로 선택한 의지라는 이념⁴⁸⁾에서는 모든 성취되어야 할 목적은 철저히 무시되어야 하기 때문에⁴⁹⁾, 목적은 여기서 성취되어야 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단지 소극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것에 결코 반해서 행위해서는 안 되며,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한낱 수단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각각의 의욕에서 존중되어야만 한다.”⁵⁰⁾ - 칸트

앞에서 공부한 수단, 목적의 개념을 종합할 때, 인간성 정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수능특강 20p

인간성 정식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 인간성 정식의 올바른 의미

①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이성을 지녔으며,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②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행동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행동할 때에만 다른 사람을 목적 자체로 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③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인간’임을, ‘이성적 존재’임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⁵¹⁾

그렇다면 인간성 정식을 문제 상황에 적용한 사례들을 검토해보자.

예시 1 자살을 하는 경우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자살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는 나는 나 자신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나는 나 자신이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존재, 즉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나는 나 자신을 목적으로서 대우하지 않고 단지 한낱 수단으로만 대우한 것이다.

예시 2 거짓말(거짓 약속)을 하는 경우⁵²⁾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가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통해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나는 친구를 목적이 아닌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했다. 우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거짓말은 보편적 도덕 법칙과 어긋난다. 따라서 친구의 자율적 이성인 ‘거짓말’이라는 잘못된 행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는 돈을 빌려 주었다. 이는 그가 도덕적 판단 능력(이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즉, 나는 친구가 이성을 지닌 도덕적, 자율적 행위 주체임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곧 친구를 인격적 존재, 목적적 존재로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예시 3 거짓 약속을 통해 타인을 돕는 경우

“어떤 가난한 청년이 불우한 소년 가장을 돕기 위해 돈을 갚을 의사도 없이 부자 친구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그 소년을 도왔을 때, 그 가난한 청년은 소년에 대해서는 목적으로 대한 것이며, 그 부자 친구에 대해서는 수단으로 대한 것이 되는가? 만약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타인의 행복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것이라면, 그 청년은 비록 부자 친구를 이용한 것이긴 하지만 소년에 대해서는 목적으로 대한 것이 될 것이다. (중략) 그러나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위해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중략)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례에서 왜 가난한 청년이 부자 친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불쌍한 이웃 소년에 대해서도 목적으로 대하지 못한 것이 되는지, 그리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 주는 것이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청년은 비록 불쌍한 이웃 소년을 위해주고 싶어 했지만, 청년이 택한 방법에 대해 그 소년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달리 말해서 그 청년은 소년의 이성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그 청년은 소년을 목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게 된다.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의 핵심은 타인이 자신의 이성과 판단능력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율적으로 내려진 그 판단이 타당성을 가질 경우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⁵³⁾

45) 인간성 : 인간의 이러한 특성을 말한다. 하지만 수능 생활과 윤리에서 인간성과 인간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46) 목적을 소극적 목적으로 구분지어 설명한 이유는 예시③과 이후 기출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7) 문성학 ‘인간 존엄성 테제에 대한 칸트의 증명과 문제점’, 대한철학회, 2005, 11면

48) 이 이념은 ‘성취하려는 조건 없이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이라는 칸트의 이념을 말한다.

49) 성취 목적은 행동의 조건이다.(가언명령) 따라서 그런 조건은 철저히 무시되어야 한다.

50)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옮김, 아카넷, P.189(B82), 독일어를 번역한 글이므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뒤에 나올 내용을 읽고 공부한 후에 읽는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1) Harry van der Linden, “Cohens sozialistische Rekonstruktion der Ethik Kants”, Ethischer Sozialismus, hrsg. Helmut Helmut (1994)

52) ①, ②, ④, ⑤는 모두 칸트가 직접 쓴 예시이다. 칸트는 선의의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칸트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도덕 법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다. 심지어 칸트는 살인자가 자신이 쫓고 있는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53) 문성학 위 논문, 11면

예시 4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경우

나는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학적 소질을 타고나는 행운을 얻었다. 하지만 나는 컴퓨터 오락을 하며 나의 타고난 소질을 녹슬게 방치하였다. 이것은 나 ‘① 자살’과 같이 자신을 해치는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정언명령을 위반하는 것(악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소질 계발을 한다면 아픈 사람을 돕는 등의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성적 존재자로서, 기꺼이 소질을 계발하고자 할 것이다. 즉, 나 자신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인간성 정식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의무’로 확장될 수 있다.

“자기 계발도 도덕적 의무 : 공부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자기 계발이다. 칸트는 자기 계발을 하지 않고 쾌락만 추구하면서 허송세월 하는 것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없다고 보았다.”⁵⁴⁾

예시 5 타인을 구제하는 경우

부자인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행복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다. 나는 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도울 마음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우한 것도 아니며, 그들이 나와 평등한 존재이고, 이성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소극적 목적으로 대우(침해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자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한다면 그 사람들은 인간성을 발휘하기 더 쉬울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배고픔, 고통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에 영향을 심하게 받을 경우,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예컨대, 너무나 가난해서 며칠 동안 밥을 굶은 사람은 배고픔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다. 고통은 사람이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단순히 ‘윤리적 존재’를 인정하는 소극적 자유에서, ‘윤리적 주체’가 성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확장된 의무로 이어질 수 있다.

■ 의무의 분류⁵⁵⁾ (①~⑤는 위 예시와 같음.)

	완전한 의무	불완전한 의무 ⁵⁶⁾
자기 자신	① 자살 금지	④ 타고난 소질 계발
타인	②, ③ 거짓 약속 금지	⑤ 타인 구제

이렇게 우리는 칸트의 인간성 정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했다. 기존의 해석이 배우기 쉬웠는지 모르지만, 오개념과 오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사고력 시험인 수능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 학습의 용이성과 편이성보다는 정확성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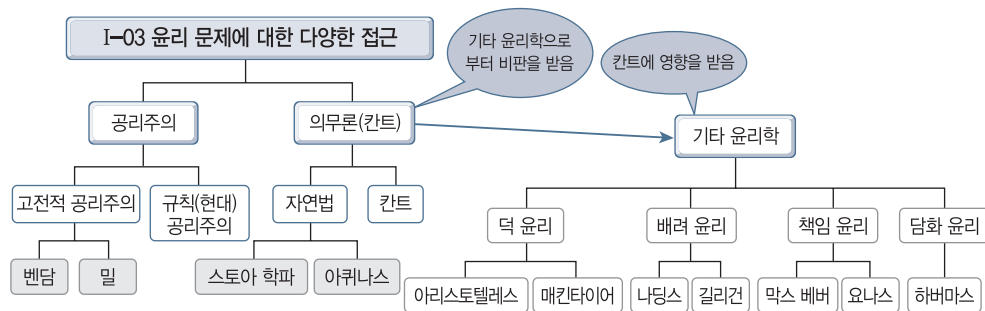
이제부터는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2016학년도 수능 해설에 적용해 볼 것이다.

● 칸트로 생활과 윤리 꿰뚫기

생활과 윤리의 개념들을 공부할 때, 칸트의 윤리에 영향을 받는 사상가들의 관계에 주목하여 개념을 정리한다면 개념들을 깊이 있고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칸트의 윤리와 생활과 윤리 내용 중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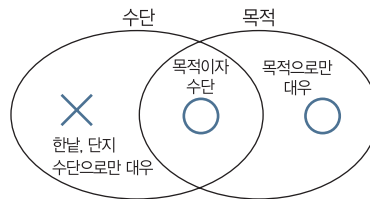
1단원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유사 : 의무론 윤리/담론 윤리 ↔ 상반 : 공리주의, 덕 윤리, 배려 윤리, 책임 윤리



2단원 생명, 성, 가족 윤리

‘낙태, 생식 보조술⁵⁸⁾, 자살, 안락사, 뇌사, 인체 실험⁵⁹⁾, 생명 복제, 유전자 조작, 성 상품화’에 대한 칸트의 입장 : ‘반대’ 인간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⁶⁰⁾, 단지 다른 목적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다.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음. + ~를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

- 낙태 : 태아(인간)를 사회적 이익(산모 이익 등)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 (목적으로 대우 ×)
- 생식보조술 : 여성을 임신과 출산으로 연계 될 사회적 이익 (불임 부부 이익 등)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 (목적으로 대우 ×)
- 자살 : 자신의 인격을 현재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 (목적으로 대우 ×)
- 안락사, 뇌사 : 인간을 경제적 이익, 장기 이식 등의 사회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 (목적으로 대우 ×)
- 인체 실험, 생명 복제, 유전자 조작 : 인간을 과학적 진보를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 (목적으로 대우 ×)
- 성 상품화 : 인간의 성을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 (목적으로 대우 ×)

54) 비상예류 P.33

55) 박찬규,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정초』 읽기』, 세창미디어, 2014년 1쇄 P.101

56) 완전한 의무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정언명령)를 말한다. ①, ②는 행위자 자신에게 온전히 달려 있는 것이므로, 자신이 올바른 의도를 지녔다면 그 자체로 의무를 지킬 수 있다. 반면 ④, ⑤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결과가 바르게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소질 개발 안 됨, 타인 구제 실패). 그래서 이를 불완전한 의무라고 칭한다. 이는 정언명령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할 경우 칭찬을 받는 의무를 말한다.

57) 이 그림들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공부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스스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58) 생식보조술이란 아기를 갖고 싶어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 불임 부부를 위해 인공적으로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 인공 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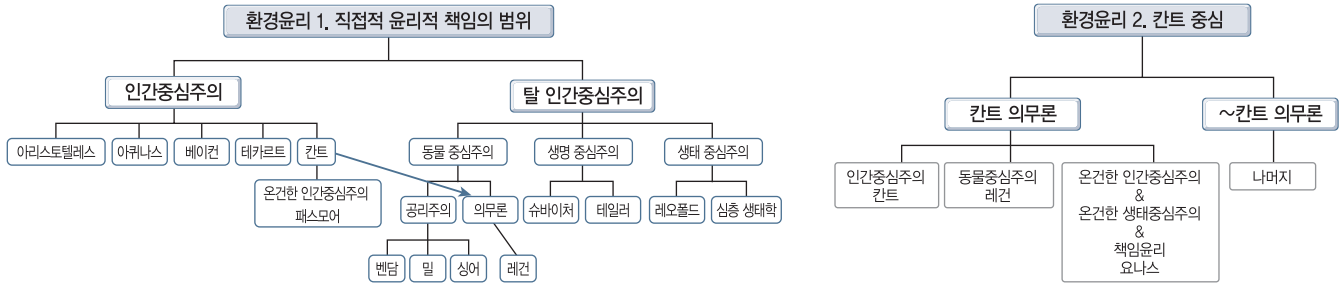
59) 인체 실험에서도 인간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대할 수 있다. 예컨대, 칸트는 인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인체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말은 곧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말이다.

60)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의 의미는 그 인간이 '도덕적 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임을 존중하고, 그것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3단원 환경 윤리

환경 윤리도 일반적인 분류로 나눌 수도 있지만, 칸트와 관련 있는 학자들을 묶어서 칸트와 함께 공부하면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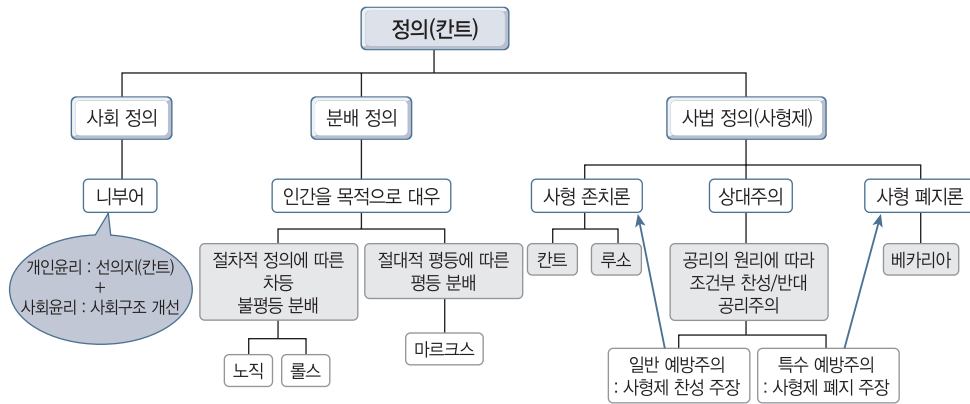
(2016학년도 수능 15번 문항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4단원 정의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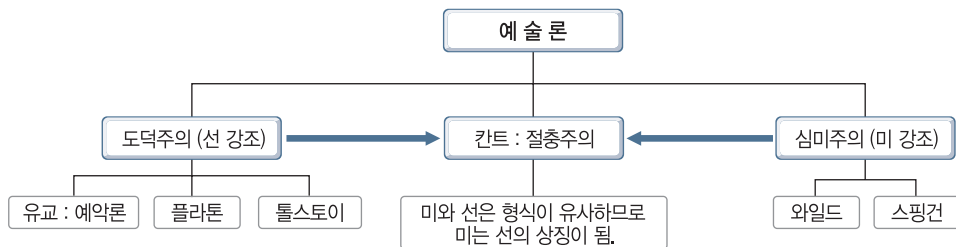
또한 칸트를 중심으로 분류하면 각 개념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쉽다.

(2016학년도 수능 19, 12, 9, 14번 문항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5단원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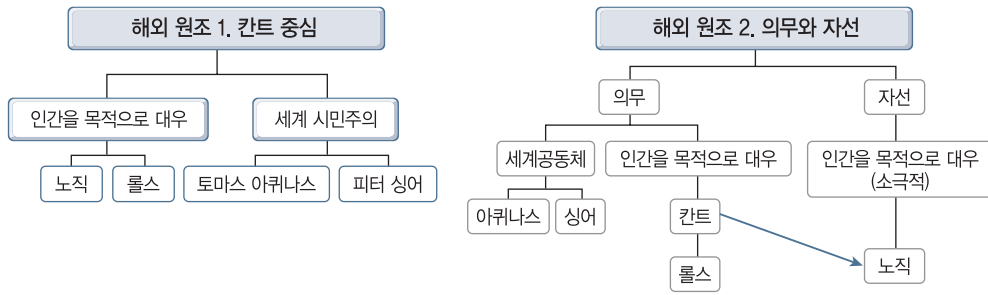
예술론도 칸트의 입장을 중심으로 잡으면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



6단원 해외 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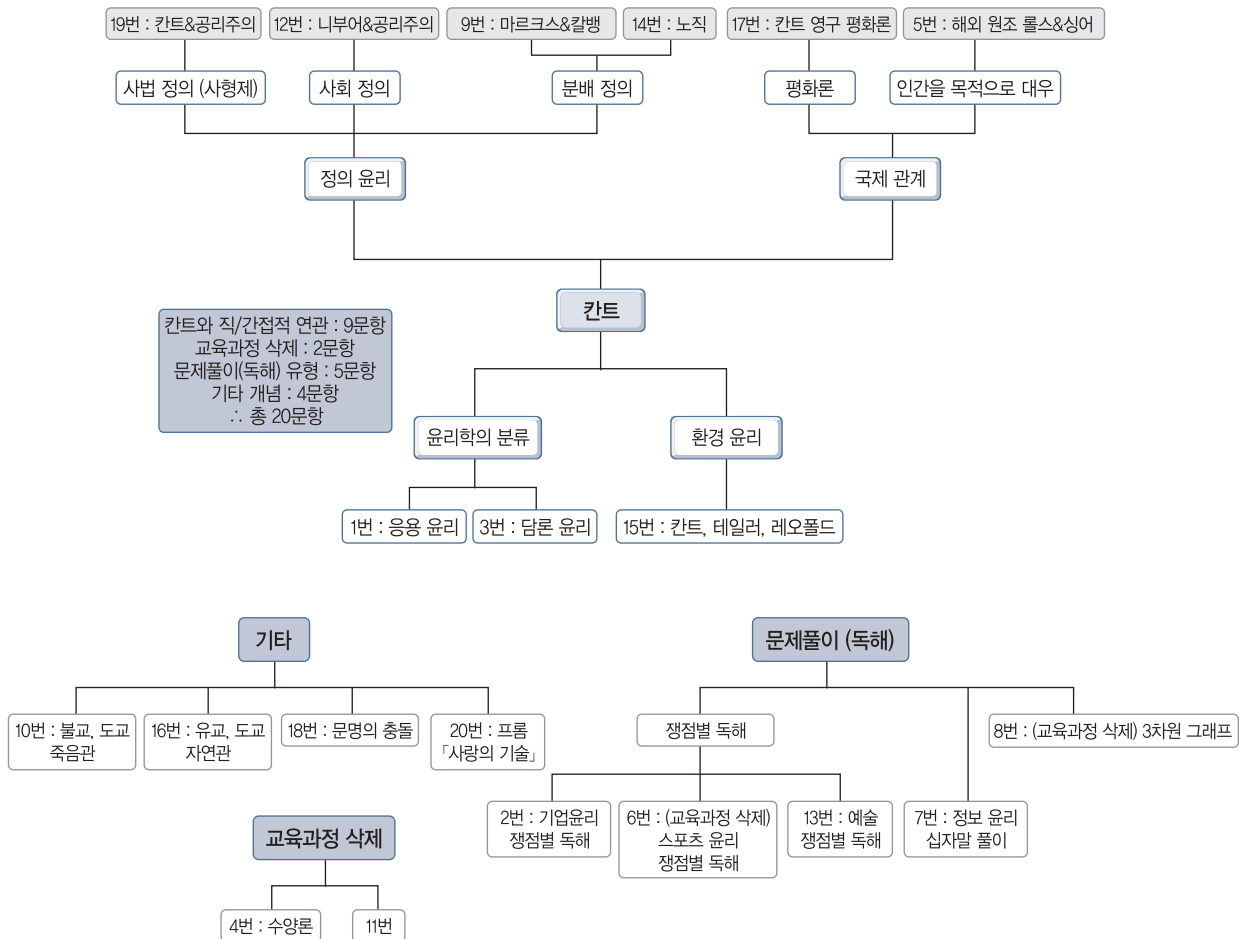
또한 칸트를 중심으로 잡으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2016학년도 수능 5번 해설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 칸트로 2016학년도 수능 꿰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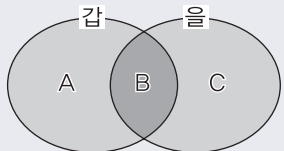
칸트의 윤리를 중심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수능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 칸트의 윤리가 2016학년도 수능의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해보자. (자세한 것은 각 문항의 해설에서 설명한다.)



칸트로 재해석한 2016학년도 수능

19 사형제 칸트 vs 공리주의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언명령이자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형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p> <p>을 : 형벌은 최대 행복의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형벌은 범법자에게는 교정과 무력화로, 다른 사람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범례> —</p> <p>A : 갑만의 입장 B : 갑, 을의 공통 입장 C : 을만의 입장</p> </div> </div>

— <보 기> —

- ㄱ. A :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 ㄴ. B :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
- ㄷ. C : 형벌의 부과는 공리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ㄹ. C :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현자의 돌 평

작년에 학생들은 공리주의를 사형제 ‘존치’ 입장으로 잘못 분류하곤 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사형제에 대하여 공리의 증감에 따른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리주의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일반 예방주의(사형 존치론)와 특별 예방주의(사형 폐지론)로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다.

(가)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같은 칸트이다. 칸트가 사형제 존치에 동의하는 이유도 인간성 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성 정식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수능특강 20p)

제시문에서 칸트는 ‘(1) 사형제는 정언명령이라서, (2) 사형제는 정의가 선형적인 법칙들에 따라 원하는 것이라서 존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1) 학생들은 ‘칸트는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형제를 옹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하지만 인간성 정식과 사형제는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시문은 사형제가 정언명령⁶¹⁾ 즉, 인간성 정식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오히려 칸트는 사형제를 통해 인간 존엄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 존엄을 구현한다는 것은 인간을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율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피해자의 희생된 생명, 인간성은 존엄한 것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오로지 희생된 생명은 같은 생명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비례적 응보주의). 이는 피해자의 인간 존엄을 구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인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살인자 또한 본질적으로는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성적, 자율적 존재이다. 그의 도덕적 이성은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간성이 존엄하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자신의 죄는 자신의 생명, 인간성으로만 갚을 수 있음을 알 것이다(비례적 응보주의). 그 도덕적 판단을 존중하여 살인범의 사형에 처하는 것은 그의 인간성을 현실적으로 실현해주는 것 즉, 인간 존엄을 구현하는 것이다.

“사형은 자신의 자율적인 행위 즉 스스로 저지른 살인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⁶²⁾

(2) 칸트에 따르면 ‘사형제’는 사심 없이 ‘공적으로’ 집행될 때 정의로운 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형 제도를 통한 정의 실현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성이 원하는 도덕 법칙과도 부합한다.⁶³⁾

을은 공리주의이다.

(가)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을은 공리주의다. 제시문에 따르면 (1) 형벌은 최대 행복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2) 형벌을 통해 범법자를 교정하고 무력화하고, 대중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가)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1) 최대 행복의 원리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칙을 말한다. 공리주의자는 공리의 원칙에 따라 사형제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즉, 공리주의는 사형제에 대하여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61) ‘정언명령’의 의미 : 칸트는 명령을 가언명령과 정언명령 두 가지로 나눴다. 가언명령이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한다.’와 같은 조건적 명령을 말한다. 정언명령이란 ‘의무이므로 정직해야 한다.’와 같은 무조건적 명령을 말한다.

62) 비상예두 P.181

63) 안진, 「살인 범죄자에 대한 인간 존엄의 실현 방법으로서의 사형 - 사형에 대한 윤리학적 성찰」,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PP.390~398에서 전개된 내용을 수능에 알맞게 변형

(2) 제시문에 따르면 공리주의는 범법자를 감옥에 가둬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무력화, 교정하고, 대중들에게 본보기를 보인다면 형벌이 가져다줄 피해보다 더 큰 공리의 증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오직 그런 경우에만 형벌은 공리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의 기출 제시문을 소개한다.

“법의 일반적 목적은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하면,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뿐이다.”⁶⁴⁾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와 공리주의의 입장을 명확히 대비시키는 문장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다.

칸트는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한다.” 이런 점에서 예방론과는 달리 응보론은 과거 지향적이며 회고적이다.”⁶⁵⁾

한편, 공리주의는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처벌한다. 여기서는 형벌이 세계 내 악의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며, 이런 점에서 이 이론은 전망적, 미래 지향적 성격을 띤다.”⁶⁶⁾

정답 해설

ㄱ. A : A는 칸트만 동의할 진술이 들어갈 자리이다. 칸트에 따르면, 살인범은 도덕 법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살인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살인범을 사형시키는 것은 살인범의 인격과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ㄱ에 동의할 것이다.

한편, 공리주의는 사형의 논거를 인격 존중이 아닌 공리의 원칙에서 찾았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자는 ㄱ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ㄱ : A’는 옳다.

ㄷ. C : C는 공리주의만 동의할 진술이 들어갈 자리이다. 공리주의자는 형벌을 공리의 원칙만을 따져서 부과할 것이다. 공리의 원칙에 따라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을 ‘일반 예방주의’라고 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특수 예방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공리주의자 을은 ㄷ에 동의할 것이다.⁶⁷⁾

한편,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지은 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일 뿐이다. 만약 사회적 이익(공리)을 위해 형벌을 가한다면 그것은 인간(범죄자)을 사회적 이익만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만 대우한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ㄷ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ㄷ. C’는 옳다.

오답 해설

ㄴ. B : B는 칸트와 공리주의 모두 동의할 진술이 들어갈 자리이다. 먼저, 칸트는 형벌은 응보로서만 가해져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한다고 본다. 따라서 칸트는 ㄴ에 동의할 것이다.

한편, 공리주의는 형벌을 보복이 아닌, ‘최대 행복의 원칙’만을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따라서 ㄴ : B는 틀린 선지이다. 한편, ㄴ은 B가 아닌 A에 들어가야 적절한 선지가 될 것이다.

ㄹ. 이 선지는 언어 논리적으로만 보아도 틀린 선지이다. ‘그 자체로 선’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말이다. 그런데 ㄹ은 ‘범죄 예방 효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사형이 그 자체로 선이라고 말한다. 이는 모순이다. 따라서 이 선지는 무조건 틀렸다.

개념적으로도 살펴보자. C : C는 공리주의만 동의할 진술이 들어갈 자리이다. 하지만 공리주의에게 형벌은 악이다. 왜냐하면 형벌이란 고통을 가하는 것인데, 공리주의는 고통을 본질적으로 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리주의는 형벌이 더 큰 악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 필요악으로 본다.⁶⁸⁾ 따라서 공리주의는 ㄹ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칸트는 사형제가 정언명령에 부합하기에 ‘그 자체로 선’이라고 본다. 하지만 칸트는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잘못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칸트도 ㄹ에 동의하지 않는다. ㄹ 진술은 A, B, C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다.

더 알아보기 (교과서 Base 개념 기본 & 심화 칼럼)

1) 사형제 Master 칼럼 : 사형제 존치론

① 칸트

‘수능적 탐구’라는 관점에서 2016학년도 수능 19번 ㄴ. 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교과서에서 칸트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으로 ‘응보 이론은 형벌의 본질을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⁶⁹⁾에서 찾는다.’고 서술한다. 이 문장은 수능 제시문과 선지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이다.

2015학년도 수능 6번 :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선지 ㄴ. B :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교과서의 ‘응보’란 무엇을 말할까? 응보란 ‘죄에 응당한 보복’이다. 이는 위 제시문의 ‘평등의 원리’와 같은 의미다. 즉, 칸트의 응보란 저지른 죄와 같은 종류, 정도의 형벌을 평등하게 주는 것이다.

이를 위 ㄴ 선지와 연결해보자. 여기서 ‘범죄의 경중에 비례’한다는 말은 죄와 형벌이 평등함을 말한다. 또한 ‘보복의 수단’이라는 것은 곧 사형제가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의미이다.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응보주의의 형벌의 비례성에 대한 서술이 있어 소개한다.

“응보주의적 관점에서는 처벌의 경중을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하여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거운 범죄는 무겁게, 가벼운 범죄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⁷⁰⁾

“칸트의 원칙은 비례 조건으로,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내려져야 정당하다는 것이다.”⁷¹⁾

그러면 2016학년도 수능 19번의 ㄴ 선지를 살펴보자.

ㄴ. B : 형벌은 보복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

64)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 ‘을’ 제시문
65) 변종필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응보, 예방, 그리고 회복과 연계하여」, 강원법학, 2015, P.20
66) 변종필, 위 논문 P.7
67) 변담은 ‘사형제 존치를 찬성하지 않는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다. 물론 변담이 사형제를 옹호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변담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종신형이 더 정당할 수 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공리주의는 의무론과는 달리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입장을 결정하는 결과주의(결과를 따지는) 입장이다. 따라서 변담을 단순히 찬성/반대로 구분하면 안 된다. (변담과 일반 예방주의를 착각하면 안 된다. 일반 예방주의/특수 예방주의는 사형제에 대한 공리주의적 입장을 구분해놓은 것일 뿐이다.)
68) 천재교육 P.156 “공리주의에서 처벌은 필요악으로, 처벌로 얻는 선한 결과가 처벌 때문에 발생하는 악보다 더 클 때에만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참고
69) 교학사 P.188
70) 미래엔 P.190
71) 천재교육 P.156

이 선지는 ‘형벌의 유일한 목적은 보복이다.’라는 의미로서, ‘형벌(사형제도)의 목적은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따라서 2016학년도 수능 L 선지는 옳은 선지이다.

추가적으로 선지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은 응보주의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를 끼친 만큼만 보복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응보주의와 칸트는 “칸트의 응보 사고의 근원에는 인간의 존엄에 관한 그의 정언명령이 자리 잡고 있다.”⁷²⁾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는 칸트의 다음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사법적 형벌은 단지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한 어떤 외적인 선의 수단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사법적 형벌은 항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인간은 단지 누군가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루어져서도 결코 안 되기 때문이며, 법의 대상들과 혼동되어서도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본래적 인격성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보호받는다. (중략) 형벌 받는 그 사람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형법은 정언명령이다.”⁷³⁾

여기까지 칸트가 사형제 존치를 주장한 이유들을 살펴보았다. 사형제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살인자(사람)를 죽이는 보복주의를 심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응보주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다음 인용문을 읽어보자.

“고대의 바빌로니아나 히브리 법전에서부터 근대의 칸트에 이르기까지 고전적인 응보론들은 대체로 도덕적 형평 문제를 응보론의 기초로 제시한다. 정의란 형평을 유지하는 저울과도 같다. 사회 속에서는 모두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도덕적 형평이 유지되지만 누군가가 범행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침해할 때, 이 평형은 깨어져 도덕적 불균형이 야기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문제의 범행자를 처벌하는 것으로써 그 균형을 다시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균형과 대칭이라는 관념이 응보론 밑에 깔려 있다. “처벌이 응분과 일치해야 한다.”는 응보주의의 기본 규칙은 바로 이런 관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응보주의는 범행자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정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자비란 범행자가 응당 받아야 할 처벌에 비해 보다 완화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응당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 부정의일 뿐만 아니라, 자비는 선택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 부정의도 초래한다는 것이다.”⁷⁴⁾

• 해설



정의란 평형을 유지하는 저울과도 같다. 따라서 정의로운 처벌이란 범죄의 경중을 저울로 측정하듯 비례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범죄와 형벌이 동등할 때만이 범죄로 인해 깨어진 도덕적 평형을 회복시킬 수 있다. 즉, 형벌은 오로지 응보(보복)만을 위해 사용될 때만 정의롭다.

② 루소

루소는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사형제도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먼저, 루소는 사회 방위론적 성격을 지닌다. 루소는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맺어서 자신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본다. 그 계약의 목적 중 하나가 생명의 보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형 제도를 인정하며, 범죄 예방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

둘째, 루소는 응보론적 성격을 지닌다. 살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도 빼앗길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이다. 루소는 일반의지의 총체인 주권(국가를 운영하는 의지)이 개인들로부터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인자는 사회계약을 어겼다는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물론 루소의 응보론적 성격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극히 낮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사형제도 찬성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자.

장 자끄 루소의 사회 계약론 (1762년) 제 2권.

5장. 삶과 죽음의 권리 (사형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

이 질문은 자주 제기된다. 어떻게 개인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데, 개인이 주권자(현자의 돌 : 일반의지의 총체)에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할 수 있는가? 개인들 자신도 갖지 못하는 권한을 어떻게 양도한다는 것인가? 이 질문은 잘못 제기되어 답하기 어렵다. 모든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게 할 권리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불이 난 건물에서 탈출하고자 자신의 몸을 창밖으로 내던진 이가 자살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해진 적이 있던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 폭풍을 만났다 죽었다고 해서, 자살에 대한 죄를 묻은 적이 있던가?

사회 계약의 목적은 사회계약을 맺은 계약자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 계약을 지키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계약을 지킬 수단을 찾을 것이다. 그 수단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심지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한 필요할 경우, 자신의 생명을 타인의 생명을 위해 내어 주어야 한다. 게다가 법이 시민에게 그 위험성을 감당하라고 요구할 때 그 시민은 더는 그 위험에 관해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군주가 “네가 죽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시민은 죽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국가, 군주)이 그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의 삶은 자연이 베푼 은혜일뿐만 아니라, 국가가 조건부로 선물해준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에게 가해진 사형 제도는 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살인자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인을 할 경우, 사형에 처해지는 데에 동의할지도 모른다. 이 계약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교수형을 당할 것이라고 짐작하지 않는다.

게다가, 사회 계약을 공격하는 모든 범죄자는 반역자로 명명되며, 국가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경우, 국가를 보존하는 것과 그 범죄자를 보존하는 것은 모순된다. 따라서 그 범죄자는 반드시 소멸당해야 한다.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것은, 시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을 죽이는 것이다. 그 재판과 판결은 그 범죄자가 사회 조약(계약)을 위반했다는 증명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 국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자로서 무리로부터 추방시키거나 혹은 공공의 적으로서 사형을 시켜서, 그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⁷⁵⁾

루소의 사형제에 대한 입장으로 출제될 수 있는 제시문은 무조건 윗글에서 나온다. 기존 기출, EBS 등의 루소 제시문도 모두 위 제시문의 변형이다. 올해 루소가 출제된다면 윗글에서 나올 것이다. 몇 번 반복하여 읽어보자.

72) 변종필, 위 논문 P.23

73) I.Kant, 『Political Writings』, London : New York, 1991, 154~155면

74) 박정하 외 6인 『칸트 『실천이성비판』_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P.52

75) 이 번역은 본 저자가 원문을 보고 직접 번역한 것이다. 정확한 디테일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2) 사형제에 대한 상대론적 입장 : 조건부 존치/폐지

① (벤담의)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형벌은 고통을 가져다주므로 그 자체로는 악으로 본다. 하지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형벌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모든 법률의 일반적 목적은 사회의 행복의 총계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해악을 제거하는 데 있다. 그리고 모든 형벌 그 자체는 해악이지만, 공리성의 원리에 따르면 보다 큰 해악을 제거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것도 용납될 수 있다.”⁷⁶⁾

여기서 볼 수 있듯, 공리주의 사상은 ‘법률 제정(Legislation)’ 즉 국가와 사회의 정책을 통해 공익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벤담이 올바르지 못한 행위(악행)에 대한 제재로 법률과 같은 외적 제재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리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된다.

• 일반 예방주의

“사형은 흉악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존치해야 함.”⁷⁷⁾

• 특수 예방주의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계도하고 재사회화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형은 범죄자의 목숨을 박탈함으로써 그러한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 사형제 반대

베카리아(사회계약론 + 공리주의자)

베카리아도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사형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칸트와는 달리 베카리아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베카리아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 사회에게 위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 계약을 운운하며 사형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베카리아에 따르면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일 뿐이다. 또한 그는 사형제가 아니라 오히려 종신형과 같은 지속성 있는 형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 뿐이다. 반면에 종신 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준다. 구경꾼은 수형자가 당하는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므로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크다. 처벌이 지속적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⁷⁸⁾

• 루소의 일반의지와 베카리아의 일반의사의 차이

루소의 일반의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공적인 의지만을 모은 것을 말한다. 한편, 각 개인의 특수한 이해(이익관계)와 관련한 특수의지는 일반의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의지는 오로지 사회의 공적인 판단만을 한다. 루소는 이러한 일반의지에 사형제가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는 정당한 것이라고 보았다.

베카리아의 일반의사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을 말한다. 또한 베카리아의 일반의사에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등의 특수 의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즉, 베카리아의 일반의사는 루소의 일반의지에 비해서 훨씬 덜 공적(公的)이고, 권한이 약하다. 한편,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가진 최대한의 자유이다. 따라서 일반의사에 근거한 사형제도는 생명권이라는 최대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79) 80)}

쉬어가기 사형제 쾨트 in the philosopher's cafe

[등장인물]



칸트 : 예외 따위는 없는
원칙주의자, 의무론자



루소 : 바람둥이, 자식들을
굶겨 죽인 무책임한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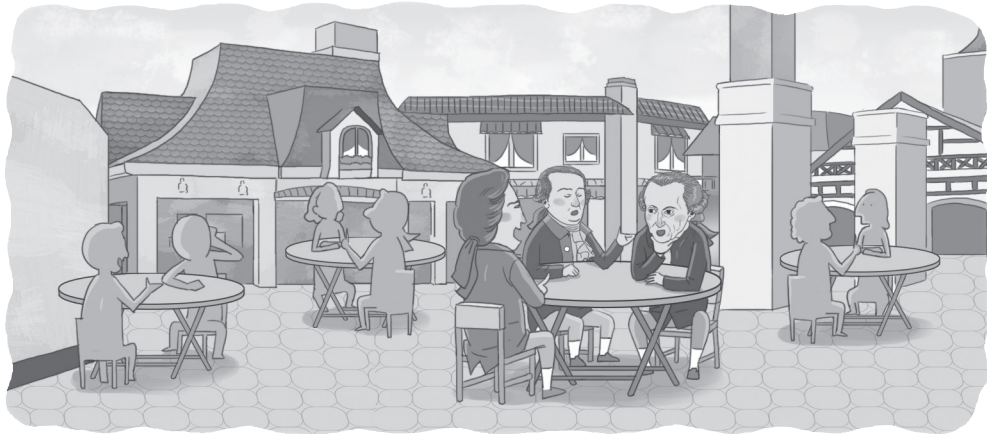


베카리아 : 베카리아는 사형,
싫어 싫어~



벤담 : 쾌락 쾌락, 아이 좋아~

오늘도 절친한 친구 칸트와 루소 그리고 베카리아는 현자의 돌 카페에 앉아서 철학 토론을 하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의 생명권”

칸트가 신문을 읽고 있다. 신문에서는 영국 철학자 벤담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벤담 : ‘뭐? 사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난 그런 거 몰라 헤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쾌락 헤헤 쾌락.... 형벌은 아파.. 아파.. 형벌은 악이야.... 그렇지만 형벌을 통해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흐...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쾌락은 증가해... 형벌은 필요악이야... 만약 그렇다면 나는 사형제에 찬성할지도... 좋아! 좋아! 쾌락 아이 좋아~.’

칸트 :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야. 인간의 생명권도 불가침이고 정말 중요한 거지. 벤담 이 섬나라 돼지 같으니라고, 아주 쾌락에 폭 빠졌구만... 인간의 생명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76) Jeremy Bentham,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P.170

77) 2017학년도 수능특강 P.124

78) 2017학년도 수능특강(올해) P.124 자료 플러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79) 홍성우, 『베카리아의 형벌론』,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PP.11~12

80) 일반의지와 일반의사의 차이는 수능에는 나오지 않지만 질문이 참 많은 주제라서 굳이 써놓았다. 그냥 읽고 넘기면 된다. ※ 베카리아의 일반의사는 몽테스키외 등의 일반의사와는 다르다.

루소 : “맞아, 그래서 그런 귀중한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사회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해. 벤담이 헛소리하는군.”

베카리아 : “오... 너희 모두 인간의 생명권은 불가침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칸트, 루소 : “당연한 소리를 하고 그래. ㅎㅎ 우리는 친구~”

베카리아 : “우리는 모두 사형제를 반대하는 동일한 입장인 거지? 개인은 국가에게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을 테니(양도 ×),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칸트, 루소 : “아니, 이 베카리아 보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살인자는 잡아다 사형을 시켜버려야지. 그게 바로 응보적 정의란 거다. 이놈아”

베카리아 : “뭐? 뭐 소리야! 너희도 인간의 생명권을 보호하자는 입장이잖아!”

칸트 : “ㄴㄴ... 베카리아 지금 뭐 소리 하는 거야. 난 인간의 인격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해. 타인의 생명을 해친 살인자는 그 살인자의 인격을 위해서라도 사형시켜야지. 그 살인자도 아마 속으로는(이성적으로는) 자기가 사형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루소 : “ㄴㄴ... 베카리아 지금 뭐 소리 하는 거야. 사회계약을 맺어서, 일반의지에 생명권을 양도해서, 생명권 보호하려고 했는데,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살인자는 계약을 위반한 거잖아. 그러면 그 살인자는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사회의 적이야. 사회 구성원이 아닌 적의 생명권 따위 ㅋㅋ 잡아다 죽여야지.” - 죽였으면 죽임당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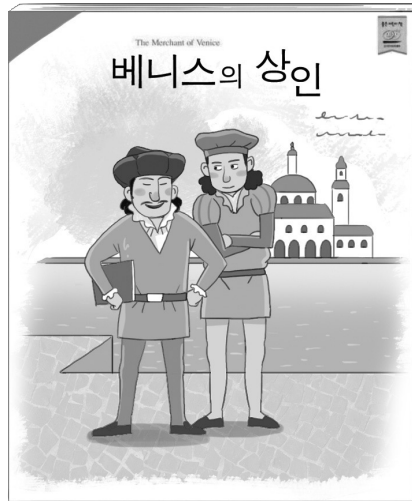
베카리아 : “너, 이 루소... 이 자식.” 부들 부들...

사형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구!!

1. 인간은 ‘오판 가능성’이 있으며
2. ‘생명권’은 타인이나 국가에 양도 불가능하며
3. 범죄 예방 효과 ‘사형 << 중신형’이라고!!!

칸트 :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인자는 사형이다. 사형은 사회적 유용성(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야. 사형은 오로지 살인에 대한 응보를 실현해서, 인격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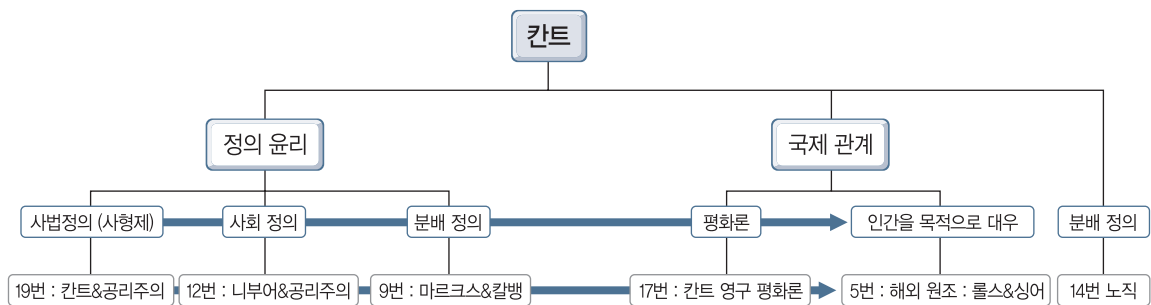
루소 : “살인자는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닥치고 살 1파운드를 내놓으세요. ㅋㅋㅋ”



칸트, 베카리아 : “어, 너 이 새끼! 샤일록 아니야? 우리 루소 어디로 숨겼어!!!”

2016학년도 19번 사형제 문항을 통해 사형제에 대한 칸트와 공리주의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사형제가 정의 윤리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그 밖에 사회 정의(12번 니부어, 공리주의), 분배정의(14번 노직)도 정의 윤리로 통합되었다. 나아가 정의 윤리의 개념은 국제 관계의 해외 원조와도 연관이 있다. 사형제에서 배운 내용을 연계하여 순서에 맞게 한 문제씩 살펴보자.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분배 정의 : 정의란 무엇인가?’ 칼럼을 통해 공리주의, 마르크스, 롤스, 노직 등 위 문항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상가들의 사상과 주요 논거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실제 12~14번 문항들을 풀어나갈 때는 칸트의 ‘인간성 정식’이 각 사상가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풀어나갈 것이다.

칼럼 2 분배 정의 : 정의란 무엇인가?

● 분배 정의 : 정의란 무엇인가?

‘철학은 시대에 복무한다.’라는 말이 있다. 철학은 그 시대의 부조리한 면을 파헤치고, 더 나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분배적 정의’는 그러한 철학의 본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일 것이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인류는 가난했고, 굶주렸지만 서로가 평등했고, 적은 양이나마 나누며 살아왔다. 그런데 신석기 혁명과 철기의 발명 이후 생산력의 비약적 증가가 일어나며 사회는 점차 복잡해졌고, 그에 따라 계층 구조도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가난했던 유년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든 인류는 분명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각자의 몫을 위해 다투곤 한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에,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느냐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재화는 항상 부족하다. 분배적 정의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가? 그리고 그 방식이 왜 정의로운가? 에 대한 철학자들의 사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고대 그리스 시절, 한 소피스트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며, 강자에게 유익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권력을 쥔 강자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르는 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일 수밖에 없다는, ‘정의’란 궤변에 불과하다는 통렬한 비판이었다. 힘들여 일하는 노예들과 평민들은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해나갈 정도의 몫을 분배받고, 대부분의 생산물을 귀족과 지주들이 차지하는 노예-주인 관계는 지난 수천 년간 반복되어온 분배의 질곡이다.

정의로운 분배는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례적 정의를 주장한다. 그에게 정의로운 분배란 자신의 자격에 상응하는(비례하는) 대가를 분배받는 것을 의미한다. ‘각자에게 그 몫을!’이것이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최초의 사유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좋은 아이디어에 그치고 말았지만 그 명맥은 끊기지 않고 근대로까지 이어진다.

1) 공리주의 → 19번 사형제, 12번 사회 정의 문항

약 2000년이 지난 18C, 근대의 심장이 요동치는 영국에서 새로운 ‘정의’가 세워진다. 1748년에 태어나 12세에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 15세에 법학 대학원에 입학, 19세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천재 제레미 벤담(J. Bentham). 그가 살던 시대의 영국은 산업혁명의 물결이 막 시작하던 시기였다. 법학을 전공한 젊은 천재 벤담의 눈에 도시 런던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 시대 영국의 산업 혁명의 양태를 한 번 살펴보자. 산업 혁명 이전의 대부분의 사람은 소작농과 소규모 자영농으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삶을 영위했다. 하지만 방직기의 발명으로 영국의 모직물 공업이 발전하자, 대 지주들은 자신의 농장을 모두 양을 기르는 목장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가난한 대다수의 빈농은 생계 수단을 잃고, 결국 도시의 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산업 혁명 당시 사람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공장 노동은 숙련된 장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 단순 작업을 실행할 부품으로써, 비숙련공이 필요할 뿐이었다. 가난한 빈농 출신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적은 임금을 받아가며, 공장에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들의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는 모두 귀족과 공장주들의 몫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와 다름없는 상태의 삶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벤담은 생각했다. 영국에서 벌어지는 분배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분배는 무엇인가? 어떤 방식이 정의로우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벤담과 그의 동료들은 정의로운 분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결국, 그들이 내건 정의로운 분배란 바로 ‘공리의 원리’. 공리의 원리(Principle of utility)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벤담의 구호로 요약될 수 있다. 벤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에 놓여있다. 따라서 윤리적 옳고 그름이란 오로지 쾌고 감수능력에 달린 것이다. 쾌락을 증가시킨다면 그것은 옳고, 고통을 증가시킨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공리의 원리는 쾌고 감수능력을 지닌 인간에 대한 동등성으로 이어진다. 공장 주인의 쾌락과 노동자의 쾌락은 같다. 만약 공장주인 1명의 쾌락을 증진하기 위해 노동자 1000명, 100명, 아니 2명을 고통을 늘린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행위이다. 따라서 영국의 공장 노동은 옳지 않은 행위이다. 공리의 원리에 따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여,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벤담은 나름대로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의’에 대한 이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산업혁명의 태동기를 살았기에, 얼마나 더 끔찍한 미래가 펼쳐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이제 19C 벤담이 경험했던 산업혁명 시대보다 상황은 더 나빠졌다. 공장주들은 반세기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공장제 기계 공업을 더욱더 발전시켰으며, 동시에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술도 향상시켰다. 공장 경영자는 성인 남성이 아닌 품삯이 적게 들어가는 아동과 여성들을 고용하며 최저 12시간에서 20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장시간의 노동을 시키며 부려 먹었다. 이 시대에는 심지어 5세 미만의 아동들을 그렇게 부려 먹기도 했다. 그런 극한의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는 모두 귀족과 자본가 계급의 몫이었고, 대부분의 사람은 노예와 다름없는 상태의 삶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2) 마르크스 → 9번 노동관(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분배 정의) 문항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한의 시대, 19C 영국에서,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듯 노예-주인이라는 역사의 질곡을 노동자의 두 손으로 박살 내자는 새롭고 근본적인 사상이 출현하였다. 바로 칼 마르크스(K.Marx)의 ‘공산주의’ 사상이다.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에서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세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왔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등 이전 철학자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를 생각해왔을 뿐 실제로 정의를 실현하지는 못했다. 마르크스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공산당선언>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앞을 것이라고는 쇠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Workers of the world, unite!)’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노동은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보았다. 노동자는 공장의 기계를 돌리는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노동은 공장주의 명령에 따른 비자발적인 노동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생산된 재화들은 대부분 공장주, 자본가의 몫이 된다. 이러한 착취는 잘못되었다. 이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를 거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공산주의적 분배 정의가 실현된 이상향을 꿈꿨다.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가 없고, 계급이 소멸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사라지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금지되고, 사유재산 또한 소멸한 사회이다. 우선, 마르크스에게 국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또한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노동자 계급)가 단결하여 폭력 혁명을 통해서, 국가를 소멸시키고, 궁극적으로 계급을 소멸시켜서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결과적 평등이 실현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20C. 결국, 마르크스의 이상인 공산주의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착취하고, 소수가 그 이득을 챙기는 부정의한 분배는 점차 완화되어갔다. 현대 사회에서 정의는 더 이상 강자만의 것이 아니다. 소수가 독점하던 재화는 재분배된다. 부자는 막대한 세금을 내고, 정부는 부자의 세금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최소 생계를 보장한다. 복지 국가의 출현이다. 그러한 복지국가의 이념은 ‘존 롤스’의 정의론에 그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주의

일반적으로 마르크스 사후 발전한 마르크시즘에서는 국가가 폐지된 이상사회인 ‘공산주의’와 과도기적 사회인, ‘사회주의’를 구분한다.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노동자를 위해서, 계획에 따른 생산과 공정한 분배를 담당한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육과정에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오기도 한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산과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교환, 분배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⁸¹⁾

3) 존 롤스 → 14번 분배 윤리 문항, 5번 해외 원조 문항

롤스는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닌 정의로운 원칙에 따라서 재화를 분배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과 업적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역사적-사회적인 요소들에 따라 결정되는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엠마 왓슨은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을 통해 사회적 명성과 수백억의 자산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엠마 왓슨의 외모와 재능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것이며, 그녀의 성공 또한 영화배우를 높게 평가하는 현대 문화의 사회적 혜택에 따른 우연의 결과이다.

또한 롤스는 이익 극대화가 아닌 정의로운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 정의로운 원칙에 따른 분배가 전체 이익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정당하다.

롤스는 평등한 결과가 아닌 공정한 원칙에 따른 결과를 긍정한다. 그 원칙에 따라 분배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적 불평등은 공정하다.

롤스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 개인들이 무지의 베일을 써 자신의 입장을 모르는 원초적 상황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들은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자신이 강자일지 약자일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상황에서는 개인들은 평등한 합의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도출된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만족하는 것이다.

그렇게 도출된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제 1원칙: “모든 사람은 자유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
- ② 제 2원칙: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을 충족시킬 때만 허용될 수 있다.”
 - a.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가장 큰 도움)을 보장해야 한다. ⇒ 최소 극대화
 - b. 기회 균등의 원칙: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직무나 직위들은 기회의 평등에 따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우선, 제 1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하다.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상황에서의 개인들은 자신이 어떤 사회적 상황에 처해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기본적 자유⁸²⁾에 있어서는 만인이 평등할 것을 합의할 것이다. 제 1원칙에 있어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제 1원칙은 제 2원칙에 항상 앞선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제 1원칙은 절대로 제한될 수 없으며 항상 우선한다.

다음으로, 제 2원칙은 ‘결과의 불평등’을 정의롭게 보정⁸³⁾한다.

②-b 기회 균등의 원칙: 제 1원칙에 의해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받겠다고 해도 타고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업과 부의 획득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쓴 개인들은 공직이나 좋은 직업 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고 합의할 것이다. 예컨대, 여성 할당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자연적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다고 해도 그런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②-a 차등의 원칙: 물론 성공한 사람은 동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경쟁해서 승리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그의 노력이 ‘자연적 재능’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에서 중시하는 가치’(사회적 우연성)들과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통해 얻은 이익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의 이익을 세금으로

거둬서, 사회에 ‘재분배’해야 한다. 특히,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이다.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는 말은 ‘최소를 극대화(Maximin)한다’는 의미이지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구성원 중 가장 큰 몫의 분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컨대, A 제도에서 갑이 150 을이 70 병이 10을 분배받고, B 제도에서는 갑이 100, 을이 70, 병이 30을 분배받는 제도가 있다면, 두 제도 중 최소 수혜자인 병이 더 많은 양을 분배받은 B 제도가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분배 제도일 것이다.

이때,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한다는 것’은 동시에, 최대 수혜자와 최소 수혜자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도 연쇄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84) 85)}

이렇게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 분배한다는 의미에서, 롤스의 정의론은 절차적 정의론이다. 이때,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의 의미를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선지

㉔ : 롤스는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보는가? ⇒ 오답 선지 비율 : 54%, 정답률 : 30%

작년 6월 평가원 5번 문항은 70%의 학생들이 틀린 문항이다. 특히 선지 ㉔은 54%의 학생들이 고른 함정 선지였다. 일반적인 선지 ㉔의 해설은 “‘취득, 양도’의 절차를 강조한 것은 노직이므로, ‘노직’의 입장에서 옳은 선지이다.”이다. 그러나 이는 일관성 없는 잘못된 해설이다. 그런 논리라면, 9월 평가원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공정한 재분배에 항상 앞선다고 본다.’⁸⁶⁾라는 선지도 노직이 동의할 것이므로, 틀린 선지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9월 평가원의 정답 선지였다.

해당 문항은 선지 ㉔을 ‘롤스’의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말한다. 학생들이 이 선지를 틀린 것은 노직이 ‘취득 및 양도의 절차’를 강조한 것을 몰라서 아니다. 롤스의 입장에서 ‘취득 및 양도의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지 ㉔은 롤스의 ‘절차적 정의’와 관련하여 해설해야 한다.

이 선지는 다음 선지와 동일한 것을 물어보고 있다.

• 2014학년도 수능, 7번 선지

㉕ : 롤스는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간주하는가? ⇒ 정답률 : 63%

2014학년도 수능 이후 학생들은 롤스는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공부했다. 롤스의 ‘절차적 정의’는 더 이상 어려운 개념이 아니어야 한다. 하지만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선지 ㉔>는 분명 롤스의 ‘절차적 정의’를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0% 이상의 학생들이 ‘롤스의 입장에서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를 옳은 선지로 선택했다. 이것은 선지 ㉕ 문장을 단순히 암기했을 뿐 롤스의 ‘절차적 정의’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81) 변순용 외 8인, 천재교육, 2015 제2판, P.155

82) 정치적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83) 보장과는 다르다. ‘보장 :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

84) 존 롤스, 『정의론』, 이학사, 2015, P.129

85) 최대-최소 수혜자 사이의 사람들은 최소한 최소 수혜자의 증가된 이익보다는 많은 이익을 보장받는다. (항상 을(사이의 사람) > 병(최소 수혜자))

86) 2016학년도 13, 2번 선지(정답, 롤스의 입장. 옳은 선지), 노직은 ‘재분배’를 반대하고, 개인들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주장하며, 그 선지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롤스의 절차적 정의란, 순수한 절차적 정의로서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들은 제 1, 2원칙을 합의하였고, 합의된 원칙에 근거한 절차에 따른 결과는 정의롭다는 것이다.⁸⁷⁾ 선지 ㉔에서는 취득, 양도의 절차가 공정성(정의)을 담보 하느냐고 묻고 있는데, 롤스에게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취득, 양도의 절차’가 아닌 ‘정의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즉, 롤스는 ‘취득, 양도의 절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다.⁸⁸⁾

예컨대, 만수르가 100억 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취득, 양도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구입했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만수르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왕족으로 태어나서 수십조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운이므로 정당하지 않다. 만수르의 부는 왕족과 평민의 신분적 구분에 따른 것이므로 제 1원칙, ‘기본적 자유의 평등’에 위배되며, 왕족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㉔-b. 기회균등의 원칙을 충족하지도 못한다. 만수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공정한 취득 및 양도 절차에 따라 구입한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롤스가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만수르가 자신의 부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등 ㉔-a. 차등의 원칙을 지키려 해도 제 1원칙에 위배되므로 만수르와 평민 사이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제 1원칙은 제 2원칙에 항상 앞선다.)

한편, 차등의 원칙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두 분배 제도를 가정해보자.

	갑	을	병	총합
A 분배 제도	80	80	80	240
B 분배 제도	150	120	60	330

A 제도는 ‘평등 분배’ 제도이고, B 제도는 ‘차등 분배’ 제도이다. 총합도 $A < B$ 이다. 롤스의 입장에서 어떤 제도가 더 정의로운 분배를 만족하는 제도인가? 당연히 A 제도이다. 왜냐하면 A 제도의 최소 수혜자가 분배받는 양이 B 제도의 경우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편, 차등의 원칙을 잘못 이해한 경우, A 제도는 평등 분배이고 B 제도는 차등 분배라서 차등의 원칙에 따라 B제도를 정의롭게 볼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4) 노직 → 14번 분배 윤리 문항, 5번 해외 원조 문항

롤스의 정의론은 큰 정부, 복지국가를 필요로 한다. 복지국가는 인류의 삶을 향상시켰지만, 동시에 정부 조직의 비대화와 공무원들이 방만을 가져왔다. 미국의 철학자 노직은 이 점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노직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노동과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전적인 소유권을 지닌다. 합법적인 취득 및 양도의 절차에 따른 소유물은 오로지 개인의 것이며 국가가 빼앗을 수 없다. 국가는 거래의 안전 보장, 부정한 계약의 감시와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부자의 세금을 걷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부자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과 다른 없는 부당한 행위이다.

분배 정의에서 ‘분배’와 ‘재분배’의 차이를 학생들이 모르고 있다.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자.

•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3, 5번
 ‘노직은 최소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

분배적 정의 : 정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가운데 분배, 혹은 재분배의 문제에 집중하여 다루는 정의에 대한 논의를 통칭하는 말
 (Justice, 243p, 마이클 샌델)

분배적 정의에서 ‘분배적’이란, 한정된 재화를 나누는 과정으로서 재분배 과정까지 포함한다. 반면, 재분배란 분배 과정의 일부로서 일차적으로 나뉜 자원을 정부가 세금을 통해 거둬들여 사회적 약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노직은 최소국가를 긍정하지만 재분배는 철저히 반대했다. 심지어 노직은 분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싫어한다.

“노직은 경제적 정의가 중앙 집권적 분배 과정에 의해서는 성취될 수 없다고 본다. 그는 오직 최소 국가에 의해서만 경제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히려 ‘분배적 정의’보다는 ‘소유에 있어서 정의’라고 부르기를 더 선호한다.”⁸⁹⁾

이렇게 우리는 공리주의, 마르크스, 롤스, 노직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앞 도표에 제시된 순서대로 문항들을 공부해보자.

87) 헌법, 법률, 제도, 사회의 규칙, 분배 방식 등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야만 정의롭다.

88) 엄밀하게 말하자면, 롤스의 이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사회 구조, 경제 구조 등)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다. 그런데 취득, 양도는 개인 간의 사적 행위이다. 따라서 롤스가 분배 결과를 공정하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개인 간의 사적 행위에서의 절차적 공정성 이상의 공정성(정의의 원칙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용하여 형성된 사회 구조 등)이 필요하다.

89) 2017학년도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P.122 / 노직은 분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싫어한다. 하지만 교육과정 상 노직은 분배 정의에 포함된 학자이고, 따라서 노직의 입장에서 ‘분배’라는 단어를 쓴다. 물론 이때 노직은 국가에 의한 분배를 강제 노동과 같다고 본다.

칸트로 재해석한 2016학년도 수능

12 사회 정의 벤담(공리주의) vs 니부어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공리의 원칙은 이러한 복종 관계를 인식시켜주고, 이성과 법률의 손길로 틀을 짜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기초이다.

을 :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집단의 도덕은 자연적 충동에 버금갈 만한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하다.

- ① 갑은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다고 본다.
- ② 을은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이 같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보다 개인이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사회의 이익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본다.
- ⑤ 갑, 을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현자의 돌 평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니부어가 1단원에 수록된 사상가로서, 항상 단독 문항으로 어렵게 출제되곤 했다. 하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 니부어는 4단원 ‘사회 윤리와 직업 윤리’의 일부분에 속하게 되었다. 니부어의 출제 경향도 바뀌었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과 수능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니부어가 롤스/공리주의와 묶여서 새로운 시각으로 출제되었다. 앞으로는 니부어 개념만 따로 공부하기보다 다른 사상가들과 비교를 하며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시문 분석: 사실적 이해 > 꼼꼼한 해설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갑은 벤담(공리주의)이다. 벤담은 인간을 쾌락과 고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보았다. 또한 공리의 원칙이 이성과 법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⁹⁰⁾

을은 니부어이다. 위 제시문은 (1)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성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집단의 도덕은 자연적 충동과 맞먹을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 어렵다. (3)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위 제시문은 (1) 인간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요소인 '이기심'을 말하고 있다. 니부어는 기존의 개인 윤리를 강조하는 학자들이 인간의 '이기심'의 힘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이성은 힘이 약해 이기심을 통제하기 어렵다. 특히 (2) 개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사회에서는 '자연적 충동' 즉 이기심이 심화되기 때문에 (3) 사회 집단의 도덕은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니부어는 사회 집단의 비도덕성을 법과 제도와 같은 '사회적 강제력'을 통해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러한 강제력은 항상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합리성에 근거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선의지와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은 강제력은 사회 집단의 비도덕성을 심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⁹¹⁾

(자세한 내용은 뒤 니부어 칼럼을 확인하자.)

정답 해설

㉔ 사실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도 니부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알았을 것이다. 문제는 '갑(벤담)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가?'이다.

• 갑(벤담)의 입장

벤담 또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제시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의 '법률'이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강제력을 말한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다고 추론할 수 있다. 혹은 더 나아가 '공리의 원칙'을 이해한다면 정답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다. 우선, '공리'란 이해관계 당사자 즉, 사회의 구성원 전체의 '공중적(公衆的) 쾌락'⁹²⁾의 총합을 말한다.

'공리의 원리'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벤담은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른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되었다.”⁹³⁾

따라서 제시문에서의 '공리의 원리가 법률의 기초'라는 의미는 '사회적 문제들을 법률을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물론 이 정도 내용만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 선지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90)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 사항제 해설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다.

91) '사회적 강제력'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사용될 때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92) 박찬구, 『우리들의 윤리학』, 서광사, 개정판 1쇄 2014, P.80

93) 박찬구, 위 책, P.84

알아보자. 벤담은 공리주의 사상을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Legislation)’ 즉 국가와 사회의 정책을 통해 공익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벤담이 쓴 책 제목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이다.) 그러므로 벤담이 올바르지 못한 행위(악행)에 대한 제재로 법률과 같은 외적 제재를 강조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을(니부어)의 입장**

제시문 해설에서도 말했듯, 니부어는 사회는 비도덕적이므로 사회적 강제력을 통해서 그런 비도덕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㉔에서 말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선지와 일치한다. 따라서 ㉔는 옳은 선지이다.

오답 해설

㉑ 갑은 벤담(공리주의)이다. 벤담은 결과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제시문에 따르면 법의 시행은 쾌락과 고통의 증감에 따라 옳고 그름이 나뉜다 (공리의 원칙). 즉, 공리주의는 법의 결과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㉒ 을은 니부어이다.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집단의 도덕은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하므로 이타성을 이상으로 삼을 수 없다.⁹⁴⁾ 대신 사회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사회 집단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은 시도해볼 만하다. 그래서 니부어는 사회의 도덕적 이상을 정의라고 보았다. 이는 6월 평가원에서 출제된 선지와 같은 맥락이다.

“니부어와 롤스는 정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보았다.”⁹⁵⁾

㉓ 이 선지가 맞으려면, 갑(벤담)이 ‘사회 도덕성 < 개인 도덕성’이라고 보는 동시에 을(니부어)이 ‘사회 도덕성 < 개인 도덕성’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을은 사회 도덕성 ≥ 개인 도덕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단, 벤담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기 어렵다. 실제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서도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다. 수능에서도 대부분의 학생이 벤담의 입장이 아닌 니부어의 입장을 바탕으로 이 선지가 틀렸음을 판정했을 것이다. 먼저 니부어의 입장을 살펴보자. 제시문에서 니부어는 ‘집단의 도덕 < 개인의 도덕’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㉓ 선지의 ‘을과 달리’와 제시문은 서로 반대되는 설명이므로 틀린 선지이다.

그렇다면 벤담의 입장은 어떠한가? 제시문에 따르면, 벤담은 인간의 본성을 도덕적이라기보다 쾌락과 고통에 따라 움직이는 즉, 자신의 이해 (Self-interest)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보았다. 또한 벤담은 개체주의 사회관의(사회 명목론적인)⁹⁶⁾ 입장에서 사회가 단지 개인들의 합일뿐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회 도덕성 < 개인 도덕성이라고 생각했을지는 의문이다.

㉔ 이 선지는 ㉑과 반대로 갑이 사회의 이익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보지 않으며, 동시에 을이 사회의 이익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봐야 맞는 선지이다. 우선, 갑(벤담)은 선지㉑ 해설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 합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또한 개인들의 이익의 합이 곧 사회의 이익이라는 공리설을 주장한다.

따라서 갑은 이 선지와는 다르게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사회의 이익으로 볼 것이다. 반면, 을(니부어)은 개인은 이타적인 존재라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이타적 행동)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본 반면, 사회집단은 개인보다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자신의 이익만을 끝없이 추구하려고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니부어는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사회집단의 이익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 선지는 완벽히 틀렸다.

⇒ 오답 원리: 이 선지는 갑과 을의 자리를 바꾸었다.

더 알아보기 (교과서 Base 개념 기본 & 심화 칼럼)

1) 개념 칼럼 : 니부어

니부어는 기독교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이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예일대 신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며 신학을 공부했다. 그 후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공업 도시에서 목회 활동을 하였다. 니부어는 목회 활동을 하면서 공장주(상류층)들이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착취

하는 모습을 보았다. 니부어는 그런 착취를 개선하고자 디트로이트 시의 기업가, 공무원, 정치인들을 만나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수단인 대화와 설득을 시도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그렇게 개인 윤리적 해법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던 니부어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미국에 대공황이 찾아 왔고, 그 대공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나빠져 갔다.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한 것은 기도도, 대화와 설득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라는 경제 정책과 법률이었다. 뉴딜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지켜본 니부어는 사회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다루는 ‘사회 윤리’를 발전시켜나갔다.

니부어는 개개인은 악한 마음(이기심)과 선한 마음(이타심)을 갖고 있지만,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기고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회 집단은 개인과는 달리 오로지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한다. 즉, 사회는 개인보다 비도덕적이다. 왜냐하면 개인은 선의지(도덕성)와 이성(합리성)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억누를 수 있지만, 집단의 이기심은 개인들의 이기심이 모여 심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기심을 이성이나 도덕성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집단적 이기심은 사회적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니부어는 사회적 차원의 강제력(법률, 제도, 정책 등)을 통해 그러한 집단적 이기심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사회적 강제력은 비록 개인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 눈에는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니부어는 오히려 사회윤리에서는 개인윤리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비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야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그러한 사회적 강제력이 잘못된 손에 들어간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적 강제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합리성과 도덕성에 기반을 두어야만 한다. (도덕성 기반 + 사회적 강제력)⁹⁷⁾

이러한 점에서 니부어는 칸트와 연결될 수 있다. 칸트는 “이 세계 안에서, 아니 그 밖에서조차도 무조건적 선한 것으로서 선의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⁹⁸⁾라며 선의지,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또한 칸트는 그러한 도덕성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법⁹⁹⁾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물론 그러한 법은 개인들의 도덕적 이성에 부합해야 한다.

니부어도 인간의 선의지를 존중하였고, 그러한 선의지가 개인 윤리적 관점에서는 실현될 수 있으나, 집단 윤리적 관점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법과 같은 사회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니부어도 칸트와 마찬가지로 법과 같은 사회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니부어도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차이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다.

94) 이타성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 이기심은 ‘자신의 이익(Interest)에 관심을 갖는 것.’

95)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5번 선지 ㉔

96) 사회탐구 사회문화에서 배운다. 생활과 윤리에 나오는 용어는 아님.

97) 쉽게 말해 사회적 강제력은 비합리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그 수단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예. 사랑의 매 →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OK), 가정폭력 → 자식에게 고통을 줌(NO))

98) 칸트, 윤리형이상학의 정초의 첫 문장

99) 마치 사형제도와 같음.

칸트로 재해석한 2016학년도 수능

9 마르크스 vs 칼뱅 : 마르크스 : 칸트의 인간성 정식적 해석 수단 & 목적 칼럼, 칼뱅 칼럼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자본주의 정신과 문화는 지속적, 체계적, 현재적인 직업 노동을 최고의 금욕 수단으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에서 태어났다. 이 정신이 자본주의 윤리의 기초이다.

을 : 자본주의에서 사유 재산은 소외된 인간 생활의 표현이다. 사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면 모든 소외가 지양되어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

- ① 갑은 프로테스탄티즘이 세속적 삶을 위해 부(富)를 지향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자발적 노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노동을 통한 자본의 형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필요에 따라 분배가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노동의 분업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 현자의 돌 평

(을) 마르크스의 윤리 이론도 칸트의 인간성 정식의 영향을 받았다. 이를 뒤에 나올 칼럼을 통해 알아 볼 것이다.

마르크스가 개정 전에는 직업 윤리 단원의 일부였다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분배 정의 윤리’로 편입되었다. 이에 제시문은 개정 교육과정에 어울리는 마르크스의 사유재산에 대한 관점을 물어보고, 선지는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인 마르크스의 직업(노동)관을 물어보고 있다. 앞으로 마르크스는 직업관 이 아닌 분배 정의(노직, 롤스, 공리주의)문항으로 출제될 것이다. 그래도 중심 사상은 변함이 없으니 꼼꼼히 기출을 살펴보고 가자.

(갑) 지금까지는 막스 베버가 칼뱅의 직업 윤리(직업 소명설)를 서구 자본주의의 근본정신이라고 칭찬하는 제시문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막스 베버와 칼뱅주의를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칼뱅과 무관한 막스 베버의 심정/책임 윤리 사상이 살짝 언급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시문 분석: 사실적 이해 > 꼼꼼한 해설

(갑)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갑은 막스 베버다. 제시문은 (1) 직업 노동을 금욕의 수단으로 여기는 개신교(프로테스탄티즘) 정신이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한다.

(갑)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1) 제시문에서 말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은 특히 칼뱅주의를 말한다. 베버는 칼뱅주의의 ‘예정설, 소명의식’과 같은 직업관 덕분에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칼뱅은 신이 정해주신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과 함께 금욕주의와 근면 성실한 삶을 강조한다.

(을)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을은 마르크스다. 제시문은 (1) 자본주의에서의 사유 재산은 인간을 소외시켜 얻은 것이다. (2) 사유 재산을 거부하고 극복할 때,¹⁰⁰⁾ 인간 소외가 없는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을)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1)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인간을 생산과정의 부품으로 취급한다. 오히려 인간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마르크스는 이를 인간 소외라고 불렀다. (2)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 사유 재산 등을 거부하고 극복하려 할 때, 인간이 노동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결국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삶이 현실화된 사회가 바로 ‘계급이 소멸된 공산주의 사회’이다.

정답 해설

② 사유 재산이 인간 소외의 표현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동 과정에서 부품으로 취급당한 결과로 사유 재산이 형성된다.’는 의미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이 돈을 벌기위해 억지로 노동을 하는 사회인 반면, 마르크스의 ‘사유재산이 적극적으로 지양된’ 사회는 ‘계급이 소멸된 사회’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필요에 따라 재화를 분배받는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 능력에 따른 노동, 필요에 따른 분배)

오답 해설

① 칼뱅주의는 소명의식에 따라 직업적 성공을 추구한다. 이는 곧 ‘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칼뱅주의가 직업적 성공(부)을 지향하는 것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세속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 오답 원리 : 이 선지는 갑은 A에 동의하지만 ‘~를 위해’ A를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를 위해’라는 표현을 추가해 오답 선지를 구성하였다.

③ 갑은 칼뱅주의의 금욕적 노동 정신을 자본주의의 기초로 여겼다. 칼뱅주의는 노동을 통한 직업적 성공(=자본의 형성)을 추구한다. 한편, 을에게 노동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지, 자본(= 자본주의의 사유재산)형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 오답 원리 : 이 선지는 갑과 을의 자리를 바꾸었다.

④ 을(마르크스)은 ‘능력에 따른 분배’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노동이 사유재산 형성을 위해 억지로 강제된다고 보았다(= 인간 소외). 반면, 을이 지향하는 ‘모든 소외가 지양된 사회’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지향 하는 사회로서, 노동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¹⁰¹⁾ 자발적으로 (= 노동 의욕이 높음) 행해진다고 보았다.

100) 지양: 더 높은 단계에 오르기 위해.(극복) 기존의 것을 거부함.

101) 자기의 본질에 맞는 노동을 하는 것. (예. 화가는 그림을 그린다.(생계를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한편, 갑(베버)은 필요에 따른 분배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갑은 자본주의 정신을 추구하는데, 자본주의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경제체제가 아니다.

⇒ 오답 원리 : 이 선지도 갑과 을의 자리를 바꾸었다.

⑤ 우선 갑은 자본주의와 직업적 성공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갑은 직업적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자본주의적 분업 노동도 긍정할 것이다. 하지만, 갑은 노동에서 인간이 소외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극복해야 할 ‘인간 소외’는 갑의 입장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을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인 ‘노동의 분업’이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보았다. 노동의 분업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한다는 것은 문제 원인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말도 안 되는 선지이다. 이 선지는 갑과 을 모두 부정할 선지이다.

더 알아보기 (교과서 Base 개념 기본 & 심화 칼럼)

1) 마르크스 & 칸트 : 마르크스 핵심 정리

마르크스는 노동을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체적 활동으로 보았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인간은 주체적으로 노동하는 것이 아닌, 전체 생산 과정의 부품처럼 취급당한다. 이를 마르크스는 도구화(물화)라고 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노동관계 속에서 인간이 “생산물”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고 보았다. 이를 마르크스는 ‘소외’라고 한다.

특히 마르크스는 공장 등의 생산수단의 사적 사유를 금지(지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사유 재산은 인간을 착취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을 극복(지양)할 때 인간이 단지 부품이 아닌, 노동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세계, 즉 ‘소외가 지양되어 계급이 소멸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심지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보았다. “경제가 핵심이지만 그 개입은 경제적보다 정치적이어야 한다.”¹⁰²⁾라고 본 것이다.

주의

일반적으로 마르크스 사후 발전한 마르크시즘에서는 국가가 폐지된 이상사회인 ‘공산주의’와 과도기적 사회인, ‘사회주의’를 구분한다. 특히 마르크스 - 레닌주의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노동을 위해서 계획에 따른 생산과 공정한 분배를 담당한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육과정에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오기도 한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산과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교환, 분배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¹⁰³⁾

2) 마르크스 & 인간성 정식(칸트)

이러한 마르크스의 사상과 체계는 독자적이지만 독일 철학으로서 칸트의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마르크스의 사상 중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의 내용은 칸트의 인간성 정식과 연결된다.

수능특강 20p

인간성 정식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인간성 정식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에 적용해보자. 위 인간성 정식은 인간을 항상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했다. 이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은 소극적 의미에서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판단 능력)을 지닌 자율적 존재임을 존중, 인정’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사람을 부품으로 취급하며, ‘이성적 존재’임을 부정한다. 즉, 자본주의는 인간(노동자)을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단지 한낱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마르크스가 제시문에서 말하는 “모든 소외가 지양되어 계급이 소멸한 사회”는 바로 모든 사람을 항상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는 그런 사회를 말한다. 그런 사회는 마치 칸트가 말하는 ‘목적의 왕국’의 마르크스 버전 같다.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는 노동자를 다른 사람의 목적, 곧 자본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내몬다고”¹⁰⁴⁾ 설명할 수 있다. 자본가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인간’임을, ‘이성적 존재’임을 부정하게”¹⁰⁵⁾ 되는 것이다.

102) 슬라보예 지젝, 『지젝이 만난 레닌』, 교양인, 2008

103) 변순용 외 8인, 천재교육, 2015 제2판, P.155

104) Harry, 앞 논문, P.107

105) Harry, 앞 논문, P.113

칼럼3 칼뱅 Master

● 칼뱅 (+ 막스 베버) 정리

1)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칼뱅

- ① 종세와의 결별 : 종세에는 노동을 “속죄”의 의미로 생각했다. 하지만 칼뱅(+ 베버)은 직업을 신이 주신 “소명”으로 생각했다.
- ② 구원 예정설 : 칼뱅주의의 특징으로서, 신이 태초부터 구원을 받을 사람을 정해놓았다. ‘구원이 미리 예정되어있었다.’라는 생각이다.
- ③ 직업 소명설 : 직업은 신이 주신 소명이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구원이 예정된 사람)은 신이 직업에서도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직업적 성공을 날로 먹을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직업은 신이 정해주신 것이므로, 신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직업에 충실함으로써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④ 청교도 정신 - 금욕주의 : 직업적 성공을 통해 얻은 부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부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 근면, 성실, 절약
- ⑤ 직업의 목표 : 직업의 목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 (구원) 예정설

칼뱅주의의 대표적인 교의적 특성은 예정설과 금욕주의다. 예정설은 개인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원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의 운명은 하느님의 의지로 미리 정해져 있다. 즉 이 세계의 일과 인간 생활의 모든 일이 신에 의해 미리 규정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신의 의지에 완전히 지배되고 있다는 사상이다.¹⁰⁶⁾

‘나는 신에게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의식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확신해야 할 명제다. 확신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신앙이 부족하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뱅은 ‘부의 축적’을 인정한다. 신에게 선택,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직업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신께서 축복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의 축적’은 착실하고 근면한 노동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칼뱅은 노동, 직업을 통해 얻은 부는 단지 자신이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라는 증거에 불과하므로, 신 앞에서 겸손하고, 근면하고, 검소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적으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선행’을 통해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청교도 윤리)

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칼뱅

“우리는 신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할 때 그 부르심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들을 구분해 놓으셨으므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셨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 명하셨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께서 정해 주셨다고 생각해야 한다. - 칼뱅, 『기독교 강요』¹⁰⁷⁾

“세계는 오직 신의 영광에 봉사하도록 정해져 있고 (중략) 세상에서 칼뱅파의 사회적 활동은 오직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한 활동’일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의 현세적 삶에서 봉사하는 직업 노동 역시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하략)

- 베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¹⁰⁸⁾

쉬어가기 칼뱅 심화정리 : 칼뱅 “직업적 성공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 (x)

Q. ‘직업적 성공이 구원의 증표이다. vs 직업적 성공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두 문장의 다른 점을 못 느끼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기독교 사상이 친숙하지 않은 경우, 칼뱅의 사상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칼뱅은 기독교 신학자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20C 후반 미국 LA 할리우드 근처에 거주 중인 레오 아저씨를 생각해보자. 이 분은 영화배우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셨고, 인기와 돈도 많이 얻으셨다. 칼뱅의 관점에서 이러한 직업적 성공은 레오 아저씨가 천국에 갈, 즉 구원을 받을 ‘증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말과 레오 아저씨가 성공했으니 구원에 이를 수 있겠구나. 라는 말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독교의 칼뱅주의는 예정설을 믿는다. 예정설이란, 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태초부터 이미 ‘레오’가 죽은 후 천국 혹은 지옥에 갈지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말이다. 성경에는 태초에 신이 구원받을 사람 144,000명의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두었다고 쓰여 있다.

칼뱅이 보기에는 이미 구원이 정해진 사람이라면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신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죽은 후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과 부귀영화까지 신께서 내려주신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 레오 아저씨는 엄청나게 성공한 영화배우니까, 아 이 사람의 삶은 신이 축복해준 삶이야 따라서, 이 사람의 삶, 직업적 성공은 신이 태초부터 레오 아저씨의 천국행을 예정했다는 증거, 증표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직업에서 성공했으니까 그 대가로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칼뱅의 사상’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칼뱅은 신이 구원을 정했기 때문에 (원인) → 직업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결과)

반면 ‘직업적 성공을 통해 //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은 직업적 성공이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말이다. (내가 성공 → 그 덕분에 → 신의 구원을 받음.)

106) 황광우, 『철학하라』, 생각정원, 2012, 초판 3쇄, P.432
107) EBS 수능특강 P.144
108) 미래엔 교과서 P.211

칸트로 재해석한 2016학년도 수능

17 칸트 영구 평화론 해설과 심화 개념 칼럼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사회 계약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가 건립되듯이, 국제 관계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을 통해 평화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이 상태에서 국민들의 모든 권리가 국가들의 소유가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맹의 이념은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하며, 영원한 평화로의 지속적인 접근은 인간 및 국가의 의무로서, 그리고 권리에 기초한 과제로서 성립될 수 있다.

- ① 국제적 사회 계약을 통해 연맹 체제를 단일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 ② 개별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연맹 체제의 단계에서도 개별 국가의 주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 ④ 세계 시민법은 인류의 평화적인 교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
- ⑤ 연맹의 확산을 통해 국제 사회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 현자의 돌 평

칸트 윤리가 국제 평화에 응용된 문제이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상주의)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되었을 때, 영구 평화론이 수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결국 수능에 출제되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꼼꼼히 분석하고 공부한 학생들은 이 문항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풀 수 있었다. 더 알아보기에서 수능 문항과 9월 평가원 문항의 비교를 통해 기출 학습의 중요성을 확인해보자.

제시문 분석: 사실적 이해 > 꼼꼼한 해설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제시문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상주의)이다. 제시문은 (1) 각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연맹 체제를 이루고, 그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에 따라야 영구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2) 연맹 체제와 국제법이 국제 관계를 구성할 때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주권을 지킬 수 있다. (3) 그러한 방법을 통해 영구 평화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다.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제시문은 (1)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맺어 국가를 이루듯 국제 관계에서도 국가들이 서로 연맹을 맺고 국제법에 따를 때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2) 이때, ‘연맹 체제’란 국가들이 자신의 독자적인 주권을 지키면서 동시에 공동의 목적(평화 등)을 위해 서로 돕고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3) 모든 국가들이 연맹을 맺는 것은 영원한 평화와 인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이다.

정답 해설

①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잘못된 선지로 출제된 선지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선지이다. 또한 이 문항은 제시문과 선지를 논리적으로 꼼꼼히 읽는다면 절대 틀리지 않을 문항이다.

제시문은 ‘연맹 체제’를 결성하자고 말한다. 그런데, 선지는 국제적 사회 계약을 통해 연맹 체제를 단일 국가로 전환하자고 말한다. 아직 결성도 되지 않은 연맹 체제를 단일 국가로 전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제시문은 ‘국가들의 소유가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반대로 선지 ①은 ‘연맹 체제’를 단일 국가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개별 국가의 주권(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국가들을 통합하여 단일 국가로 만드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답 해설

②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기출된 선지이다. 제시문은 국가들이 사회계약을 맺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연맹 체제를 결성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칸트는 오로지 개별 국가들이 공화정 체제일 때만 국가들이 평화를 추구할 것이고, 자발적으로 연맹 체제를 결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제시문은 개별 국가의 소유권(= 주권)은 개별 국가에 확정되어있다고 말한다. 연맹 체제는 제시문의 전제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는 ① 선지와 반대되는 경쟁 답안이다.¹⁰⁹⁾

④ 이 선지 ‘세계시민법의 역할’ 또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기출된 선지와 같은 선지이다.¹¹⁰⁾

⑤ 사회계약론에서의 자연 상태란, 각 개인이 상호 계약을 맺지 않아 국가가 성립되지 않았고, 사회 규범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약육강식의 상태로서 강자가 약자를 자유롭게 수탈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상호 계약을 통해 자신들을 보호해줄 국가와 사회 규범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한 국가 내에서의 안전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이처럼 칸트는 국가도 국제 사회 속에서 전쟁과 병탄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연맹을 맺고 국제 사회가 자연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더 알아보기 (교과서 Base 개념 기본 & 심화 칼럼)

1) 기출문제를 통한 수능적 접근

위 수능 17번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8번이 연계된 것이다.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해 6, 9월 모의평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109) 경쟁 답안이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두 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단일 국가로 전환할 수 없기에 ①과 ③은 서로 대립한다.

110) 세계 시민법의 내용 등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실하게 보여준다. 다음의 9월 모의평가 18번을 살펴보자.

18.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세계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란 모든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용어의 중복일 따름이다.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국가들은 연맹의 확산을 통해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공화국으로 전환한 계몽된 자유 국가들이 연방을 결성하고, 호혜적인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를 확정해야 한다.

- ① 자유 국가들 간의 연방 단계에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②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을 규정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 ③ 도덕적 입법의 한계를 세계 정부의 강제력으로 보완해야 한다.
- ④ 세계 평화의 정착을 위해 개별 국가의 주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 ⑤ 세계 평화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나 정치적 의무로 설정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 당시 이 문항은 정답률 32%로, 오답률 TOP3의 문항이었다. 그 이유는 제시문과 선지가 대응되지 않아서 독해로 해결할 수 없었고, 평가원에서 잘 출제되지 않는 개념이어서 학생들이 이 개념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정답률이 높았는데, 제시문에 정답의 근거가 충분히 있었고, 9월 평가원 이후 학생들이 칸트의 영구 평화론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 제시문 해설 : 현자의 돌 평

제시문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다루고 있다. 칸트는 국제 관계 단원의 이상주의의 토대가 된 학자로, 인간은 모두 이성을 지녔으므로 이성을 활용하여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영구평화론을 알고 있지 않다면, 해당 제시문을 통해서 선지를 골라내기 어렵다. 제시문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선지 해설

정답 선지

② 정답이다. 세계 시민법이 보편적 우호 조건을 규정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은 칸트가 영구 평화를 위해 제시한 확정 조항 중 세 번째 조항이다.

오답 선지

① 제시문에서 칸트는 정부들이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①의 ‘연방 단계에서 세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이 주권을 폐지하고, 세계 정부의 하위 존재로 들어가야 한다. 때문에 칸트는 세계 정부가 아닌, 연방형태의 세계 연합(예. UN)을 결성할 것을 주장했다. (응시자의 47%가 고른 함정 선지)

③ 먼저, ‘도덕적 입법’이란 사람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 원칙(준칙)을 도덕 법칙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는 실제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세계 정부의 강제력으로 개인의 도덕 법칙 수립을 보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칸트는 ‘세계 정부’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렸다.

④ 칸트는 개별 국가의 주권은 절대로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⑤ 제시문에서 칸트가 ‘자유 국가들의 연방 결성’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세계 평화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수능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 ① 선지 : ‘세계 정부, 단일 국가’에 대한 보충 설명

어떤 분들은 칸트에서 세계 정부, 단일 국가는 무조건 틀린 것이며, 칸트가 세계 정부에 대해 논하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칸트가 ‘세계 정부’를 논하지 않았다면 교수님들께서 3개의 선지에 ‘세계 정부’, ‘단일 국가’라는 표현을 넣지 않았을 것이다. 수능과 평가원 시험에서 단순히 수험생을 낚기 위해 선지를 출제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좋은 선지는 교과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학생’을 변별하는 것이다. 9평과 수능의 선지들은 칸트의 견해를 어설프게 알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좋은 선지다.

평가원이 수능에서 칸트의 입장을 변별력 있게 출제하기 위해서 ‘칸트는 세계 정부를 비현실적이지만, 이상적으로 보았다.’라는 내용을 출제한다면 많은 학생들은 오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지를 틀렸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옳은 선지이다. 이 개념은 이미 평가원에 출제되었다.

•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6번

칸트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 선지 ① : 전 세계를 통치하는 민주적인 세계 공화국을 설립해야 한다. (×)

• 선지 해설

오답 선지

① : 현실적 방안이 아니다. 이상주의자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해 단일한 세계 국가(공화정, 민주적인)를 건설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먼저 모든 국가가 법치, 공화정 국가가 되고, 이어 국가 간에 국제 연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개정 교과서 교학사 p.300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상 : 단일 세계 국가 (단일 세계 민주 공화국) 건설. <But> 불가능함. 비현실적임.

• 대안 : ‘국제 연맹’ = 현실적인 대안

2) 영구 평화론

• 『영구 평화론』의 집필 동기

칸트가 살던 시절, 세계는 혼란스러웠다. 18C 유럽에서의 끊임없는 전쟁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불러왔다. 이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해칠 수 있을까? 칸트는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을 논하고자 『영구 평화론』을 집필하게 되었다. 『영구 평화론』은 국가 간의 전쟁을 종식하고, 이성을 통해 국제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칸트의 의도가 담긴 책이다. 칸트는 책에서 국가 간에 지켜야 할 계약 사항을 여러 조항을 통해 제시했다. 칸트가 『영구 평화론』을 저술하게 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들을 이번 칼럼에서 중점적으로 다뤄 보고자 한다.

• 『영구 평화론』의 주요 내용

① 칸트와 세계 정부

만약 세계가 하나의 단일 국가라면 국가 간의 전쟁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칸트는 세계 국가(세계 단일 공화국)를 만드는 것을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세계 정부의 바람직함에 대한 칸트의 견해는 분명히 복잡하다.”¹¹¹⁾

“인류 단일체에 대한 이상에 대한 칸트의 지지 선언은 그가 세계 단일 공화국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하에, 통합된 하나의 세계 주권국은 ‘세계의 완전한 사법권’을 달성할 수도 있다.”¹¹²⁾

“그것은 인류 역사 진보의 마지막 이상일 것이다. 동시에, 그는 세계가 단일한 군주국으로 통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공화국의 정 반대로서 군주국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비록 칸트는 세계 정부, 세계 단일 공화국을 궁극적인 정치적 이상으로 여겼음에 불구하고, (칸트에 따르면) 세계 전체 군주국은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할 것이므로, 전 세계적인 무정부 상태와 동일한 것이다. (칸트는 전 세계적인 무정부 상태를 궁극적으로 최악의 디스토피아(유토피아의 반대)로 보았다.) 세계 단일 공화국과 세계 단일 전체 군주국 사이에 그의 현실적인 유토피아(=국제 연맹)가 놓여 있었다. 세계 정부와 유사한 자유 공화정 국가들의 연합, 연방체제가 바로 그것이다.”¹¹³⁾

“하버마스가 강조했듯, 이 ‘그들의 주권을 유지하면서, 기꺼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국가들의 자발적인 연합’이라는 느슨한 개념은 그 자체로 세계정부로 가는 과도기임을 권고하는 것과 같다.”¹¹⁴⁾

“칸트는 『세계 공민적 견지에서서의 일반사의 구상』(1784년)에서 ‘세계 공화국’의 형성을 인류사가 도달해야 할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¹¹⁵⁾

물론 칸트도 책에서 위와 같은 글을 썼다. “그들 국가는 개인의 경우처럼 야만적인(무법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 스스로를 공법의 규제에 내맡기는 한편, 궁극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포함할(물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중략)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옳은 것이 실천에서는 거부된다. 그러므로 세계 공화국이라는 적극적인 이념 대신에 소극적 대안으로서 연맹을 구성하는 것이다.”¹¹⁶⁾

칸트는 세계 단일 정부를 이상적 상황으로 보았지만, 칸트는 개별 정부들을 폐지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칸트가 보기에 세계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세계 정부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첫째, 세계가 단일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 정부가 공화정이 아닌 전체 군주정일 경우, 인류의 자유와 평등은 엄청난 제약을 받을 것이므로 위험하다. 둘째, ‘이미 각 주권국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세계를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정부의 주권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었다. 칸트는 세계정부라는 이상을 살리면서도, 위험성과 부당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공화국들로 이뤄진 연합, 연방’이다.

②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6항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평화조약의 체제를 따라서 예비조항(6항) · 확정조항(3항) · 추가조항(2항) · 부록(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 1장 ‘예비조항’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경우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6개의 조항 중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예비조항 4개를 알아보자.

-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 ↳ 전쟁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다른 국가를 병합하여 영토를 넓히기 위함이다. 만약 이를 금지한다면,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칸트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독립 국가는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 상비군은 결국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 근대 국가가 전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전쟁 준비가 되어있는 상비군이 존재하면서부터이다. 이전에는 추수하는 가을 등에는 농민을 동원할 수 없어서 전쟁하기 어려웠다. 만약 상비군이 폐지된다면, 전쟁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 ↳ 국가가 전쟁을 하려면 막대한 군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언제나 재정이 적자 상태이기에, 만약 전쟁을 위한 국제 발행을 금지한다면, 각 국가는 함부로 전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 ↳ 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따라서 이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칸트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③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3항

제 2장 ‘확정조항’은 영구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건을 논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수능과 평가원 기출에서 출제된 중요한 개념이다.

- 제 1항 : 모든 국가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체여야 한다.
 - ↳ 이때 ‘공화정체’라는 말은 단순한 지배 형식이 아닌, 통치의 형식을 말한다. 입법부로부터 행정권이 분리된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지배자가 입법과 행정을 총괄하는 전제정의 경우, 지배자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공화정체에서는 전쟁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 입법부인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공화정 체제에서는 전쟁이 억제된다.
- 제 2항 :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 ↳ 칸트는 개별 국가들을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국제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러한 국제법을 시행할 수 있는 연방 체제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주의할 점은 이때의 연방 체제란 ‘세계 단일 정부’와 같은 것이 아닌, ‘UN’과 같은 느슨한 연합체를 말한다. (* 국제법은 각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 제 3항 :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 ↳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우호의 조건’이란 A국의 시민이 B국에 방문했을 때, 적으로 간주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근대에는 흑인과 백인의 차별, 식민지인과 유럽인들의 차별 등이 심했다. 백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니그로’라는 모욕적인 언사로 부르며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했다. 칸트는 이성을 지닌 세계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평등한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 3항을 강조했다. 즉, 세계의 시민들은 각 국가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자유로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세계시민주의적인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1) Nancy Kokaz, 2005, 토론토 대학 철학과 교수

112) Thomas Pogge, 2009, 예일 대학 철학과 교수

113) 롤스, 1999,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

114) 하버마스, 2010, 프랑크푸르트 대학 철학과 교수

115) 정승원, 「무의식과 세계 공화국-프로이트와 칸트에 대한 가라타니 교진의 트랜스크리틱」, 대구 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2013, P.123

116) 칸트, 『영구 평화론』, 서광사, 2013 개정판 제3쇄, P.37

④ 결론

칸트는 ‘인간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윤리적 원칙에 어긋나는 ‘전쟁’을 종식시켜 영구한 평화를 달성하고자 했다. 『영구 평화론』은 인류를 자유와 평등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칸트의 비전이 담긴 책이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맹과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국제연합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평화사상이 검토되는 경우에 언제나 이 책이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칸트의 사상은 세계시민주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3)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칸트의 이상주의 영구 평화론

칸트의 영구 평화론 : “이상론으로서 단일한 세계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현실론으로서 먼저 모든 국가가 민주적 법치 국가로 되고, 이어 이 국가들 간에 ‘국제 연맹’을 만드는 것이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 간의 연합체 원칙에 입각하여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국제 평화를 위한 어떤 방안도 일단은 개별 국가들의 독립과 자유, 즉 주권적 지위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칸트, 이한구 역, “영구 평화론”¹¹⁷⁾

“칸트는 영구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간 주권 보장은 물론 타국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시민의 정책 결정이 가능한 공화정이 도입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보편적 우호 관계에 기반한 국제법이 적용되는 국제적인 연맹을 창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칸트의 시각은 국제 연합(UN)이 만들어지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¹¹⁸⁾

승안지의품

칸트로 재해석한 2016학년도 수능

5 해외 원조 : 싱어 vs 롤스

해외 원조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원조는 만인이 공정하게 분담해야 할 전 지구적 의무이다.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남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1%를 기부하여 세계의 빈민을 도와야 한다.
 을 : 원조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들이 만민의 사회의 충분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① 갑 : 큰 희생 없이 타국의 빈민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한다.
- ② 갑 :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 ③ 을 :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원조해야 한다.
- ④ 을 : 국제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원조해야 한다.
- ⑤ 갑, 을 : 해외 원조는 자선이 아닌 당위의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 현자의 돌 평

개정 교육과정의 ‘해외 원조 윤리’에서는 ‘칸트’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추가되었다. 칸트가 새롭게 포함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칸트의 윤리학 중 ‘인간성 정식’과 17번 문항의 ‘영구평화론’은 해외 원조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간성 정식은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노직과 롤스에게, 영구 평화론은 세계 시민주의자 싱어에게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칸트를 통해서 해외 원조 사상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시문 분석: 사실적 이해 > 꼼꼼한 해설

(갑)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갑은 싱어이다. 제시문은 (1) 원조는 세계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2)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남은 소득은 기부하여 빈민을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갑)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1) 싱어는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인간의 윤리적 의무라고 본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세계 시민’이기에 그를 도와야 한다. 또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고통과 쾌락을 동등하게 여기는 ‘이익평등 고려’의 관점에서도 타인의 고통을 분담할 의무를 갖는다고 본다. (2) 부국의 사람들은 디자인과 브랜드를 보고 새 옷을 산다. 이미 몸을 보호할 옷이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구매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한 이후에 이뤄진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다. 그런데, 빈국의 사람들은 굶주림과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기본적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 우리가 큰 불편과 손해를 보지 않는 선(=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남은 선)에서 기부한다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고 그 결과는 전체적인 공리(관련자 모두의 이익)의 증가가 될 것이다.

(을)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을은 롤스이다. (1) 해외 원조에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해외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를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을)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2) 롤스는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를 윤리적 의무라고 본다. 롤스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자의 입장에서 한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개인)들 간의 협력의 틀로 보았다. 동일한 관점에서 롤스는 각 나라가 자유롭고 평등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국제주의라 한다. 롤스는 불리한 여건의 국가들을 원조함으로써 질서 정연한 국가로 만들어, 그 국가들이 국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구성원이 되기를 바랐다. (1) 단, 이때 주의할 점은 롤스는 한 국가 안의 사회에서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을 국제 관계와 빈국에 대한 해외 원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제시문에서도 ‘원조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롤스의 해외 원조에 대한 견해는, 기존에 롤스가 <정의론>을 통해 주장하였던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의 원칙’들,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 등을 국제 사회에까지 확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정답 해설

④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원칙이다. 하지만 제시문에 나와 있듯,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국제 사회에의 최소 수혜자를 가장 유리하게 원조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제시문에서 알 수 있듯, 싱어는 큰 희생이 아닌 ‘1%의 남은 소득’을 기부함으로써 세계의 빈민을 도울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도덕적 의무라고 보았다.

② 싱어는 공리주의자로서, 부국 국민의 작은 희생보다 빈국의 국민의 증진되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해외 원조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에서도 ‘소득의 1%’를 기부해서 빈민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③ 제시문은 ‘원조의 의무는 고통 받는 사회들이 만민의 사회¹¹⁹⁾에 충분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한다. 이때, 만민의 사회 즉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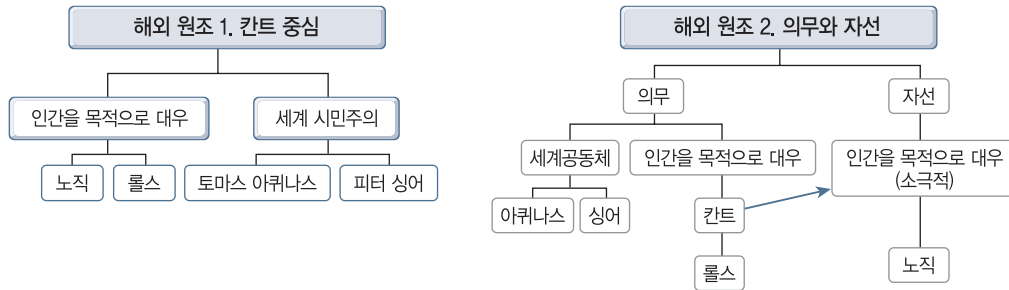
119) ‘만민의 사회’에서 만민은 집합적 개념이다. 롤스는 원조의 주체로 개인보다 국가(집합)를 더 강조했다는 점에서 싱어의 세계 시민주의적(시민, 개인 강조) 원조론과 다르다.

사회의 충분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됨을 의미한다.

⑤ 제시문에서는 갑과 을 모두 원조는 의무라고 보았다. 의무는 곧 당위이다.

더 알아보기 (교과서 Base 개념 기본 & 심화 칼럼)

1) 해외 원조에 대한 개념 총정리



해외 원조에 대한 관점은 크게 해외 원조를 의무로 보는 입장과 자선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의무의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바라보는 사상가는 대표적으로 칸트, 롤스, 싱어,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 수 있고, 자선으로 바라보는 사상가는 노직을 들 수 있다. 한편, 칸트를 중심으로 분류한다면,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칸트의 입장에서부터 노직과 롤스가 모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싱어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둘 다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싱어의 경우 칸트의 세계시민주의에 약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칸트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해외 원조 사상가로 추가되었다. 그 이유는 칸트가 『영구평화론』 등을 통해서 자신의 윤리관을 세계적인 범위까지 확장하였기 때문이다. 칸트의 사상은 해외 원조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롤스와 노직은 칸트의 인간성 정식의 영향을 받았다. 칸트의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인간성 정식(정언명령)이 어떻게 노직과 롤스로 이어지는지 알아보자.

① 칸트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설의 대표자답게, 타인에 대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라고 보았다. 인간은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해야만 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들을 우리와 동등한 도덕적 인격체로 존중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자율성을 발휘하여 도덕적으로 선택하기 힘들다. 그들을 곤란에서 구해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도덕적 주체로서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빈국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우리가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인간을 목적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해야 하는 것에서 어긋나는 것이다.”¹²⁰⁾

② 노직

칸트의 이러한 사상은 롤스와 노직에게 영향을 준다. 먼저 노직의 입장을 확인해보자.

“개인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므로 우리에게서는 타인을 해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므로, 우리는 자발적 동의 없이 타인을 도울 필요가 없다.”¹²¹⁾

여기서 노직은 개인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칸트의 인간성 정식에 영향을 받았다. 칸트에게 정식의 의미는 어떤 행위에 대한 목적

으로 인간을 대우하라는 것(적극적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판단 능력)을 지닌 자율적 존재임을 존중’하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목적이다. 이는 노직이 말한 ‘타인을 목적으로 대우하여, 해치지 않을 의무’로 이어진다. 노직은 타인을 간접적인 목적으로 존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노직은 인간이 자신의 몸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을 지녔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얻은 재화는 자신의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따르는 것만이 정당하며, 타인에게 재화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소유권적 정의론, 로크의 영향¹²²⁾). 노직은 이러한 ‘소유의 권리’가 인간의 주요한 권리라고 보았다.

이 두 가지 입장을 조합하면 곧, 노직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목적으로 대해야 하므로 자신과 타인의 인간으로서 주요한 권리인 소유권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목적으로의 대우). 즉, 노직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는 강제/의무가 아니다. 해외 원조는 오로지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자선, 기부로써 이뤄져야 한다.

③ 롤스

한편, 노직이 칸트의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우’를 소극적 목적으로써 즉, 개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불가침과 존중으로 이해했다면, 롤스는 칸트의 사상을 노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다. 롤스의 입장은 칸트가 강조한 ‘자율적 주체’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다. 칸트는 인간들이 자율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고,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로 보았다. 또한 그러한 존재들이 모여 서로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사회 (= 목적의 왕국)를 하나의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롤스도 한 국가의 사회 속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 협력을 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보았다.¹²³⁾ 그런데 롤스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의 기본 구조¹²⁴⁾가 정의 원칙에 따라 잘 갖춰져서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롤스의 해외 원조 입장을 이해해보자.

롤스가 보기에 국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이 질서정연한 사회여야 한다. 롤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기존의 ‘질서 정연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를 돕는 것을 ‘원조의 의무’라고 보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롤스는 빈국의 가난한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해외 원조의 목적이나 의무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롤스는 해외 원조의 관점에 ‘차등의 원칙 : 빈국의 가난한 국민을 최소 수혜자로 대우’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점은 롤스의 해외 원조 사상에서 가장 비판 받는 부분이다. (기출 선지) (왜냐면, 롤스의 정의론을 읽고 세계시민주의자들이 정의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하려 했는데, 롤스가 그것은 자기 뜻과 다르다고 말해 세계시민주의자들이 롤스의 비일관성에 실망하고, 그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¹²⁵⁾

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롤스

“롤스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다른 국가의 국민들을 돕는 것을 윤리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조의 목적은 가난한 개인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여건의 사회’의 체제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도움으로써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부유한 국가의 부를 불리한 여건의 사회로 이전하거나 재분배하는 것을 원조의 의무로 주장하지는 않는다.”¹²⁶⁾

120 EBS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P.190

121) EBS 수능특강 생활과 윤리, P.190

1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로크를 배우지 않으므로 로크의 영향이라는 것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다.

123)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롤스의 정의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발상은 사회를 자유롭게 평등한 시민들 간의 협력의 틀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철학아카데미, 『처음 읽는 영미 현대철학』, 이정원, 『존 롤스의 평화를 위한 정의의 철학』, 동녘, 2014, P.116

124) 정치, 사회(교육, 의료), 경제 등의 주요 제도 등

125) 장동진, 장휘, 『칸트와 롤스의 세계시민주의-도덕적 기획과 정치적 기획』, 한국정치사상학회, 2003, PP.216-218 요약

126) 비상교육 P.274

• 칸트 의무의 분류 with 노직 & 롤스 ¹²⁷⁾

	완전 의무	불완전 의무
나	자살 금지	타고난 소질 계발
타인	해악 금지 <노직이 강조>	타인 구제 ¹²⁸⁾ <롤스가 강조>

• 간단 정리

칸트 원조 받는 인간의 자율성 보장에 초점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타인의 자율성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원조를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롤스 원조 대상국의 자율성 보장에 초점

칸트와 유사하지만 롤스는 개인을 해외 원조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국가를 원조의 대상으로 봄. 롤스는 국제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국가들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임. 그리고 그렇게 ‘불리한 여건의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므로 원조는 빈곤국의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빈곤국의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보았음.

칸트 & 롤스의 입장 정리

좋지 못한 환경에 놓여있는 개인, 국가는 도덕적 능력 발휘 힘듦. = 개인이나 국가를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그들이 도덕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 = 그들의 자율적 능력을 존중해주는 것.

노직 기부자의 자율권 보장에 초점

부유한 개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강제로 원조를 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됨. 개인의 자율적 의지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선으로의 기부만이 인정되는 것임.

노직의 입장 정리

[반대] 기부(원조)를 의무로 보는 것. = 기부를 강요하는 것. = 개인(기부자)의 도덕적 이성 능력,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 개인(기부자)을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찬성] 기부(원조)를 자선으로 보는 것. = 개인(기부자)의 자율적 판단(자유)에 맡기는 것. = 개인(기부자)의 인간성을 간섭하지 않는 것. = 개인(기부자)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

3) 세계 시민주의 : 토마스 아퀴나스

다음은 세계시민으로서 공동체적 가치를 위해 해외 원조를 의무로 보는 입장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 윤리학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자연법 ¹²⁹⁾에 따른 의무라고 보았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재화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그래서 아퀴나스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잉여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자연권에 의해, 빈곤한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돌려져야 한다.” ¹³⁰⁾

4) 세계 시민주의 : 피터 싱어

싱어는 공리주의자로서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한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이익은 평등하다. 부자가 빈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한 이익 고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 빈국에 대한 원조는 도덕적 의무이다. 싱어는 부유한 나라의 모든 사람이 소득의 극히 일부라도 기부할 경우, 전 지구적인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싱어는 롤스와 달리 빈국의 가난한 개인들의 복지를 직접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개정 교육과정에서 본 싱어

“싱어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윤리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도움을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도움을 주어야 할 윤리적 의무를 진다고 본다.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 점에서 내 이웃을 돕는 것과 먼 거리에 사는 외국 사람을 돕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도덕적인 차이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굶주림이나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키므로 옳지 않은 행동이다. 그러므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민족, 국가, 인종을 초월하여 그들의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해 원조를 하는 것이 윤리적 의무라는 것이다.”¹³¹⁾

• 싱어의 저서 『실천 윤리학』에서 본 싱어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기초적인 복지를 위협하지 않고도 극단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강의하러 가는 길에 얇은 장식용 연못을 지나다가,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 연못에 빠져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략) 아이를 구하기 위해 연못으로 들어가면, 내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고, 내 구두는 물에 젖고, 내 강의는 취소되거나 마른 것들을 찾아 갈아입을 때까지 연기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일들은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이 못 된다. (중략) 나쁜 일을 막을 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원칙”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논의 (중략) 절대빈곤은 대개 개발도상국에서만 존재한다. (중략) 모든 사람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낼 수 있는 곳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¹³²⁾

	싱어	롤스	노직
원조의 주체	선진국 개인(시민)위주 + 국가	질서정연한 국가(정부)위주 + 개인(시민)	개인(자유)
원조의 대상과 목적	해당국 시민들의 복지 향상	국가와 사회의 기본 구조 개선,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	개인이 불쌍한 사람을 자발적으로 도우며, 이는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¹³³⁾
원조의 이유	세계 시민주의 + 공리주의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국제주의 ¹³⁴⁾ + 질서정연한 국제 사회 추구	개인의 자선(慈善), 자유로운 선택

126) 비상교육 P.274

127) 박찬구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정초』 읽기, 세창미디어, 2014 P.101, 타인에 대한 의무는 약간 수정함, < >에 있는 노직. 롤스 강조 부분은 저자가 맥락상 연관을 위해 임의로 첨가함.

128) 참고 : 『타인의 목적들을 촉진시키고자 진력해야 한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B69

129)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1, 3번 문항 해설의 더 알아보기 참고. 해외 원조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상이

130)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제3판』, 2014, PP.339-361

131) 비상교육, 생활과 윤리 교과서 P.274-275

132) 피터 싱어, 『실천 윤리학 제3판』, 2014, PP.339-361, (참고) 혜택(공리, 쾌락)의 증가 : 미국 사람 10\$로 햄버거 1개 사먹기 <아프리카인이 10\$로 1달 식비하기>

133) 칸트가 불완전한 의무를 실천할 경우, 칭찬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같은 것이다.

134) 『만민법』 이후 롤스는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을 취하기도 하는데 교육과정 외이다.

칸트로 재해석한 2016학년도 수능

14 분배 정의 : 노직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최초의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移轉)이 잇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온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면,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는다.'가 된다.

- ①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인가?
- ②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가?
- ③ 나의 천부적 재능은 공동 자산이 아니라 나의 소유인가?
- ④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는 오직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가?

● 현자의 돌 평

기존에는 '분배 윤리' 사상가들의 입장을 개별적으로 공부했지만,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중심으로 정의 윤리(형벌, 사회, 분배)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다.

제시문 분석 : 사실적 이해 > 꼼꼼한 해설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제시문은 노직의 소유권적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은 (1) 소유물에 대한 취득 및 양도의 절차가 정당하다면, 그 결과도 정당하다. (2) 하지만 강탈과 같은 부당한 소유물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부당함을 교정해야 결과를 정당하게 만들 수 있다. (3) 즉, 분배의 원칙이란 정당한 범위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제시문은 (1) 정당하게 취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교환, 이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정당한 취득은 소유권을 보장한다. (2)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자가 약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최소 국가는 교정의 원리에 따라 그러한 침해(= 부당한 강제 이전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3) '소유권적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을 개인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정답 해설

④ 일반적으로 ④ 선지가 틀린 이유를 '롤스의 주장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제시문은 노직의 입장이므로, 왜 노직이 ④ 선지에 대해서 부정의 대답을 할지 밝히는 것이 올바른 해설이다.

먼저 노직의 입장에서 '우연성을 배제한 상태'를 탐구해보자. 노직은 취득과 양도의 과정이 정의롭게 이뤄졌다면, 그 결과가 공정하다고 보는 자유주의 철학자이다. 이때, 노직은 개인들이 지닌 타고난 능력과 재산 등의 우연적 요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득과 양도의 과정만 절차에 따라 정의롭게 행해졌다면, 우연성은 불행일 수는 있으나 불공정하지는 않다.

이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3번 문항의 노직 제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갑 :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유일한 근거로 한다. 정당한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하는 절차의 규칙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사실이 불행일 수는 있으나 불공정하지는 않다.

노직의 입장에서 우연성은 배제되어야 할 속성이 아니다. 이제 노직의 입장에서 '계약'을 살펴보자.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을 가정해, 모든 우연성을 배제함으로써 공정한 정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상적 계약 상황을 가정했다. 노직은 오히려 롤스가 그러한 원초적 입장을 설정하여 국가가 빈자를 위해 부자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한다.¹³⁵⁾ 국가가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빈자를 돕는 재분배 정책은 부자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우연성을 배제한 계약 상태를 가정하는 것¹³⁶⁾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논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직은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를 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틀렸다.

또한, 노직의 계약은 롤스의 원초적 상황에서 이뤄지는 계약과 다르다. 노직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물을 취득,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노직의 계약은 그러한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이다.(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든지) 노직은 개인이 시장적 거래에서 타인과 맺은 취득 및 양도 계약을 지키는 것을 의무로 보았다. 혹은 노직의 계약은 최소국가가 행하는 치안과 같은 재산과 생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요컨대, 노직의 계약은 현실상의 계약으로, 롤스의 가상적 계약과는 다르다. 따라서 ④는 틀렸다.

135) 롤스는 부자의 재산권을 정의의 원칙으로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으로 보지 않았다.
136) 롤스는 우연성을 배제한 계약 상태를 가정하여, 부자에게 세금을 걷고 그것을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재분배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는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본질적인 권리인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노직

“노직으로 대표되는 ‘자유 지상주의’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올바른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국가는 재화나 거래자의 안전 보장, 부정한 계약의 감시 등과 같은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¹³⁷⁾

“노직은, 강압,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 집행 등이라는 좁은 기능들에 제한된 최소국가는 정당화되며,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특정의 것들을 하도록 강제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고 (하략)”¹³⁸⁾

개인들이 맺은 계약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직이 말하는 계약이 ‘무지의 상황에서의 계약’이 아닌 현실상의 시장경제적 계약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노직은 최소 국가를 지향했다. 최소 국가란 개인의 재산과 생명, 계약의 보호와 같은 역할¹³⁹⁾만을 하는 국가다. 만약 국가가 최소 국가를 넘어서, 복지 등을 하려고 한다면, 세금을 걷어야 한다. 노직은 그러한 세금을 정당한 소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의한 것으로 보았다.
- ② 노직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은 온전히 개인의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개인이 노동을 통해 얻은 재화는 정당하게 그 사람의 것이다. (소유권적 정의론) 그런데 국가가 이를 침해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 소유권 침해분(가져간 돈, 세금)만큼을 강제 노동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선지 ④의 해설에서도 볼 수 있듯, 노직은 개인이 타고난 능력은 그 개인의 소유라고 보았다.
- ⑤ 노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즉, 소득 이전, 재분배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소득 이전은 오로지 개인의 자유에 맡겨 의무가 아닌 자선으로써 행해져야 할 것이다.

더 알아보기 (교과서 Base 개념 기본 & 심화 칼럼)

1) 공리주의에 대한 롤스의 비판 그리고 롤스에 미친 칸트의 영향

이 칼럼에서는 주로 공리주의에 대한 롤스의 비판과 칸트의 인간성 정식이 롤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¹⁴⁰⁾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무엇보다 사회의 이득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찾는 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의 이득을 나누는 분배 방식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¹⁴¹⁾ 이러한 공리주의의 입장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희생으로 이어지기 쉽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희생과 같은 부정의함에 대해 비판한다. 롤스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공리주의를 중시하는 사회는 절대 정의로울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그에게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구조¹⁴²⁾가 공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공정한 기본 구조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상황속에서 공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 원칙에 따라 기본 구조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 결과는 공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롤스가 말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이다. 선택에서 공정한 상황과 공정한 절차가 결국 공정한,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정한 상황과 절차란 무엇일까? 여기서 롤스는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다. 원초적 상황이란 가상적 상황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무지의 베일을 쓴 상황이다. 무지의 베일을 쓴 개인들은 자신의 타고난 신분, 능력, 취향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공정한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정의의 원칙’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한다. 무지의 베일을 썼다고 그 개인들이 백지와 같이 무지

하다는 말은 아니다. 롤스는 인간이 기본적인 이성 능력과 정의감과 선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도덕 능력을 지녔다고 보았다. 그러한 인간이 자신의 타고난 상황을 모름으로써 편협한 선입견과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롤스가 말하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정의에도 부합된다. 순수한 절차적 정의란 “게임이나 추첨에서처럼 공정한 절차를 따르면 그 결과도 공정한”¹⁴³⁾ 것을 말한다. 롤스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설정을 통하여 ‘순수성’을 확보했다. 따라서 롤스의 입장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 결과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에 따른 분배 결과이므로 (분배의) “내용과 상관없이 정의로운 것”이다.¹⁴⁴⁾

이제 롤스에게 미친 칸트의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자. 롤스는 정의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은 자유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를 1원칙으로 가장 먼저 제시한다. 왜냐하면 롤스는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평등한 협력관계로 인식”¹⁴⁵⁾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의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롤스의 생각은 칸트의 인간성 정칙과도 이어진다.

수능특강 20p

인간성 정칙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란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지닌 자율적 존재임을 존중, 인정’하고 그것을 해치지 않는 것(소극적 목적)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는 롤스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 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롤스의 정의관은 ‘개인의 이성과 자율’을 존중하는 칸트적 인간 존엄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롤스의 정의관에 대한 의미를 칸트의 입장과 연결해보는 것도 롤스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칸트 의무의 분류 with 노직 & 롤스¹⁴⁶⁾

	완전 의무	불완전 의무
나	자살 금지	타고난 소질 계발
타인	해악 금지 <노직이 강조>	타인 구제 ¹⁴⁷⁾ <롤스가 강조>

137) 천재교육, P.155

138) 교학사, P.184

139) 노직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은 ‘세금’ 이라기보다 ‘보호 계약 비용’으로 생각했다.

140) 분배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는 롤스이다. 그래서 노직보다 롤스를 먼저 본다.

141) 이양수, 『정의로운 삶의 조건』, 김영사, 2014. 2판 2쇄, P.106

142) 사회제도(e.g. 헌법), 경제 구조(e.g. 분배 방식) 등

143) 비상교육 교과서, P.177

144) 존 롤스, 『정의론』, 이학사, 2015, P.368

145) 데이비드 존스톤, 『정의의 역사』, 부글, 2011, P.317

146) 박찬구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정초』 읽기』, 세창미디어, 2014 P.101, 타인에 대한 의무는 약간 수정함, < >에 있는 노직, 롤스 강조 부분은 저자가 맥락상 연관을 위해 임의로 첨가함.

147) 참고 : “타인의 목적들을 촉진시키고자 진력해야 한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B69

• 롤스가 개인의 능력/노력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Q. 롤스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찬성하니까 능력과 노력, 업적에 따른 분배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A. 롤스는 특정 정치, 경제 체제만을 지지하지 않았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여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체제를 추구한다. 그것은 복지 자본주의가 될 수도 있고, 민주적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다.

롤스가 분배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오로지 '정의의 원칙'이다. 정의로운 분배란 원칙에 따른 분배, 즉 절차적 정의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부합하는 바이다.

능력/노력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능력주의'의 입장이며, 오히려 롤스는 능력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롤스의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은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롤스가 제기한 것이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최소 수혜자)는 능력이 적은 사람, 노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되어 분배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롤스는 능력의 발휘와 노력 또한 자신이 타고난 자연적 우연, 사회적 우연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남다른 지구력, 축구 지능 등 재능을 타고났고, 성실한 노력을 통해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를 누빈 박지성 선수를 생각해보자. 박지성 선수는 그러한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수십억의 이익과 사회적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그것은 박지성 선수가 타고난 재능과 그러한 재능을 대우하는 사회에서 태어난 자연적-사회적(역사적) 우연의 영향이 크다. 만약 박지성 선수가 조선 시대 때 태어났어도 그런 재능과 노력이 현재와 같은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을까? 두개의 심장으로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을지도 모른다. 즉, 박지성 선수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20C에 태어난 것은 순전히 자연적 행운 덕분이다. 따라서 그러한 행운은 순전히 박지성 선수만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롤스는 박지성 선수의 재능과 능력은 사회 전체의 공동 소유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국가는 박지성 선수의 이익 중 일부를 그와 달리 사회적 우연성을 잘못 만나 최소 수혜자가 된 사람들에게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나눠줘야 한다.

이를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고자 하는 차등의 원칙은,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 등과 같이 불평등한 원인으로 발생한 부당함을 재조정할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¹⁴⁸⁾

이를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입과 재산, 기회의 분배는 자기 자신의 공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요소들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분배의 기준은 임의적 요소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된다.”

“롤스는 소득과 재산의 분배에서 도덕적 우연성을 배제한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크 학생이 지지하는 능력주의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도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을 누르고 과분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노력에 대해서 롤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정직하게 노력하는 어떤 사람의 근성과 노동 윤리조차도 얼마나 좋은 집안 태생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것은 자기 노력의 결과는 아니다.”

“공헌을 말할 때도 중요한 것은 사회가 어떤 자질을 높게 평가하는가?”입니다.¹⁴⁹⁾

이는 롤스 전공 철학 박사 홍성우 교수님의 저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다.

“롤스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왜냐하면 소득과 부의 분배가 개인능력과 재능의 자연적 분배에 의해 결정되는 한, 그것은 적어도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차별이나 계급 등의 사회적 우연성과 마찬가지로 자의적인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능력과 재능은 일종의 자연적 행운(Natural lottery)에 속하는 것이므로 (TJ, 73~74), 그것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자의적인 것이 된다. 그리하여 만일 소득과 부의 분배에서 개인의 능력과 재능에 기초한 분배가 허용된다면, 그것은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도 있다.’ 식의 업적주의적 사회를 결과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TJ, 83~84).”

“그리하여 롤스는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사회적 행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적 자산의 분배에 의하여 소득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규정하여 업적주의적 사회의 출현을 봉쇄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그 자체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 자연적 행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어떤 원칙(즉, 차등의 원칙)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TJ, 74)”¹⁵⁰

이는 롤스도 저서에서 말하는 바이다.

“어느 누구도 타고난 자질 때문에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는 이익)를 누릴 만한 값어치는 없다는 것이 숙고된 판단들의 확고한 쟁점의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¹⁵¹⁾

Q. 롤스가 정의의 제 1원칙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에 소유권(재산권)도 포함되는가?

A. 부자의 과도한 재산권은 제 1원칙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적 자유(= 기본권)가 아니다.

롤스는 인간이 도덕적이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개인적 재산을 기본권으로 본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히 부자들의 소유물(예: 공장)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과도한 재산권은 제 2원칙인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침해될 수 있다. 이는 정당한 것이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서 1원칙은 2원칙에 항상 우선한다. 만약 롤스가 부자들의 소유권을 1원칙으로 보호하려고 했다면, 2원칙인 차등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걷어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반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롤스는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세금을 걷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즉, 소유권은 제1 원칙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귀류법)¹⁵²⁾

• 노직은 능력과 업적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가?

아니다. 노직 또한 롤스와 유사하게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 사상가이다. 우선 노직이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유권적 정의에서 말하는 원칙들’이다. 노직은 개인이 취득, 양도, 교정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정당하게 재화를 취득한다면, 그 이후의 과정에서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분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148)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P.184

149) 마이클 샌델, 위 책, 『8회 능력주의에 정의는 없는가?』, PP.243-266

150) 홍성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윤리학』, P.251

151)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P.103-104(원서)

152) 홍성우 위 책 PP.264-269 참조

예를 들어서 당신이 친구에게 아무 이유 없이 100만 원을 양도했다고 해보자. 당신이 정당하게 취득한 돈을 친구에게 준 것이라면 노직에게 이것은 정당한 양도다. 친구가 100만원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친구의 노력이나 능력, 업적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당신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노직에게 분배의 기준이란 ‘능력과 업적’이라기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분배 + 소유권적 정의론(취득, 양도, 교정의 정의의 원리) + 절차적 정의’이다.

“노직으로 대표되는 ‘자유 지상주의’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올바른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국가는 재화나 거래자의 안전 보장, 부정한 계약의 감시 등과 같은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¹⁵³⁾

“절차적 정의를 제시한 자유지상주의에 따르면,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여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다.”¹⁵⁴⁾

승안지의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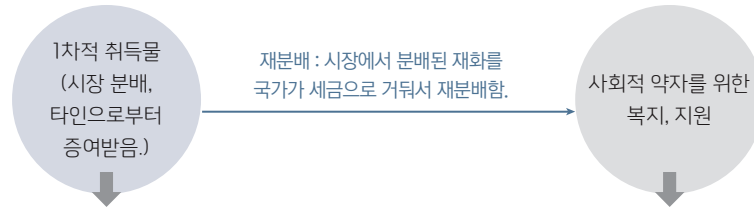
고난도 주제, 제대로 접근하기

● 분배 정의 윤리 정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 정의	공리주의 분배 정의	마르크스 분배 정의
분배의 대상	권력, 명예, 재화(물질적)	물질적 재화(돈)	물질적 재화(돈)
분배의 원리	<p>“각자에게 그 몫을” 사회 구성원이 지닌 가치에 따라서 분배되는 것이 정의롭다. (기하학적 비례)</p> <p>“함정 조심” 아래 두 개와 아리의 분배적 정의와 혼동하면 안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정의: 준법 • 교정적 정의: 사형제에 대해서 쓰는 것 <p>→ 산술적 비례, 응보적 정의</p>	<p>공리의 원리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분배된 재화의 총합이 클수록 정의롭다.</p> <p>예) 사회 구성원이 A, B밖에 없을 때</p> <p>Case ① A : 100원, B : 50원 Case ② A : 90원, B : 60원 Case ①과 Case ②에서 재화의 총합이 같으므로 두 경우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차이가 없다.</p> <p>Case ③ A : 1,000원, B : 50원 Case ④ A : 800원, B : 200원 Case ③ 1050원 > Case ④ 1000원 공리주의는 Case ③이 더 정의롭다고 본다.</p>	<p>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 여기서 말하는 필요는 인간의 기본적 필요, 실질적인 필요를 말한다. 물론 인간은 각자 필요한 것이 다르겠지만 (누구는 차가, 누구는 밥이)</p> <p>마르크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에서의 기본적인, 실질적인 필요는 모든 인간이 같다고 취급한다. 따라서, 그 같은 필요를 평등하게 채워주는 것을 마르크스는 정의롭게 본다.</p> <p>Case ① A : 100원, B : 80원 Case ② A : 70원, B : 70원</p> <p>평등한 정도 Case ① < Case ② 따라서 Case ②가 정의로움. → 유일하게 결과적 평등을 추구한다.</p>

● **분배 : 분배의 전체 과정, '분배의 정의'에서의 분배**

• 노직과 롤즈의 분배 정의



	노직	롤즈
1차적 취득물에 대한 견해	노직은 1차적 취득물이 취득, 양도, 교정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일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보았다.	롤즈는 1차적 취득물은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 우연에 좌우되므로, 정의로운 분배과정에서는 재분배를 통해 그러한 우연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분배의 주체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름.	
분배 원리	취득, 양도, 교정의 정의에 따른 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정의)	롤즈는 정의의 원칙을 분배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정의의 원칙에 따른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이다. (절차적 정의)
분배 과정	먼저, 개인은 재화를 정당하게 취득해야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받은 사람은 능력 및 노력과 상관없이 양도 받은 재화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다. 하지만 '소매치기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번 경우는 정당한가? 분명 그것은 소매치기범이 '능력'과 '노력'을 통해 번 돈이다. 하지만 취득과 양도의 정의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번 돈이 아니므로, 그런 잘못된 강탈은 최소 국가가 '교정'한다.	
재분배에 대한 견해	재분배를 위한 세금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을 지니며, 올바른 재화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정의의 원칙인 2-a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1차적 취득물에서 우연으로 얻은 분량 만큼을 세금으로 제하고, 그 세금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 *롤즈는 소유권을 제1원칙에서 말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부자의 소유권은 세금으로써 침해 가능하다.
국가관	최소 국가 → 오로지 경찰(절도, 사기, 강압으로부터의 보호), 계약의 집행 등에 관여하는 최소 국가 → 재분배 정책 반대 * 당연히 노직은 차등 분배, 결과적 불평등을 옹호한다.	복지 국가 → 국가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재분배 정책 찬성 *롤즈는 결과적 평등 ×, 차등 분배 ○ → 대신, 이러한 차등 분배는 일부가 고소득을 올림으로써, 최소수혜자의 최대이익이 보장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 의사 소득 up이 인정되는 경우 → 국민 의료 수준 up → 최소 수혜자 이익 up

개정 교육과정으로 재해석한 2016학년도 수능

15 환경 윤리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p>갑 : 동물을 확대하는 행위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둔화시키고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p> <p>을 : 동물, 식물, 토양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 그것이 자연이다. 사슴이 참나무 외에도 백여 종의 식물을 먹는 것처럼 먹이 사슬의 여러 고리로 연결된 자연은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이다.</p> <p>병 : 동식물은 고유의 선을 갖는 실체이다. 이러한 관점을 지닌 합리적 인격체들은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취하고, 동식물을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 ① A : 쾌고감수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인가?
- ② B : 인간은 자연 전체에 대해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니는가?
- ③ B :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이 개별 생명체의 존속보다 중요한가?
- ④ C : 무생물이라도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 ⑤ D : 인간과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동등한가?

● 현자의 돌 평

환경 윤리는 매년 수능과 평가원 시험마다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된다. 하지만 작년 수능 문항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쉬웠다. 올해 시험들에서는 다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며, 따라서 반드시 환경 윤리를 꼼꼼하게 공부해야 한다.

(갑)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갑은 인간중심주의 칸트다. 제시문은 (1) 동물 학대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둔화시키고, (2)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킨다. (3) 따라서 동물 학대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갑)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칸트는 제시문에서 (1)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둔화시키며, (2)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칸트에 대한 많은 오해 중 한 가지는 칸트가 공감, 동정심 등의 감정을 싫어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칸트는 그러한 감정들이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 동정심 + 타인을 도우려는 의무감에 따라 도덕적인 행동을 함.). (3) 따라서 동물 학대를 하지 않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연적 소질들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의무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을)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을은 생태중심주의 레오폴드다. 제시문은 (1) 자연의 에너지는 동식물, 토양을 회로로 삼아 흐른다. (2) 먹이 사슬과 같이 자연은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을)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제시문은 (1) 동식물과 같은 생명체와 ‘토양’과 같은 무생물을 모두 자연의 에너지가 흐르는 회로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무생물까지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자연을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여긴다는 것은 생물이든, 물, 흙, 공기와 같은 무생물이든, 자연이라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시문이 ‘생태주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병) 제시문의 사실적 이해

병은 생명 중심주의 테일러다. 제시문은 (1) 동식물은 고유한 선을 갖는다. (2) 합리적 인격체는 이런 관점으로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 (3) 또한 동식물이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병)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제시문은 (1) 동식물이 ‘고유한 선’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때, 말하는 ‘고유한 선’이란 ‘고유한 목적’을 말한다. 이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제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선(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란 모든 생명체는 각자 고유한 목적을 지닌 삶의 중심이라는 의미이다. ‘고유한 선’이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선(善)이라는 의미이다.

(2) 모든 생명체를 ‘고유한 선을 지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인간(= 합리적 인격체)들은 모든 생명체를 동등하게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다. (3) 또한 모든 존재가 ‘고유한(= 내재한) 목적, 선’을 가진 존재이므로 모든 존재는 ‘내재적 존엄성,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인정할 것이다.

정답 해설

① 이 선지는 A : 갑만 긍정, 을과 병은 부정해야 참인 질문이다.

여기서 ‘쾌고감수능력’이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척추동물을 비롯해 대부분의 고등 동물들은 이 능력이 있다. ‘동물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말은 동물의 Interest¹⁵⁵⁾를 고려한다는 의미로써, 동물의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켜준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A는 B를 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란 B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서 A (쾌고감수능력)만으로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A는 B를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란 B를 하기 위해서 A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A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조건을 말한다.

갑은 인간이 동물을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 이유는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함이 아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인간에 대한 직접 의무)를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즉, 인간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직접 의무를 지키기 위한 간접적인 이유에서이다. (= 동물에 대한 간접 의무)

수능특강 20p

인간성 정식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을은 인간이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녔다고 본다. 따라서 ‘동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동물이 쾌고 감수능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다. 을은 동물을 동식물, 무생물이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자연의 일부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을은 ‘쾌고감수능력’을 지니지 못한 하등동물 또한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쾌고감수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조건이 아니다.

병도 인간이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녔다고 본다. 따라서 ‘동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병도 ‘쾌고감수능력’을 동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조건으로 꼽지 않는다. 병은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고유한 목적을 지닌, 고유한 선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병에게 ‘쾌고감수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조건이 아니다.

즉, ① 선지는 갑, 을, 병 모두 부정할 질문이므로, 틀린 선지이다.

오답 해설

② 이 선지는 B : 갑은 상관없고, 을은 긍정, 병은 부정해야 하는 질문이다.

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의 대상인 인간에 대해서만, 병은 고유한 선,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생명체’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한편, 을은 자연을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 보며, 인간이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② 선지는 을은 긍정하고 병은 부정할 질문이므로, 옳은 선지이다.

③ 이 선지도 B : 갑은 상관없고, 을은 긍정, 병은 부정해야 하는 질문이다.

을은 자연 전체를 그 안의 개별적 생명체보다 중요하게 여기므로,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을 개체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병(테일러)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병은 생명 공동체(집단적)보다 ‘고유한 선’을 지닌 개별 생명체(개체적)¹⁵⁶⁾의 존속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③ 선지는 을은 긍정하고 병은 부정할 질문이므로, 옳은 선지이다.

한편, 갑은 인간이라는 개별적 존재의 존속을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④ 이 선지는 C : 을만 동의하면 갑과 병의 의견은 상관없는 질문이다.

을은 제시문에서 '토양'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도덕 공동체의 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④ 선지는 을이 동의할 질문이므로, 옳은 선지이다.

한편, 갑(인간만)과 병(생명만)은 무생물을 도덕 공동체(도덕적 고려 대상의 공동체)의 범위로 포함하지 않는다.

⑤ D는 갑과 을은 상관없고, 병만 동의하면 옳은 질문이다.

병은 '인간, 동물,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녔고, 그 점에 대해서는 동등한 존재로 본다. 따라서 ⑤ 선지는 을과 병이 동의할 질문이므로, 옳은 선지이다. 한편, 갑은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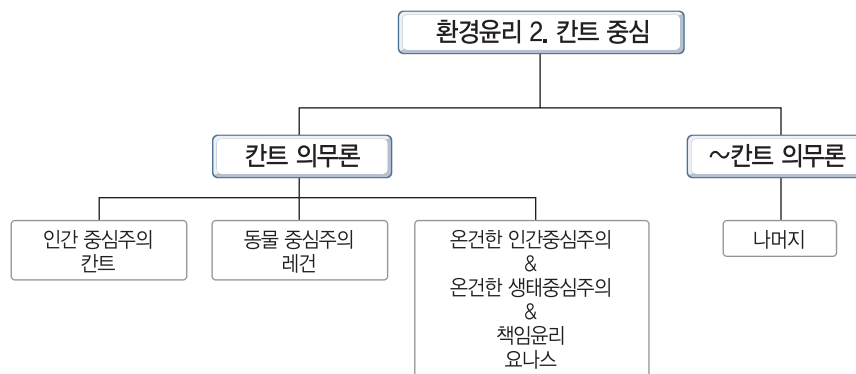
한편, 을은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지녔고,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는 점에서는 동등한 존재로 본다.

칸트 : 식물은 내재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¹⁵⁷⁾

더 알아보기 (교과서 Base 개념 기본 & 심화 칼럼)

1) 기본 개념 정리 → 심화, 심화, 심화 칼럼 + 정리

환경윤리는 학자들이 다양하고, 개념의 양도 많다. 이 책에서는 칸트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 윤리 개념을 일부 정리하겠다.¹⁵⁸⁾



① 칸트

먼저 칸트(갑)는 인간성 정식을 도덕 법칙, 의무로 생각했다.

수능특강 20p

인간성 정식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위 제시문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는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하라는 의무를 말한다. 칸트는 동식물과 무생물을 인간이 도덕적

155) 비상예뉘 P.122 “이익관심(interest) : 어떤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 연장하고자 하는 욕구(생명체의 존속과 번성 능력)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토끼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익 관심이 있으며, 장미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날카로운 가시를 만드는 데 이익 관심이 있다.”

156) 개체론 : 개별 생명체들의 존중에 초점을 맞추는 환경 윤리 이론,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 / 전일론 : 전체로서의 자연환경, 종과 생태계의 보전에 초점을 맞추는 환경 윤리 이론, 생태 중심주의

157) 2015학년도 수능 14번 D선지

158) 지면 분량 상 설명하지 못한 환경윤리 학자, 사상은 다음 책이나 온라인 칼럼을 통해서 정리하겠다.

으로 배려할 때는 오로지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하는 의무를 이루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칸트는 인간이 직접 의무(인간에 대한)와 간접의무(동식물, 무생물 대한)를 지닌다며 의무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

• 관련 교과서 서술

“칸트는 자유롭고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간만이 도덕의 주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 이외의 동물은 이성적, 자율적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결여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가질 뿐이다. 우리가 동물을 잔인하게 대할수록 인간을 대할 때도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¹⁵⁹⁾

• 관련 기출 제시문

인간은 자연을 고려해야 하는 간접적 의무를 갖는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의 동정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¹⁶⁰⁾

이성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그리고 자연 중에 생명이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려는 성향도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¹⁶¹⁾

우리는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다른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¹⁶²⁾

• 관련 기출 선지

칸트는 인간을 위해 생태계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¹⁶³⁾

칸트는 식물을 보존하는 것이 간접적인 의무로 성립 가능하다고 본다.¹⁶⁴⁾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¹⁶⁵⁾

교과서, 기출에 나온 칸트의 입장은 칸트가 쓴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생명을 지니고 있지만 이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왜냐하면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우리의 감정을 무디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의 도덕성을 크게 기여하는 자연적 기질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점차 사라져버리게 하기 때문이다.”¹⁶⁶⁾

“동물에 관한 한 우리는 어떠한 직접적인 의무도 없다. 동물들은 자의식적이지 않으며, 목적에 대한 단순한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그 목적은 인간이다.”

“동물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는 단지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이다. 동물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유사하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표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간접적으로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행한다. (중략)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가 더 이상 쓸모없기 때문에 총을 쏘아 죽인다면, 그는 그 개가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비인간적이며, 다른 인간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는 인간성을 스스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면 동물에게 잔인한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역시 잔인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해 자비롭게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동물을 다루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다.”¹⁶⁷⁾

칸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칸트와 같은 인간중심주의 윤리는 자연을 수단으로 인식하는 도구적 자연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을 인간의 이익과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중략) 인간 중심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성적 능력을 소유한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이기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¹⁶⁸⁾

물론 칸트가 인간만을 목적으로 생각하여 인간 존엄성 실현에 초점을 맞춘 ‘인간중심주의’적 환경 윤리관을 가진 것은 맞다. 하지만 칸트는 오로지 인간의 의무인 ‘도덕 법칙’에 알맞게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무분별한 자연 착취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칸트의 의무론적 입장은 동물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닌다. 이는 칸트의 의무론적 입장을 이어받은 레건(동물 중심주의), 요나스(온건한 생태 중심주의 +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 책임 윤리)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② 레건¹⁶⁹⁾

칸트는 인간만이 이성을 지녔으며, 그 자체로 목적인 존재,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므로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다. 하지만 레건은 인간과 유사한 성질 (아래 박스에 서술된)을 갖는 동물들 또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고, 도덕적 지위와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한 동물이란 ‘삶의 주체(Subject of a life)’가 될 수 있는 고등 동물을 말한다.

“어떤 개체가 믿음과 욕망을 갖는다면, 지각과 기억과 자기 자신의 미래가 포함된 미래감을 갖는다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삶을 산다면, 선호와 복지와 관련된 이익을 갖는다면, 자신의 욕구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시작할 능력이 있다면, 심리적인 동일성을 갖는다면, 자신의 경험하는 삶이 다른 존재의 유용성과는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잘 살거나 못 산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¹⁷⁰⁾

• 관련 교과서 서술

의무론의 입장에서 동물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성장한 포유동물도 도덕적 주체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냥감이나 놀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레건에 따르면, 정상적인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그러나 다른 포유동물은 기쁨과 통증을 느끼는 감정적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희망과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 무능력자(Moral patients)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¹⁷¹⁾

159) 비상예듀 P.120

160) 2014학년도 6월 16번

161) 2015학년도 9월 7번

162) 2015학년도 수능 14번

163) 2014학년도 6월 16번 ① 선지

164) 2015학년도 9월 7번 ② 선지

165) 2015학년도 수능 14번 ㄷ 선지

166) 박찬구 위 책, PP.278-279 // I. Kant, Metaphysik der sitten A52

167) 『윤리학과 그 응용』 중 『칸트와 환경윤리』, 김학택, PP.358-360 // I.Kant, Lectures on Ethics PP.239-240

168) 비상교육 P.120

169) 레건은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추가된 ‘동물 중심주의’ 학자이다. 레건은 칸트의 의무론의 영향을 받은 학자로 윤리적 직접 고려의 범위를 인간에서 동물까지 확장했다.

170) 레건 『동물권 옹호』 2판(2004), P.243 ; 최훈 등 5인, 『동물 실험 윤리』, 로도스, P.113 재인용

171) 비상예듀 P.122

동물도 삶의 주체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레건은 의무론에 근거하여 동물 권리론을 주장하며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도출한다. 그는 ‘삶의 주체’를 단순히 살아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행위자로 본다. 동물도 하나의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¹⁷²⁾

레건은 동물 권리론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욕구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동물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동물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는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므로 동물들은 그 고유한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를 지닌다. 바로 이점 때문에 인간의 동물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레건은 실험, 매매, 사냥, 식용화, 애완 등 동물에 대한 행위들을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비판한다. 그가 이러한 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동물 복지나 동물의 고통을 고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레건에 의하면 동물 실험을 통해 지식이 진보하고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해도 동물들이 지닌 본래적 가치를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된다.¹⁷³⁾

• 관련 기출 제시문

어떤 개체가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갖고,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을 갖는다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¹⁷⁴⁾

③ 요나스

요나스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적 입장과 온건한 생태 중심주의적 입장, 그리고 책임 윤리의 입장을 모두 가진 학자이다.

우선,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을 갖는 것은 인간이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존속, 이익을 위해서 생태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인간중심주의적 학자들과 달리, 요나스는 자연(생태)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며, 자연이 그 자체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인간이 생태계를 직접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온건한 생태 주의적 입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과학이 갖는 힘과 이것이 모든 생명의 터전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학기술 대한 반성적 성찰을 강조한다.

그의 윤리는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명제에서 잘 나타난다. 이 의미는, 현대인의 윤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과거적 책임)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일(미래적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윤리의 범위를 현세대의 인류에서 미래 세대의 인류, 자연 전체에까지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요나스의 정언명법은 칸트의 정언명법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라’를 현대의 책임 윤리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이를 생태학적 정언명법이라고 부른다.

• 관련 수능특강 서술

- ① 과학 기술이 인간 자신의 생존과 여타 생명체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과 여타 생명체들을 보존해야 하는 것은 인간에게 요청되는 긴박한 책임이며,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되고 기꺼이 선택해야 하는 책임일 수밖에 없다.
- ②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생명에게 이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지향적인 책임의 윤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의 책임, 즉 우리에게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책임 대상에 대한 배려와 그 대상이 처할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는 책임을 요구한다.¹⁷⁵⁾

• 관련 교과서 서술

“요나스가 책임 윤리에서 말하는 책임의 특징은 인과적(因果的)인 ‘과거 책임’을 넘어서는 당위적인 ‘미래 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미래 책임’이 미래에 저야 할 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래를 고려하는 현재의 책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미래 책임’ 이어야만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문제에 대처하여 자연과 미래 세대에 책임을 지는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생존이 지구와 그 미래를 돌보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구상에서 참된 인간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책임의 정언 명법을 제시하였다.”¹⁷⁶⁾

“요나스가 책임 윤리에서 말하는 책임의 특징은 인과적(因果的)인 ‘과거 책임’을 넘어서는 당위적인 ‘미래 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미래 책임’이 미래에 저야 할 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래를 고려하는 현재의 책임을 뜻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미래 책임’ 이어야만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문제에 대처하여 자연과 미래 세대에 책임을 지는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생존이 지구와 그 미래를 돌보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너의 행위의 결과가 지구상에서 참된 인간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책임의 정언 명법을 제시하였다.”¹⁷⁶⁾

“요나스는 과거 지향적인 인과적 책임보다는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해 책임지는 ‘미래를 위한 책임 윤리’에 주안점을 둔다. (중략) 요나스는 전통 윤리가 인간 행위의 새로운 조건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네 행위의 결과가 인간의 진정한 삶과 영원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 하라.”라는 책임의 명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그리고 자연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⁷⁷⁾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이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책임 윤리를 제창한 사람은 요나스이다. 그는 기존의 윤리가 인간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미래, 즉 인류의 존속이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비판하며 과학 기술의 발달과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와의 간극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전통 윤리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로서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요나스는 인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보면서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자체로 책임을 저야만 한다는 의무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인류의 존속이라는 무조건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제시한다.”¹⁷⁸⁾

“독일 철학자 요나스는 과학 기술 시대에 책임 윤리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하는 기존의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과학 기술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우리에게 과학 기술이 인간의 생존과 다른 생명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명체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모든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한다.

172) 미래엔 P.123

173) 교학사 P.127

174)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10번 문항

175) 2016 수능특강 P.25

176) 교학사 P.44

177) 비상교육 P.41

178) 미래엔 P.41

특히 요나스는 행동하기 전에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 ‘예견적 책임’을 강조한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먼 미래에 끼치게 될 결과를 예측하여 생명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 기술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보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왜 보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¹⁷⁹⁾

• 관련 기출 제시문

프로메테우스는 과학을 통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부여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났지만, 그는 자신의 힘이 불행을 자초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해야 한다.¹⁸⁰⁾

심학자의 꿈

개정 교육과정으로 재해석한 2016학년도 수능

1 윤리학의 분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짓말은 나쁘니까?’와 같은 도덕 문제에 답하려면 관련된 문제들에 답해야 한다. 어떤 학자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유용성, 정언명령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다른 학자들은 ‘나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금지, 혐오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답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 ㉠’와 같은 물음에 답하는 윤리학의 분야가 필요하다.

- 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인가?
- ② ‘거짓말은 나쁘니까 사소한 거짓말도 나쁘다.’라는 추론이 타당한가?
- ③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신념이 지역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 ④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의 논리적 구조는 무엇인가?
- ⑤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이 언론 유리에 위배되는가?

● 현자의 돌 평

1단원의 ‘윤리학의 분류’를 묻는 문항이다. 아주 전형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다. 뒤 페이지의 ‘더 알아보기’에서 윤리학의 분류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제시문 분석: 사실적 이해 > 꼼꼼한 해설

제시문의 꼼꼼한 해설

제시문은 ‘거짓말’이라는 윤리적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나쁜가(악)?’라는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윤리학들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를 ‘유용성’, ‘정언명령’을 통해서 답을 제시하는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 둘째, ‘나쁘다’라는 윤리학적 용어의 의미를 묻는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연구 과제로 삼는다.

그런데 제시문에서는 이 두 가지 윤리학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그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 같은 물음에 대답하는 윤리학의 분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번 : ㉠은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주는 윤리학의 분야가 답할 수 있는 물음이다. 그런데 ㉡의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이므로, ㉠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다. 참고로 이러한 윤리학은 ‘실천 규범 윤리학(응용 윤리학)’이다.

오답 해설

㉠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는 첫 번째 윤리학인 ‘이론 규범 윤리학’이 답할 수 있는 문항이다.

㉡ 현실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맥락이 없으므로 ㉡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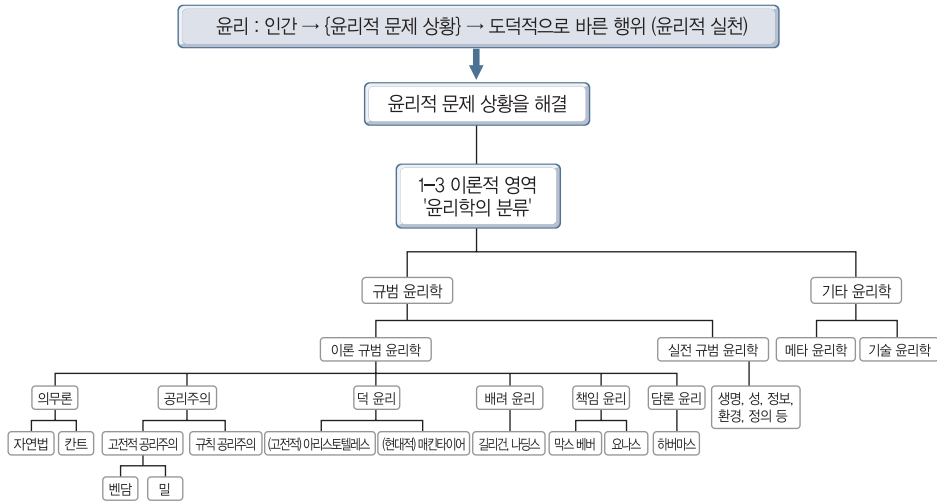
이 선지에서 주의할 것은 이 선지가 묻는 것이 ‘사소한 거짓말은 정말 나쁜 것인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은 삼단 논법을 통한 도덕적 추론. (예. ‘대전제 : 거짓말은 나쁘다, 소전제 : 사소한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결론 : 따라서 사소한 거짓말도 나쁘다.’와 같은 윤리적 추론 과정이 타당한지를 묻는 것이다. 이는 주로 메타 윤리학이 답하는 질문이다.

㉢ 해당 선지는 어떠한 도덕적 신념이 지역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묻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에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이는 가치 판단이라기보다 사실 판단, 사실(fact)의 문제로서 위 제시문에 제시된 3가지의 윤리학이 아닌 기술(서술) 윤리학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 해당 선지는 선의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윤리적 문제 상황(도덕적 딜레마)이 지닌 ‘논리적 구조’를 물어보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닌 그러한 도덕 문제가 지닌 논리적인 구조를 묻는 것이므로 ㉣ 선지에 들어갈 수 없다. 해당 선지의 질문은 메타 윤리학이 답하곤 하는 질문이다.

더 알아보기 (교과서 Base 개념 기본 & 심화 칼럼)

1) 윤리학의 분류 Master 칼럼



이론 규범 윤리학

이론규범 윤리학은 고대부터 논의되어온 전통적인 윤리학이다. 이론규범 윤리학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타 윤리학(이론적인 윤리학)

이론 윤리학의 작업을 명료하게 도와준 것이 20C에 등장한 메타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논리와 추론 규칙들을 연구함으로써 보편적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과정은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응용 규범 윤리학(실천 윤리학)

1960년대 이후 인류는 현실 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도덕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의 출현을 갈망하였다. 고전적 윤리 이론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와 폭발적으로 발전한 과학 기술들에 대응하여,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요나스(H.Jonas)는 이러한 상황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명명하며 새로운 윤리학의 출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응용규범 윤리학은 그러한 소망에 부응하는 윤리학으로서 오늘날의 현실적인 윤리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제공한다.

• 응용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의 관계

- ① 응용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은 모두 규범 윤리학으로서 ‘도덕적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참고) 메타 윤리학은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아닌 도덕적 행위를 선택한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
- ② 이론 규범 윤리학은 실천 규범 윤리학(응용 윤리학)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응용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을 현실의 윤리적 문제에 적용한다.
- ③ “응용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접근법이다.”¹⁸¹⁾

• 이론 규범, 응용 규범, 메타 윤리학의 관계

① 시대적 등장 순서 : 이론 규범(19C 이전) → 메타(20C 초, 중반) → 실천 규범(20C 중·후반)

② 논리적 순서 : 메타 → 이론 규범(이론 규범은 메타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 실천 규범(실천 규범은 메타, 이론 규범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개정 교육과정으로 재해석한 2016학년도 수능

3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유전자 조작의 허용에 대한 논쟁에서 그동안 간과한 것은, 치료 목적이 아닌 의도적인 유전자 개입이 인간을 도구화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입니다. 기계를 마음대로 조작하듯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렇게 통제되어 태어날 인격체는 다른 자율적 인격체와 달리 원초적으로 동등하지 못한 채로 공론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우생학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 ① 유전자 조작의 문제점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②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을 위한 도구적인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③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은 잠재적 담론자의 평등을 제한한다.
- ④ 적극적 우생학은 인간관계를 기계적 인과관계로 왜곡시킨다.
- ⑤ 적극적 우생학을 위한 연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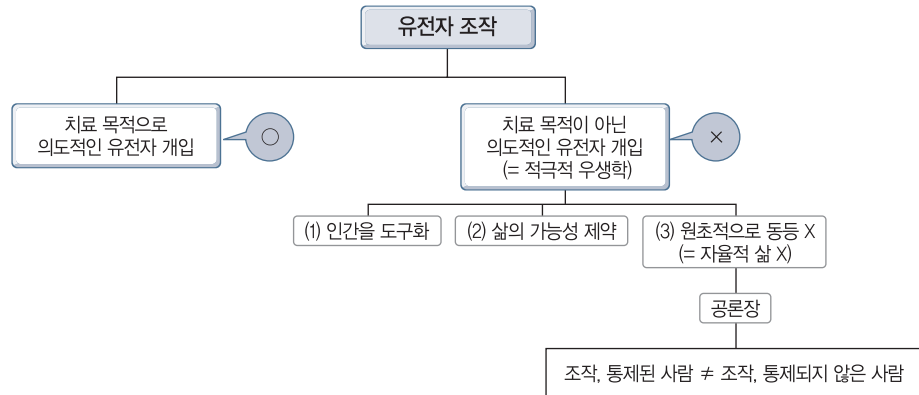
● 현자의 돌 평

이 문항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해당 문항에는 ‘공론장’, ‘담론’과 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심의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개념들이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의 비중이 작았다. 하지만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3단원 :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둘째, 이 문항은 하버마스의 입으로 ‘2-2단원 : 생명 과학과 윤리 4. 생명 복제와 유전자 조작의 윤리적 쟁점’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루어 짐작했을 때, 1단원에서 강화된 이론 윤리학자들이 2~6 단원의 실천 윤리(생명 윤리 등) 부분과 통합되어 출제될 수 있다. 앞으로 실천 윤리 부분을 공부할 때, 1-3단원의 윤리학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또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제시문 구조화



정답 해설

② 제시문에서는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선지는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을 ‘위할’ 것을 주장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오답 해설

- ①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적극적 우생학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 ③ 제시문에 따르면 의도적인 유전자 개입은 인간을 도구화하며 삶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그 결과 공론장에 참여하는 잠재적 담론자로서의 ‘유전자 조작 인간’의 평등은 제한된 것이다.
- ④ 적극적 우생학은 치료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을 말한다. 이는 인간을 특정 목적(지능 강화 등)을 수행하도록 통제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이다. 인간을 도구화한다는 것으로부터 인간관계를 기계적 인과관계로 왜곡시킨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이다.
- ⑤ 제시문에 따르면 적극적 우생학 즉, 치료 외 의도인 유전자 개입은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선지이다.

• 용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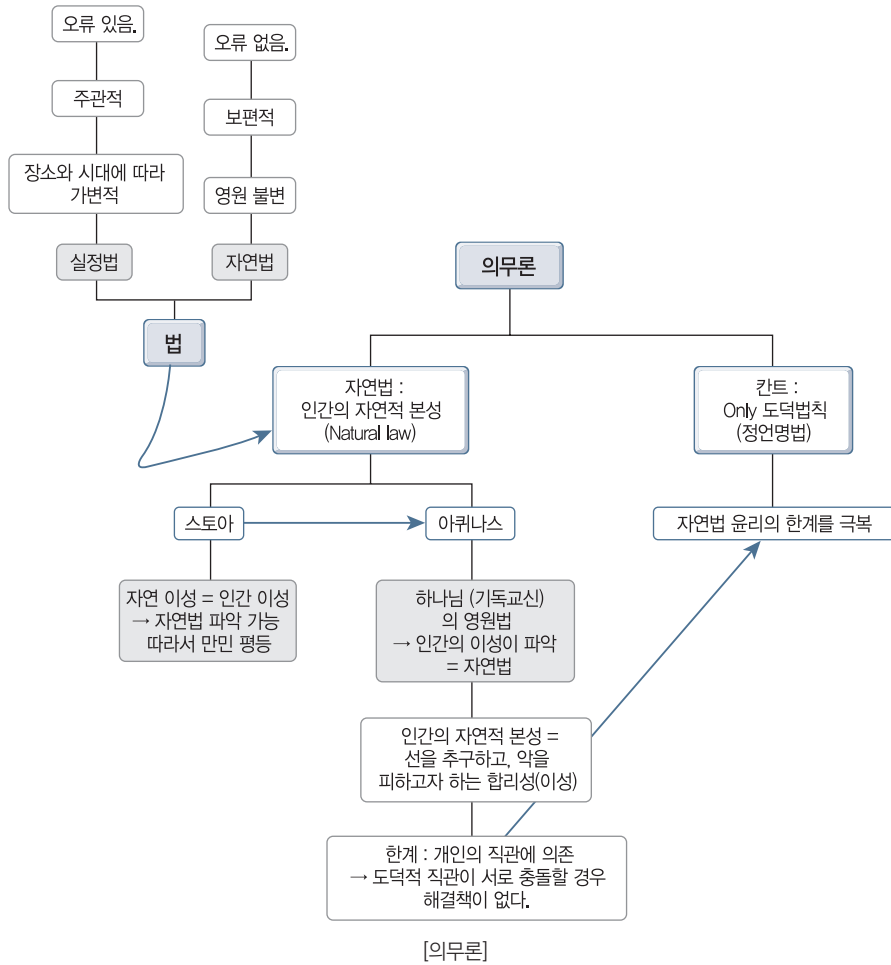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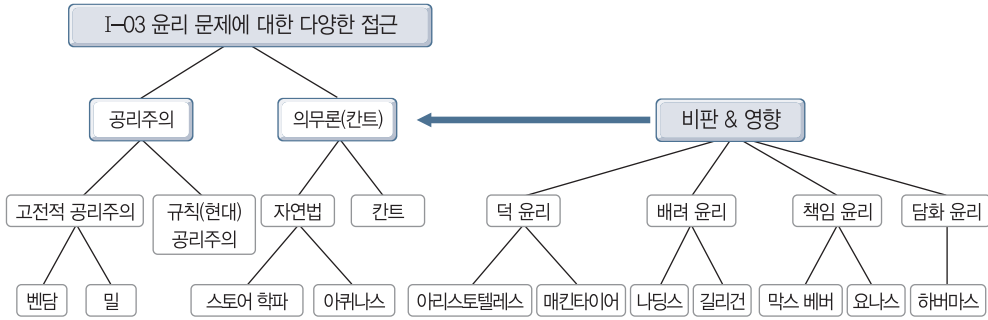
②의 ‘도구적 합리성’이란 ‘성찰적 합리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합리성을 말한다. 예컨대, 아파트 건축을 하는 데 필요한 자재의 수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합리성은 도구적 합리성이다. 반면, ‘성찰적 이성’이란 윤리적 상황까지 깊게 고려하여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도구적 합리성’은 가치중립적인 단어이다. 성찰적 합리성을 갖춘 사람이 도구적 합리성을 사용한다면, 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비윤리적인 사람이 도구적 합리성만을 휘두른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컨대, 나치에 협력해 유대인 학살을 도운 많은 독일인은 자신들이 가진 성찰적 합리성을 발휘하지 않고, 단순히 도구적 합리성만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교과서 Base 개념 기본 & 심화 칼럼)

1)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 ‘의무론’

아래의 윤리학 사상들은 생활과 윤리 전체 개념의 이론적 근거이다. 이번 ‘더 알아보기’에서는 미래엔 개정 교과서의 학습목표에 근거하여, 의무론의 개념들을 학습해보자.¹⁸²⁾



의무론적 접근

• 교과서의 학습목표

- ① 칸트 윤리와 자연법 윤리를 중심으로 의무론적 접근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② 의무론적 접근을 윤리적 의사 결정 절차에 적용할 수 있다.

의무론

의무론이란 행위의 옳고 그름이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행위가 의무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로 산출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 학습목표 : 의무론 중 자연법 윤리의 내용을 알아보자.

2) 개정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 자연법 윤리에 대한 코멘트

칸트와 마찬가지로 자연법 윤리 또한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의무론적 윤리설’에 칸트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이다. 자연법 윤리는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 만큼 4종 교과서와 기타 참고 서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본부터 심화적인 내용까지 정리하는 칼럼을 쓰려고 한다. 이 칼럼을 통해 자연법 윤리의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머릿속에 구조적으로 정리해 두기 바란다.

• 자연법의 의미

자연법 : “바꿀 수 있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실정법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칙.”¹⁸²⁾

자연법이란 인간의 본성을 ‘이성’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성)이 자연 법칙(이성)인 자연법과 일치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선한 것으로, 어긋나는 것을 악한 것으로 보았다.

스토아학파의 자연법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는 자연(우주)은 이성(Logos)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스토아학파는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칭했다. 또한 스토아학파는 인간은 이성을 본성으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이성이 같은 종류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파악할 수 있다. 스토아학파의 자연법 사상은 ‘세상의 유일한 법칙이자 절대적이고 영원불변한 법칙인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을 지닌 모든 인간은 자연법 앞에 동등하다는 만민 평등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경향 등에 영향을 주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① 개념

중세 시대 기독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토아학파의 이성주의, 자연법 사상을 이어받았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이 신적 이성을 통해 세계에 질서를 부여했다고 보았다. 그러한 질서는 신의 영원한 법칙, ‘영원법’을 통해 만들어진다.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이 영원법을 인간의 내면에 넣어 주었다고 보았다. 그에게 자연법이란 인간 내면의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 불완전하게나마 인식한 것을 지칭한 것이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자연법이 영원법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 너무나도 자명한 말이다.

182) 이미 공리주의와 책임윤리를 19번 사형제, 15번 환경윤리 문항을 통해 서술하였다. 그 외 다른 이론 윤리학들은 지면 분량 상 다음 책이나 블로그 온라인 칼럼을 통해서 서술하겠다.

183) 천재교육 P.30 핵심 용어

② 특성 (자연법 = 인간의 본성(선을 추구하는 이성)에 근거)

새로 개정된 교과서에서 자연법 사상은 스토아학파의 내용 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과서에 소개된 아퀴나스의 자연법의 특성들을 살펴보자.

우선,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제 1법칙으로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명령을 제시했다. 그 이유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이성’이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합리적 본성,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성을 통해 파악한 자연법은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것과 공동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아퀴나스는 이러한 자연법으로부터 ‘네 이웃을 사랑하라’, ‘타인을 해치지 말라’ 등의 윤리 규범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이처럼 자연법으로부터 윤리적 실천 원칙들, 국가의 법 등이 도출된다고 보았으며, 자연법과 그것들 간의 조화를 추구했다.

“자연법 윤리에서는 어떤 행위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어긋나는지를 검토한다. (중략)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으로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을 제시하였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자신과 자기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과 이성적 존재로서 진리를 파악하려는 성향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는 자연적 성향이라는 것이다.”¹⁸⁴⁾

“아퀴나스는 인간이 공유하는 본성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예컨대 인간은 생명을 보존하려는 본성이 있는데..... (중략) 그리고 인간에게는 사회성이라는 본성이 있다..... (중략) 또한 인간에게는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¹⁸⁵⁾

③ 교과서가 제시한 아퀴나스의 ‘인간의 본성’ 정리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
생명을 보존하려는 본성 → 살인, 자살, 낙태 × : 생명 윤리에서 자연법 사상은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려고 함. (주의) 아퀴나스 : 사형제는 찬성함.	사회성 → 절도, 비방, 거짓말, 집단 따돌림 ×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 → 학문, 언론, 사상, 종교의 자유 침해 ×

• 실정법 (인간의 법 (예. 형법, 민법 등))은 항상 자연법과 이성에 근거해야 한다.

법은 인간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합리성(이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이성에 근거하지 않는 법은 정당한 법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자연법, 인간의 이성과 맞지 않는 실정법은 잘못된 법이며,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고, 권력에 대한 저항권 개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연법 이론에 의하면 국가의 실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한 자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¹⁸⁶⁾
 ⇒ 세계인권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학습목표 : 자연법 윤리적 접근을 윤리적 의사 결정 절차에 적용할 수 있다.

④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선택은?

도덕적 문제 상황이 선을 추구하는 이성에 따르는 것만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편할까? 하지만 문제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수많은 윤리적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윤리적 딜레마적 상황이란 좋은 결과를 달성하려고 할 때, 동시에 나쁜 결과가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한다. 예컨대, 유명한 전차의 딜레마(트롤리 딜레마)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전차의 기관사이고 지금 전차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저 앞 다섯 명의 인부가 철로에 서있다. 속도가 빨라 브레이크를 잡아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오른쪽에 비상철로가 눈에 보인다. 그곳에도 인부가 한 명 작업하고 있다. 당신은 불과 몇 분의 일 초안에 철로를 바꿀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¹⁸⁷⁾

이 상황에서 당신은 5명의 목숨과 1명의 목숨을 선택해야 한다. 그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저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아퀴나스의 관점을 생각해보기 전에 생활과 윤리 교과서(비상교육 P.34)가 제시하고 있는 딜레마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퀴나스의 두 가지 원칙을 살펴보고 가자.

⑤ 딜레마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퀴나스의 두 가지 원칙

딜레마 상황에서의 판단들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윤리학 이론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본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 정도면 충분하다.

상실의 원칙(Principle of forfeiture)

• 비상교육 34p

상실의 원칙에 따르면 예컨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의 생명권이 상실되는 것은 허용된다. 상실의 원칙은 자기 방어뿐 아니라 전쟁이나 사형을 정당화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중 결과의 원칙(Principle of double effect)

이중 결과의 원칙이란, 윤리적 판단 및 행동을 한 후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 판단과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칙이다. 나쁜 결과가 불가피한 딜레마 상황에서 선택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선택, 행위가 4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조건 1] 행동(Act)은 선한 행동이거나 도덕과 무관한 행위만 허용된다.

[조건 2] 나쁜 결과를 의도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는 안 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조건 3] 의도(Intend)는 항상 선해야 한다. 즉, 나쁜 결과를 의도해서는 안 된다. 나쁜 결과가 허용되는 경우는 오로지 그 나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를 의도한 것이 아닌 경우만 허용된다. 나쁜 결과는 오로지 부수적인 피해여야만 한다.

[조건 4] 좋은 결과 ≥ 나쁜 결과 : 좋은 결과는 적어도 나쁜 결과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184) 미래엔 P.32

185) 비상교육 P.34

186) 비상교육 P.34

187) 마이클 셸델 『정의란 무엇인가』

• 적용

Case ① 임신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한 여성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낙태를 하는 경우

- 행동 : 낙태 → 의도 :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태아를 죽임.
⇒ 나쁜 결과 : 태아를 죽임 / 좋은 결과 : 여성의 생명을 구함.
- 분석 : 낙태는 나쁜 행동이다. : [조건 1] 위배
태아를 죽이는 나쁜 결과를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달성한다. : [조건 2] 위배
태아를 죽이려는 의도는 악한 의도이다. : [조건 3] 위배

따라서 case ①은 아퀴나스가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Case ② 결핵 치료를 위해서 임신부가 약을 복용해서 불가피하게 낙태하게 되는 경우

- 행동 : 결핵약 복용 → 의도 : 결핵 치료
⇒ 나쁜 결과 : 태아를 죽임 / 좋은 결과 : 임신부의 목숨을 구함.
- 분석 : 결핵약 복용한 것은 좋은 행동이거나 도덕과 무관한 행위이다. : [조건 1] 만족
태아가 죽어서 산모가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다. : [조건 2] 만족
결핵을 치료하는 것은 인간의 목숨을 구하는 행위이므로 좋은 의도이다. : [조건 3] 만족
산모의 목숨은 적어도 태아의 목숨과 동등하다. : [조건 4] 만족

Case ③ 트롤리 딜레마

다시 위의 트롤리 딜레마로 돌아가 보자. 전차를 탄 당신은 5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것이 희생이 더 적은 쪽이라고 생각하여 선로를 바꾸는 선택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신의 선택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특히 당신의 행위는 [조건 2] ‘나쁜 결과를 의도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한다. 전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어 1명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나쁜 결과를 의도적으로 수단으로 사용) 5명의 목숨을 살리는 것(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퀴나스가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행위이다. 또한, [조건 3]을 위반하기도 한다. 1명을 직접 죽이는 것은 나쁜 결과인데 당신은 이것을 의도했다.

이렇게 딜레마 상황에서 아퀴나스의 판단을 살펴봤다. 이런 활동은 교과서의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3) 자연법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 장점

“자연법 윤리는 도덕적 직관을 통한 일상적인 도덕 판단의 원리와 과정을 잘 설명해준다.”¹⁸⁸⁾

자연법 윤리는 인간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자연법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며, 이성의 판단은 자연법에 근거한 것이고, 그러한 자연법은 신의 법인 영원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성을 활용해서 직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위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자연법, 영원법에 따른 것이므로)

• 단점

“그러지만, 직관에 따른 도덕 판단이 사람들 간에 서로 다를 때 이를 해결할 적절한 방안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¹⁸⁹⁾

그런데 도덕적 직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아퀴나스는 카톨릭의 입장에서 결혼은 인간이 번식의 본성을 갖고 있기에 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생식기능을 상실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두 대립하는 윤리적 직관 중 어느 것이 선한 것인가?

인간의 내면적 이성, 직관에 의존하는 ‘자연법 윤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해결을 주지 못한다. 자연법 윤리는 도덕적 직관에 의한 판단들이 서로 대립할 때 무엇이 옳은지 제 3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다음 칼럼에서 배울 칸트의 윤리설이 바로 이러한 자연법의 한계를 극복한 윤리설이다.

188) 천재교육 P.30

189) 천재교육 P.30

칼럼4 칸트 의무론

● 의무론 : 칸트 윤리를 중심으로 (개정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1) 칸트 윤리학의 기본

교과서(미래엔, 교학사, 비상)들은 칸트의 의무론을 설명하기 위해 행위 공리주의(결과론) 윤리설과 비교를 하곤 한다. 수능에서도 공리주의와 칸트 의무론을 비교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된다. 두 윤리설 간의 차이점, 논쟁이 되는 쟁점들을 논리적으로 파악해보자.

먼저 행위 공리주의 윤리설은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는 윤리설이다. 반면 칸트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왜 그 행위를 하였는지, 즉 행위의 동기를 강조하는 윤리론이다. 예컨대, 엠마 왓슨이 제 3세계(아프리카, 남미 등)의 가난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UN에서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때, Case ① 엠마 왓슨이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인기도 확보하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경우와 Case ②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해서 선행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Case	Case A	Case B
항목		
동기	동정심 + 인기 획득	의무감
행동	제 3세계 여성, 아이들 지원	제 3세계 여성, 아이들 지원
결과	제 3세계 여성, 아이들 복리 증진	제 3세계 여성, 아이들 복리 증진

이때, 두 Case의 결과는 동일하다. 따라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Case A와 Case B는 도덕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행위이다.

하지만 두 Case는 동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칸트 의무론의 경우, Case B는 ‘의무감’에 의해서 제 3세계의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며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이다. 하지만 Case A는 동정심에 따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이익(인기)을 얻기 위해서 행한 행위였으므로, 도덕적 가치는 없다. 이처럼 행위 결과를 강조하는 공리주의와는 달리 칸트의 의무론은 특정 행위가 가져온 결과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순수하게 ‘동기(특히 의무감)’만을 가지고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한다.

이때, 칸트가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동기(의무)란 ‘도덕 법칙’을 의무로서 따르고자 하는 의지(선의지)를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칸트가 말하는 의무로서의 도덕 법칙이란 무엇일까?

다시 위의 엠마 왓슨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저 사례에서 재미있는 것은 칸트는 Case A와 Case B에서의 같은 행동(선행)을 모두 Good, 좋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Case A	Case B
좋음 (The good)	○	○
옳음 (The right)	×	○

이처럼 칸트의 의무론은 선함, 좋음(The good)과 옳음(The right)을 구분하고 있다. 좋은 것과 옳은 것은 다르다. 좋다고 옳은 것도 아니며 옳은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올 때도 있다. 어째서일까?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직관(이성)을 도덕의 근거로 삼은 자연법 윤리와는 달리, 칸트는 도덕의 근거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적용되는 항구적이고 불변의 도덕 법칙이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좋음이 아닌 옳음을 도덕의 근본 가치로 삼았다. (한편, 좋음이란 개개인의 자연적 경향성(욕구)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가진다.)

“칸트는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보편화 가능한 도덕 법칙에 근거한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⁹⁰⁾

자연법 윤리와 칸트 윤리의 차이를 조금 더 쉽게 예를 통해서 이해해보자. 자연법 윤리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생명 보존을 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 또한 자연법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칸트에게는 그런 인간의 본능과 감정적인 부분은 도덕 법칙과 별개의 것이었다. 그런 본능과 감정적인 부분은 자연적 경향성 즉 비이성적 존재를 지배하는 원리로 보았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다. 인간은 본능적 욕구(경향성)만을 따르는 존재가 아닌 이성과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율적 존재이다.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도덕적 행위자이므로 스스로 행위의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준칙)을 보편적인 도덕법칙과 일치시켜 행동한다. 그렇다면, 칸트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은 어떠한 것일까?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모두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 법칙을 도출하는 과정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 (이전 교과서에는 없던 추가된 내용) 따라서 다음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 학습목표 : 칸트의 윤리적 접근을 윤리적 의사 결정 절차에 적용할 수 있다.

2)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보편적 도덕 법칙이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과정

① 정언명법의 의미

칸트는 도덕 법칙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리 올바른 도덕 법칙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만이 윤리적, 도덕적 행위라면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도덕 법칙을 미리 알고, 그에 맞춰서 행동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물음과 관련해 칸트는 인간이 ㉠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연적 경향성(욕구)에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의 개인적 행위 규칙(준칙, 격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선의지’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적 행위 규칙(준칙, 격률)이 정말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 법칙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고(이성의 역할), 도덕법칙에 자신의 준칙을 일치시켜 행동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고(선의지의 역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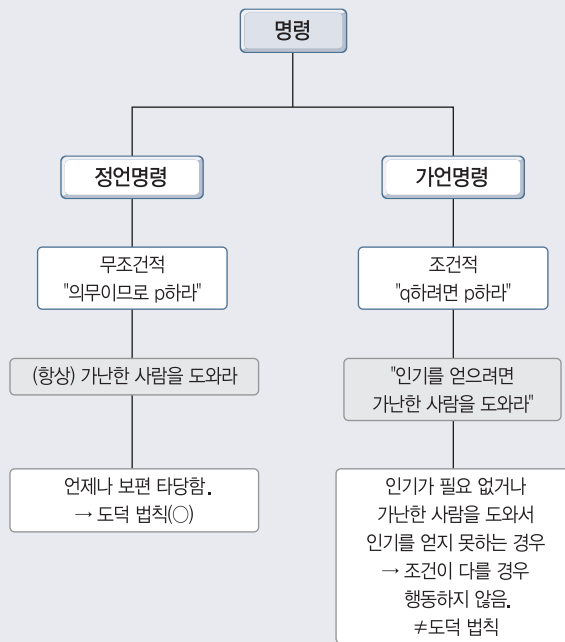
이때, 준칙 (= 격률)이란 개인이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는 규칙, 원칙을 말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매일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과다한 체중을 감량하여 건강해지기 위해서였다면, ‘식단 조절’은 ‘건강’이라는 욕구에 따른 행위이다. 이때 이 사람의 행위 준칙(격률)은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자”일 것이다. 하지만 저체중인 사람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단 조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 준칙을 적용할 수 없다. 즉, 개인의 준칙(행위 원칙)이란 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리일 수는 있으나, 항상 타인에게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주관적일 수 있는 개인의 행위 규칙(준칙, 격률)을 도덕적인 법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칸트는 개인의 행위 준칙이 도덕 법칙으로 합당한가를 검토할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행위 준칙이 ‘정언명령’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다. 위에서 준칙을 보편화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준칙이 특정 목적(건강 유지 방법) 즉, 조건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준칙이 특정인에게 한정되는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아니면, 그 준칙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어떨까? 그때는 그 준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그 준칙은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조건) 없이도 그 준칙 자체로 목적적 성격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이때, 그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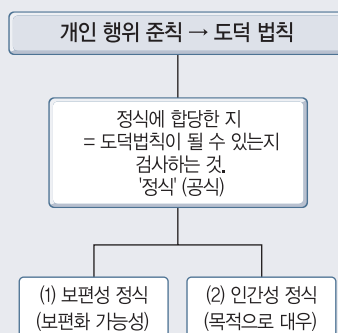
“정언명령이란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선(善)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도덕적 명령이다. 도덕 법칙은 정언명령으로 표현된다. 이와 달리 가언명령은 어떤 조건이 붙는 명령이다. “만약 네가 A를 원한다면 너는 B를 행해야 한다.”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며 이는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¹⁹¹⁾

정언명령이란, ‘타인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무조건 지켜야 할 도덕 규칙을 말한다. 이 경우, 살인 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이다. 한편, 가언명령이란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조건)에 따른 명령을 말한다. 이 경우, 살인을 하지 말라는 명령은 ‘교도소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수단(= 가언명령)이 된다. (위의 “건강을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자.”라는 준칙 또한 가언적 성격을 지닌다.)



② 도덕 법칙에 합당한 정언명법의 형식

칸트는 ‘도덕 법칙으로서의 정언명법’의 형식을 제시했다. 그것이 바로 ‘보편화 정식’과 ‘인간성 정식’이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 내용은 어렵지 않다. 칸트에 따르면 개인이 행위 준칙을 세우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이성’이 그 준칙이 도덕 법칙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의식적, 무의식적). 밑의 두 가지 형식은 개인의 행위 준칙을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이다.



보편화 정식(Formula of Universal law)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여기서 ‘너의 의지의 준칙’이란 개인이 행동의 규칙으로 세운 것을 말한다. 한편 ‘보편적 법칙’이란 모든 사람이 행동의 규칙으로 따를 수 있는 것 즉, 도덕 법칙을 말한다. 따라서 보편화 정식의 의미는 “너의 행동의 규칙을 보편적인 도덕 법칙과 일치시켜라”라는 말이다.

거짓말과 도둑질의 사례에 보편화 정식을 적용하여 특정 행위 준칙이 보편화될 가능성을 지녔는지 검토해보자.

먼저, 내가 “내가 불리한 경우 약속을 어겨도 된다.”(= 거짓말)라는 행위 준칙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때, 이 행위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의 시도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불리한 경우 약속을 어겨도 된다.”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편의에 따라 약속을 어기곤 한다면, 그 누구도 약속을 신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약속이 무의미해져서 약속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약속을 어김으로써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최초의 준칙은 보편화될 경우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곧 모순이다. 따라서, 거짓말 준칙은 보편화 될 수 없는 도덕적으로 그른(악한) 것이다(= 비도덕적인 것).¹⁹²⁾

두 번째로, 내가 “정직하게 일하기보다, 도둑질을 하겠다.”라는 행위 준칙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때, 이 행위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의 시도는 “모든 사람은 정직하게 일하기보다 도둑질한다.”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일하지 않고, 타인의 것을 도둑질한다면, 결국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서 생산된 재화가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도둑질을 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최초의 준칙이 보편화될 경우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곧 모순이다. 따라서 도둑질 준칙은 보편화될 수 없는 도덕적으로 그른(악한) 것이다.¹⁹³⁾

인간성 정식(Formula of Humanity)

19번 사형제 해설의 앞 뒤 부분에서 반복해서 설명한 것이므로 생략한다. *생각의 힘*

191) 미래엔 P.30

192) 박찬구, 『우리들의 윤리학』, 서광사, 개정판 1쇄 2014, P.130

193) 박찬구, 『우리들의 윤리학』, 서광사, 개정판 1쇄 2014, P.130

송인자의 품

동양의정신